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합의이슈정치와 유권자의 선택:

2012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이슈경쟁과 이슈소비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송진미

합의이슈정치와 유권자의 선택:

2012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이슈경쟁과 이슈소비

지도교수 박 원 호

이 논문을 정치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송 진 미

송진미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강 원 택



부위원장 박 원 호



위 원 안 도 경



위 원 한 규 섭

(인)

위 원 장 승 진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왜 후보들이 공약 경쟁을 하는지, 그리고 선거에서 이슈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 합의이슈(valence issue)와 이슈소유(issue ownership) 관점에서 최근의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이슈가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18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과 같은 합의이슈가 현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들은 공약 경쟁을 통해 합의이슈의 선점을 시도했으며, 유권자들은 후보의 소속 정당과 공약을 고려해 후보의 이슈선점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후보의 이슈선점을 평가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합의이슈 모형을 통해 유권자의 주관적 이슈중요도와 후보의 이슈선점 평가가 결합해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기존 이슈투표 연구들이 공간모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슈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합의이슈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간모형은 후보와 유권자의 정책 입장이 진보-보수 사이의 위치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유권자가 자신의 위치와 후보의 위치를 비교해 본인과 가장 가깝거나 방향이 같은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 중에는 입장을 나누기 어려운 이슈들이 있으며, 정책의 수단보다는 목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이슈들이 있다. 최근 선거에서는 이러한 합의이슈가 부각되었으며, 공간모형은 합의이슈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의이슈 분석을 위한 새로운 투표 모형을 제시하고, 제18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상으로 합의이슈 투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18대, 제19대 대선에서 모두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부패 척결과 같은 합의이슈가 뚜렷하게 두드러졌으며, 후보들도 이러한 이슈들을 선점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거에 따라 특별히 주목받는 이슈가 있었는데, 제18대 대선의 경우 경제민주화가 부각되었다. 후보의 이슈선점 시도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 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이슈를 선점했고, 문재인 후보는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경제성장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다른 정당 지지자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후보가 선점한 이슈에 대해 정당일체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리고 제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부패 척결, 복지 정책,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정당일체감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었을 때, 무당파 유권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슈 선점이 명확했던 경제성장과 정치개혁 이슈중요도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진보 정당이 소유해 온 복지정책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으며,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9대 대선의 경우 제18대 대선과 비슷한 이슈들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부패 척결이 매우 현저한 이슈였다. 주요 후보 중 문재인 후보가 부패 척결을 선점했으며, 일자리 창출도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후보는 경제성장과 안보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슈선점에 적극적이었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슈 선점을 평가할 때 본인의 이슈중요도에 근거해 평가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선점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러한 투사 효과가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일어났다.

제19대 대선에서 정당일체감은 이슈중요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권자는 본인의 이슈 선호를 지지 정당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슈선점 평가와 유권자의 이슈중요도는 서로 결합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론 조사 자료를 통해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통일/안보, 부패 척결 등 다양한 합의이슈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당일체감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

했을 때, 제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정당 지지자들은 지지 정당 후보가 선점한 이슈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제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제19대 대선에서 부패 척결이 특별히 두드러졌던 이슈였다는 것은 선거의 맥락과 상황이 유권자의 이슈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민주화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배경이 되었으며, 부패 척결의 경우 박근혜 탄핵이 원인이 되었다.

정당일체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합의이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은 합의이슈 중요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슈중요도는 다시 이슈선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슈선점 평가가 이슈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무당파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과 이슈에 대한 정당의 성과를 고려해 이슈선점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 투표를 분석하기 위해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 평가를 결합한 ‘합의이슈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제18대, 제19대 대선에 적용했다. 분석 결과, 유권자들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해당 이슈를 선점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나 후보의 이슈선점이 명확한지, 즉 합의이슈에 대해 후보들이 얼마나 상대 후보와 본인을 차별화했는지에 따라 이슈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이러한 합의이슈의 영향력은 공간모형과 함께 분석했을 때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립이슈만을 분석할 경우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슈 경쟁과 이슈투표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합의이슈와 대립이슈가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받는 방식, 그리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기능하는 방식이 대립이슈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합의이슈에 대한 후보의 공약 경쟁과 유권자의 이슈 투표의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

은 모형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의 전략, 그리고 유권자가 정당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유권자가 합의이슈를 투표에 반영하는 과정을 연구 모형으로 설계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합의이슈, 이슈선점, 정당일체감, 대통령선거, 이슈투표, 선거공약
학 번 : 2014-30963

차 례

차 례	5
표 차례	8
그림 차례	9
제 1 장 서론	11
제 1 절 문제제기	11
제 2 절 논문의 구성	16
제 2 장 이론적 검토	19
제 1 절 합리적 개인과 이슈투표: 이슈투표 모형의 기본 전제	20
1.1 민주주의 정치체제	21
1.2 정당의 득표 극대화	23
1.3 합리적 유권자	24
제 2 절 공간모형의 비판적 검토	28
2.1 다운즈(Downs)의 투표 모형	28
2.2 대립이슈(position issue)와 공간모형(spatial model)	33
제 3 절 합의이슈모형	39
3.1 합의이슈(valence issue)	39
3.2 이슈소유(issue ownership)와 이슈선점, 이슈현저성(issue salience) 과 이슈중요도(issue importance)	43

3.3	이슈와 정당일체감: 설득, 투사	49
제 4 절	소결	55
제 3 장	연구 설계	57
제 1 절	연구 모형: 합의이슈 모형	57
1.1	정당의 전략	58
1.2	유권자의 선택	61
제 2 절	연구 모형: 정당일체감에 의한 투사, 설득	70
2.1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	71
2.2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	72
제 3 절	분석 자료 및 변수 조작화	75
3.1	분석 자료	75
3.2	변수 조작화	76
제 4 절	소결	83
제 4 장	합의이슈와 대통령선거 공약	86
제 1 절	제18대 대통령선거	87
1.1	대통령선거 공약 분석	87
1.2	선거 공약에 대한 유권자 반응	100
제 2 절	제19대 대통령선거	105
2.1	대통령선거 공약 분석	105
2.2	선거 공약에 대한 유권자 반응	120
제 3 절	소결	129
제 5 장	합의이슈와 정당일체감	132
제 1 절	제18대 대통령선거: 이슈중요도와 정당일체감	133
제 2 절	제19대 대통령선거	139
2.1	이슈중요도와 정당일체감	139
2.2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설득과 투사	142

제 3 절	제18대와 제19대 대통령선거 비교: 정당일체감의 장기적 영향 . .	148
제 4 절	소결	155
제 6 장	합의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159
제 1 절	제18대 대통령선거	160
1.1	합의이슈 모형	160
1.2	합의이슈 모형과 공간모형 분석	166
제 2 절	제19대 대통령선거	169
2.1	합의이슈 평가 모형	170
2.2	합의이슈 평가 모형과 공간모형 분석	175
제 3 절	소결	176
제 7 장	결론	178
참고 문헌		182
부록		194
Abstract		248

표 차례

3.1	합의이슈에 대한 후보의 이슈선점: 양당제의 경우	65
3.2	세 후보가 출마한 경우 유권자의 이슈선점 인지와 이슈평가점수 . .	68
3.3	정당일체감 변화에 따른 집단 구분	71
3.4	분석하는 설문 자료 목록	77
3.5	이슈선점 변수 조작화	80
3.6	주요 변수 기술통계	81
4.1	제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선거공보 내 선거공약	93
4.2	제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10대 공약	94
4.3	이슈중요도 평균: 제18대 대통령선거	101
4.4	후보별 이슈선점: 제18대 대통령선거	104
4.5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 10대 공약: 문재인, 홍준표 후보	110
4.6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 10대 공약: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 . .	111
4.7	안철수 후보 선거공보 속 선거공약	119
4.8	이슈중요도 평균: 제19대 대통령선거	121
4.9	제19대 대선 후보 지지자별 이슈중요도	122
4.10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의 이슈선점	124
5.1	정당일체감과 합의이슈 경로모형 분석 결과: 제18대 대통령선거 . . .	136
5.2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 경로 모형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	141

5.3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 설득과 투사 효과 경로모형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	146
5.4	부패척결 이슈선점에 대한 정당지지자별 평가	147
5.5	2012년과 2017년 지지정당	149
5.6	정당일체감 집단별 이슈중요도	150
5.7	정당일체감 집단별 후보 이슈선점 평균 점수	152
6.1	합의이슈 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18대 대통령선거	164
6.2	합의이슈와 대립이슈 통합 모형 회귀분석 결과: 제18대 대통령선거	167
6.3	이슈평가점수 예시	171
6.4	합의이슈 평가 모형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19대 대통령선거	173

그림 차례

3.1	설득과 투사 연구 모형	74
4.1	후보 지지자별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제18대 대통령 선거	103
4.2	후보 지지자별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제19대 대통령선거	123
5.1	제18대 대통령선거 합의이슈 중요도와 정당일체감 연구 모형	135
5.2	제19대 대통령선거 합의이슈 중요도와 정당일체감 연구 모형	140
5.3	제 19대 대통령선거 합의이슈에 대한 설득과 투사 연구 모형	143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적 모습이란 “선거에서 유권자의 수요에 맞춘 공약으로 후보들이 경쟁하면, 유권자가 이를 평가해 합리적으로 투표하고, 당선된 후보는 공약을 이행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현실정치가 이러한 이상에 가까울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발전한 것이 이슈투표 이론이다. 1970년대 투표행태 연구를 통한 이슈투표의 발흥(勃興)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써 환영받았다(Borre, 2001, 12쪽). “유권자들은 공약을 통해 경쟁하는 후보 중 가장 기대효용이 높은 후보에게 합리적으로 투표한다”는 전제하에 이슈투표 연구자들은 다양한 효용함수의 개발과 그 수정안을 제시하며 연구를 발전 시켜 왔다(Merrill III *et al.*, 1999).

하지만 정책투표에 대한 학자들의 노력¹⁾에도 불구하고 이후 투표행태 연구속 유권자의 모습은 합리적 유권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예컨대, 개인의 집단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이론들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에 큰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소속된, 혹은 애착이 있는 집단을 기준으로 투표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인종, 지역, 종교 등에 따라 본인과 같은 집단에 속한 인물에게 투

1) 예컨대, 보이드(Boyd, 1972), 브로디와 페이지(Brody and Page, 1972), 나이(Nie and Andersen, 1974; Nie *et al.*, 2001), 카마인스(Carmines and Stimson, 1980)의 연구가 있다.

표하거나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Achen and Bartels, 2017). 이러한 집단정체성에 기반을 둔 투표 중 대표적인 것이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에 근거한 투표이다.²⁾ 개인들이 어릴 때부터 정치사회화를 통해 특정 정당에 애착심을 형성하고, 이것이 투표를 비롯한 정치행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캠벨 등(Campbell *et al.*, 1980)의 주장은 지금까지 투표행태 연구의 가장 강력한 이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당일체감 투표 모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당을 통해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고 투표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데, 이러한 지지의 기반은 공약에 대한 평가가 아닌 어릴 때부터 형성된 애착심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의한 결정이다. 심지어 유권자들이 공약에 대해 갖는 생각이나 평가 역시 정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당일체감 모형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슈투표는 사실상 이상적 허구(虛構)에 가깝다.³⁾ 투표행태 연구의 역사 속에서 합리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는 이슈투표 모형은 정당일체감 모형과 같은 대안 모형들에 의해 비판받았고, 이러한 비판들은 이상적 대의민주주의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괴리되어 있다는 우울한 결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 기간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TV토론 등을 통해 본인의 공약을 강조하거나 서로의 공약을 비판하며 경쟁한다. 유권자들은 우편을 통해 공약집을 받아 보며, 언론 또한 공약 분석 기사를 실는다.⁴⁾ 선거 기간에는 다양한 장소와 매체에서 공약을 홍보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강원택 외, 2012; 정인태, 2010).⁵⁾

2) 한편, 1960년대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 이슈의 선호와 현저성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70년대에 정당일체감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이슈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Borre, 2001; Budge *et al.*, 2010).

3) 에이큰과 바텔스(Achen and Bartels, 2017)는 그들의 저서에서 이상적 민주주의 형태를 ‘통속이론(*folk theory*)’이라고 표현했다.

4) 예컨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②보육·노후 복지 ‘한뜻’(경향신문, 2017/04/28)”, “[공약 점검] ②부동산정책…후보 5人 모두 ‘서민 주거복지’에 무게(연합뉴스, 2017/05/02)”와 같은 연속 기획 기사가 있으며, 후보의 개별 공약을 분석한 “안철수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 청년 취업 보장제 공약(동아일보, 2017/04/12)”과 같은 기사가 있다.

5) 동아일보, 홍정수·황형준 기자, 2017/05/08, “120시간 뚜박이 유세 안철수 “청년 꿈꾸게 하

즉, 정체성에 근거한 투표행태 이론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 이슈를 제외하고 선거를 기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화두는 경제성장이었고(이재철, 2008),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했으며(강원택, 2013; 장승진, 2013), 2017년에는 탄핵과 부패 척결이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정희옥, 2018).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나 경제 회복 정책에 유권자들이 보였던 관심 역시 선거 때마다 주요하게 강조되는 이슈들이 있으며, 이것이 당시 유권자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⁶⁾ 시대에 따라 중요한 이슈가 다르고 그에 맞춰 후보들의 공약 또한 변화해 온 것이다. 경제성장이나 복지 확대와 같은 “스테디셀러”가 있는가 하면, 안전, 여성, 부패 척결과 같은 새로운 “베스트셀러”가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당의 공약은 유권자들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며, 유권자들이 공약을 평가하고 투표에 반영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의 유권자들의 수요와 정당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슈투표는 각 선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슈투표 연구는 이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당일체감, 세대, 계급, 혹은 지역주의와 같이 유권자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선거마다 변화하는 공약과 그에 대한 정당과 유권자의 반응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권자의 정체성은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의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당 지지의 구도 혹은 후보의 경쟁 구도 등은 선거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선거에서 정당 지지 구도와 후보의 경쟁 구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선거마다 조금씩 다른 이슈들이 부각되었다(강원택, 2012; 송진미, 2019; 황아란, 2014, 등). 유권자의 정체성은

는 정치... 국민의 직원 될 것”, 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2017/05/08, “5당 후보들, 지구 한 바퀴 넘게 돌았다...22일간 4만7천km 유세”.

6)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2020/04/08, “[총선 D-7] 코로나 19 대응 실효성 놓고 민주·통합당 연일 충돌”.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시각에서 유권자의 구성이나 정당 지지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각 선거의 특징이나 정책적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정책선거(혹은 정책 선거 연구)의 부재라는 문제 제기와도 연결된다.

이처럼 이슈투표 연구의 의의가 명확하고, 실제로 선거에서 공약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투표의 가능성에 관해 기존 연구는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보인다. 기존 연구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공약을 인지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하며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정당일체감 등 사회경제적/심리적 요인에 기반을 두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이슈투표로 보이는 현상들조차 심리적 기제에 의해 역으로 설득되거나 본인의 의견을 그대로 정당에 투영한 것에 의한 비합리적 결과라는 것이다(Achen and Bartels, 2017; Brody and Page, 1972). 언론에서도 공약을 분석한 기사들 한 편으로 공약 경쟁의 부재를 지적한다. 공약 없는 선거, 네거티브 선거 등 후보들 간 공약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기사를 실는 것이다.⁷⁾ 이상적인 이슈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유권자 본인의 정책적 선호도 분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 따르면 이슈 경쟁은 비용만 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과정이 된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이슈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후보들은 끊임없이 공약을 연구하고 상대 후보와 이슈 경쟁을 지속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공간모형(spatial model)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의이슈(valence issue) 개념을 통해 한국 선거를 분석함으로써 대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의 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근 선거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선거 분석에서 합의이슈를 고려했을 때 후보들의 다양한 선거전략을 포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선거 기간에 정당들이 주

7) 동아일보, 이재명·문병기·송찬욱 기자, 2017/05/05, “말로만 통합, 서로 할퀴는 후보들... 정책경쟁-협치 논의 실종”, 중앙일보, 2017/04/18, “쇼트트랙 대선 레이스... 대형 공약 없고, 검증 없는 네거티브는 가열”, JTBC, 서복현 기자, 2017/04/06, “‘정책’은 실종... ‘표심 자극’ 프레임만 이어지는 대선”.

어진 정치적 상황에 어떤 전략으로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의 이슈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이슈가 어떻게 투표에 반영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이 공약 경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대립이슈(position issue)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슈 투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이슈가 진보-보수로 이루어진 일차원 스펙트럼상에 위치 지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입장이 나뉘는 대립이슈(positional issue)의 전제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에는 시민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는 합의이슈(valence issue)가 있으며, 이는 대립이슈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이슈가 어떻게 부각되는지 따라 대립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합의이슈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경제 이슈는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이슈이지만, 어느 정도로 세금을 늘릴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립이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이슈의 대립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면서 한정된 시각 속에서 선거를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거에서 두드러지는 이슈들, 특히 합의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결정에 공약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과 2017년 대통령선거를 합의이슈의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 경쟁 방식과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이고, 여러 해에 걸쳐 수집한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역동적인 이슈투표의 모습을 그려낼 것이다. 합의이슈 틀 속에서 선거를 새롭게 바라보고 현실에 더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며, 이슈투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한국 선거에서의 이슈 경쟁과 이슈투표를 설명하고자 한다. 새로운 틀 속에서 이슈투표가 가능하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왜 후보들이 공약 경쟁을 하는지, 그리고 선거에서 이슈의 역할을 무엇인지 질문한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 ‘합의이슈(valence issue)’와 ‘이슈소유(issue ownership)’를 통해 최근의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선거에서의 이슈 영향력이 유효함을 보일 것이다. 새로운 개념과 모형을 통해서 이슈를 분석하면 다양한 이슈 경쟁의 모습을 담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후보가 이슈경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과 이론적 검토, 연구설계, 그리고 경험적 분석이다. 경험적 분석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뉜다. 후보의 공약 분석과 이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유권자의 이슈 태도 형성, 그리고 유권자의 이슈투표 분석이다.

먼저 연구의 첫 부분인 서론과 이론적 검토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이슈투표는 허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본 논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이슈투표 연구의 필요성을 논했다. 적절한 연구모형이 부재하면서 선거에서 공약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 적합한 연구모형이 있다면 공약에 대해 더욱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이슈투표 연구의 의의와 새로운 이슈투표 모델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제2장의 전반부에서는 이슈투표에 관한 연구들과 이슈투표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할 것이다. 합리적 투표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다운즈의 정당 경쟁 모형(이하 ‘다운즈 모형’)을 검토하고(Downs, 1957), 합리적 투표의 기본 전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투표행태 연구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이슈투표 모형들이 다른 투표 결정 요인과 중첩되거나 배치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 이슈투표 연구의 검토를 통해 공간모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공간모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표행태 연구들 사이에서 본 연구 모형의 자리를 찾고, 본 연구 모형에서 다루는 이슈 요인과 다른 투표 결정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단서를 얻을 것이다. 제2장의 후반부에서는 공간모형 이슈투표의 대안 모델로써 합의이슈와

이슈소유에 대해 검토하고, 본 연구모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이론적 검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이슈에 대한 후보의 전략과 유권자의 투표를 다루는 *합의이슈 모형*,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다루는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과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을 설계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를 소개하고, 변수 조작화를 정리했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인 제4장, 제5장, 제6장은 연구 모형을 통해 제18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합의이슈가 선거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18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부각되었고 주요 후보의 공약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이 중 합의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했다. 유권자들에게 현저했던 이슈가 무엇이었으며, 각 후보들이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제3장에서 논의한 정당의 전략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약 경쟁을 통한 후보의 이슈선점 시도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을 분석해 정리했다. 이슈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지 살펴 분석한 것은 연구모형과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을 설명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언론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5장에서는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과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을 통해 정당일체감이 합의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론적 검토에 따라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이슈 선호와 유권자가 후보의 공약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장/단기적 영향을 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두 선거를 잇는 패널 자료와 비재귀 경로모형 등 연구모형에 적절한 자료와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합의이슈에 대해 유권자가 어떻게 태도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향성이 대립이슈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경험적 분석의 마지막 부분인 제6장에서는 제4장과 제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이슈 투표 행태를 *합의이슈 평가 모형*으로 분석했다. 제4장, 제5장에서

분석한 후보의 공약과 경쟁 전략, 유권자의 반응, 그리고 정당일체감과 이슈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합의이슈에 의한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분석하고, 선거에서의 합의이슈의 영향을 입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립이슈만을 분석할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합의이슈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합의이슈 모형이 필요함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함의를 끌어낼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검토

브로디와 페이지(Brody and Page, 1972)는 정책투표(policy voting)를 “정책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 투표 행위”라고 정의했다.¹⁾ 본 연구에서는 이슈투표(issue voting)를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에 근거해 표를 던지는 것(Denver and Hands, 1990; Nicholson, 2005)”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이슈는 정책, 의제, 공약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쟁과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정의한다.²⁾ 따라서 정책 투표보다는 넓은 범주의 이슈투표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 중에서도 선거에서 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경쟁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공약으로 제시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이슈투표는 “선거에서 부각된 경쟁과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 문제들을 대상으로 정당이 공약을 내고, 유권자가 본인의 선호에 기반을 두고 정당의 공약을 평가해 투표하는 것”이다. 특히 이때 유권자는 본인에게 가장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정당에 합리적으로 투표한다.³⁾

1) 더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투표자들에게 주어진 옵션 중에는 기권 혹은 투표가 있고, 만약 그(투표자)가 투표한다면 그는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정책투표”는 바로 이러한 행태가 투표자의 정책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임을 의미한다(Brody and Page, 1972, 450쪽).

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이슈(issue)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쟁점(爭點)이지만, ‘다툼다’는 의미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위해 ‘이슈’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3) 더욱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제3장에서 다룰 것이다.

제1장에서 제기한 본 연구의 질문은 ‘왜 후보(정당)는 공약 경쟁을 하는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다음의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에서 공약이 등장하고 후보 간 이슈 경쟁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왜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이슈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지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공간모형(spatial model) 논의에서 찾고자 한다. 공간모형은 이슈투표 모형의 대표적이고 기본적 형태로 많은 공약 투표가 공간모형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송진미·박원호, 2016). 제2장에서는 공간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간모형이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 중 대립이슈(position issue)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선거 이슈 경쟁의 일부분만을 분석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슈투표 분석을 위한 새로운 모형의 필요를 주장하고,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모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의 목표는 공간모형 검토를 통해 이슈투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이유를 찾고, 본 연구모형에 필요한 이론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1절에서는 먼저 연구모형 설계를 위한 이슈투표의 기본적인 전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이슈투표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모형을 세우기 위한 밑 작업으로 이슈투표 모형이 어떤 전제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공간모형의 기본 모형인 다운즈 모형과 공간모형을 검토하고, 제3절에서 연구모형에 필요한 합의이슈와 이슈소유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 1 절 합리적 개인과 이슈투표: 이슈투표 모형의 기본 전제

이슈투표 모형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정당과 유권자를 둘러싸고 있는 투표 환경이다. 이는 정치체제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조건들, 선거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을 모두 포함한다. 민주주의 체제와 보통선거, 선거제도 등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정당 혹은 후보이다. 정당은 득표 극대화를 위한 집권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유권자에게 정책을 제시한다. 집권 시에는 유

권자들의 지지가 다음 선거까지 유지되도록 정책을 실현하며, 선거 시에는 유권자들의 선호에 맞는 공약을 제시한다. 공약의 공급자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유권자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공약의 소비자로서 정당의 지난 성과와 공약을 평가하고 투표에 반영한다. 유권자는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당을 가려내고 해당 정당에 표를 던진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당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이슈로 유권자를 유인하고, 유권자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정당의 공약을 평가해 가장 효용이 큰 쪽에 투표하는 것이 이슈투표의 기본 모형이다. 선거에서 어떤 이슈들이 두드러지는지, 정당의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유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 획득의 비용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권자가 효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한 변수 간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다루는 것이 이슈투표 연구이며, 그것의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형태가 다운즈 모형이다. 본 연구는 따라서 다운즈 모형으로부터 출발해⁴⁾ 공간모형과 그 대안 모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 설계를 위한 이론적 자원을 쌓아나가고자 한다.

1.1 민주주의 정치체제

이슈투표 모형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투표 환경”은 투표 당시에는 주어진 것,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즉, 정당이나 유권자가 선거의 규칙을 바꾸거나 선거 기간 중 제도가 변경되는 등의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 행위자들이 처한 환경이 계속 고정이라는 것은 아니다. 선거와 선거 사이에는 제도가 바뀌거나 정당 체제가 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거와 선거 사이에 생기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 다만 정당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유권자들의 선호가 결정되고 투표가 이루어지는 선거 기간에는 투표 환경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4) 다운즈는 정당, 정부(집권당) 등의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Downs, 1957, 43-64쪽).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의 정의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것이다.

투표행태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전제한다. 이는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집권당이 결정되고 정부가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유권자가 이 과정에서 같은 크기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기적인 선거와 두 개 이상의 정당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운즈 모형 역시 이를 전제하고 있으며, 투표행태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의 선호가 어떻게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지 밝히는 것이므로 거의 모든 연구가 민주주의 체제를 전제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정당과 유권자들은 같은 조건과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선거 조작 등을 포함한 불법, 부패 행위로 인한 선거 과정에서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정한 선거 규칙을 위반한 선거 결과는 또 다른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규칙적이면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우리 모형의 행위자들은 선거의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유권자 개개인은 똑같은 한 사람으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⁵⁾

본 연구 모형의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순간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응한다. 즉, 유권자가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전제한다. 예를 들어, 후보들의 공약이 확정되고 나면 유권자 개인은 후보의 공약을 바꿀 수 없다. 또한, 유권자들은 선거 제도 등 선거의 규칙을 바꿀 수 없다.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공약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상황들은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모형에서는 우선 유권자가 투표 선택을 할 때 외부 상황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선거일에 후보들의 캠페인과 여론조사 발표 등이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여론조사 자료는 선거 직후 수일에 걸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외부상황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당일에 표본을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

5) 실증적 분석 부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등 유권자들의 집단적, 평균적 차이를 고려할 것이지만, 논문의 전반부에서 설계하는 기본 모형에서는 이러한 점은 생략되거나, 최소한 통제 가능하다고 본다.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선거 연구들이 가능한 선에서 선거일과 가깝게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 역시 선거일의 상황을 가정하고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추정할 것이다.

1.2 정당의 득표 극대화

다음으로 본 연구모형이 다운즈 모형과 공유하는 전제는 정당이 득표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Budge, 2009; Downs, 1957). 다운즈는 이를 “정당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와 유사하다(Downs, 1957, 433쪽)”고 표현했다. 본 연구는 여당의 목표는 재집권이며, 야당의 목표는 정권교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를 최대한 많이 얻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보의 불확실성, 불완정성 때문에 정당들은 자신들의 득표가 어느 정도일지,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고, 따라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게 된다. 만일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보낸 지지는 집권 이후의 정책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득표 극대화는 어떤 경우에서도 모든 정당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가정은 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출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공약을 만들고 상대 정당과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특정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유권자들의 수요에 따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에 가까우며,⁷⁾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서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방향은 유동적이다. 유권자들의 수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⁸⁾ 따라서 득표 극대화 이외의

6) 다운즈(Downs, 1957, 54쪽)는 “정당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책을 만든다”고 가설을 정리했다.

7) 다운즈는 쉘페터의 설명(Schumpeter, 2003)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민주주의 정치의 사회적 기능 역시 말 그대로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충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Downs, 1957, 55쪽).”

8) 후술할 경험적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현저해지는가에 따라 정당들은 때로 기존에 정당이 추구해 온 경향과 다른 공약을 제시하기도 한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특정 정책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는 정당들의 행위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니다. 정당은 유권자들의 득표 최대화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수용하고자 하고, 따라서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섭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본 연구 속에서 정당은 득표 극대화를 통한 집권을 목표로 하며 정책의 시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많은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영역들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정당은 집권 이후에는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분석, 즉 선거 이후 당선인들의 역할에 대해 분석은 하지 않지만,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투표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이러한 기록(record)이 투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본 연구에서 이슈소유(issue ownership)의 형태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단순히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유권자들은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효용을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투표를 한다. 따라서 여당을 심판하기보다는 여당의 성과를 판단하고 이를 앞으로의 투표에 대한 정보로 삼는 것이다.

1.3 합리적 유권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 다운즈는 합리성의 개념을 정의하며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에 상응하는 존재로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을 제시한 바 있다(Downs, 1957, 21쪽).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면 완전히 계산적인 개인을 떠올릴 수 있는데, 다운즈 모형이 가정한 합리적인 유권자가 이런 모습인 것은 아니다.

합리성의 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목적과 수단을 분리해야 한다. 이는 결과를 보고 합리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과가 같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행위일 수도 비합리적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운즈의 예시를 여기서 다시 제시하자면, 유권자 A가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배우자를 기쁘게 하

경제민주화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기 위해 배우자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했다면, 이는 투표라는 정치적 수단을 배우자의 만족이라는 비정치적 목적에 적용한 것이므로 비합리적이다(Downs, 1957, 21쪽). 하지만 만약 유권자 A가 본인의 정책 선호와 가장 잘 맞는 정당에 투표했고, 이것이 우연히 배우자의 선호 정당과 일치했다면 이는 이전의 예시와 결과는 같지만 합리적 행위이다. 즉, 이슈투표에서 전제하는 합리성은 ‘과정의 합리성’이며 정치적 목적인 선호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 행위는 목적 추구에 대한 의도성(intention, 개인이 본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의도를 갖고 했음)을 전제한다.⁹⁾

과정의 합리성이 의미하는 바는 결과가 합리적인 것과는 별개로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합리적 행위라는 것이다(Downs, 1957). 합리적 행위의 결과는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합리적 유권자는 선거기간에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가장 효용이 큰 쪽에 투표한다. 합리적 유권자는 자신의 목적이나 의도한 결과를 위해 순위를 배열하거나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이익을 향해 행동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합리성을 전제로 모형을 전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선택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합의이슈를 통해 유권자들의 이슈투표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모형로 구현하는 시도이므로, 유권자들의 행태를 유형화하기 위해 이러한 전제를 세우고 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전제 없이는 모든 설명이 개인적 요소로 환원될 수 있으며, 오히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요소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개인들이 모인 집단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것이므로, 유권자 집단을 설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도에 큰 장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운즈가 애로우(Arrow, 2012)의 연구를 원용하여 정리한 경제적 합리성의

9) 다운즈는 같은 실수의 반복을 막는 ‘교정 가능성(correctability)’을 기준으로 합리적 실수와 비합리적 행위를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구분은 생략했다. 자세한 논의는 다운즈(Downs, 1957)의 23-27쪽 참고.

형식화는 다음과 같다.

“(1) 그는 선택할 수 있는 일련의 대안을 마주하게 되면 언제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그는 어느 대안을 다른 것보다 선호하거나, 혹은 서로 무차별하다고 보거나, 어느 대안이 다른 것보다 열등하다고 보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대안에 순위를 매긴다. (3) 그의 선호 순위는 이행성을 갖는다. (4) 그는 언제나 가능한 대안 가운데 자신의 선호 순위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5) 같은 대안들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같은 결정을 내린다.” 합리성을 이렇게 정의하면, 그것은 행위 과정에서의 합리성일 뿐, 목적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또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린 개념이 아니게 된다(Downs, 1957, 18-19쪽).

합리적 행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의 관찰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행위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유권자의 목적은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후보 혹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운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합리적 인간은 “경제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이지만, 계산기 같은 머리를 가진, 공리주의적 규범을 따르는 경제적 인간은 아니다.”.

다운즈 모형이 채택하고 있는 합리성의 개념에는 심리학적 고찰이 일부의 경우(Downs, 1957, 제2장)를 제외하고 무시된다. 본 연구 역시 기본 모형에서는 심리학적 고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이유는 소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아실현이나 본인의 일이 너무 즐겁기 때문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이를 투표 상황에 적용한다면, 예컨대 개인은 본인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투표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지 좋아하는 정당/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투표할 수도 있다. 전자가 경제적/정치적 합리성이라면 후자는 이와는 다른 심리적 요인이다. 다운즈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배제하고 있

지만,¹⁰⁾ 본 연구에서는 기본 모형 설계 이후 심리적 요인이 추가되었을 때 모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 것이다.¹¹⁾

합리적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행위를 할 뿐이다. 행위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합리적 과정을 통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이것이 유권자들이 효율적으로 생각해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의 반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선거 제도가 수시로 바뀐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안정적인 선거제도와 안정적인 선택지(정당들)의 존재는 합리적 선택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게임의 참여자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사회질서 등이 중요해진다.

정치체제, 정당, 유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전제와 가정은 다운즈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간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다. 각 연구마다 조금씩 변형이 있지만, 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적 지지의 극대화 추구는 모든 이슈투표 연구의 기반에 있는 전제들이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기본적 전제들에서 출발하며, 이어질 절에서는 공간모형의 토대 위에서 공간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합의이슈 모형의 필요를 이론적 검토에서 찾을 것이다.

10) 다운즈는 인간의 행위가 행위자의 관점에서 항상 비용보다 보상이 컸기 때문에 선택했고,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합리적이라는 논리의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운즈는 심리적 요인을 배제하고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경제적/정치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Downs, 1957, 20쪽).

11)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의한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경제적/정치적 합리적 투표로부터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제3.3절에서 다룰 것이다.

제 2 절 공간모형의 비판적 검토

2.1 다운즈(Downs)의 투표 모형

다운즈 모형

제 1 절의 전제들에 따라 유권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더 많은 편익을 주는 정당에 투표한다. 다운즈 모형에서 유권자는 두 개의 선거 주기를 고려한다. t 시점은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끝나는 선거 주기, $t+1$ 시점은 다가오는 선거 이후 시작되어 그다음 선거까지의 선거 주기이다. 예컨대, 본 연구의 관점에서 2017년 대선을 기준으로 t 시점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t+1$ 시점은 2017년 선거 이후부터 그다음 대선까지의 기간이다.

양당제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정당의 $t+1$ 시점 기대효용을 비교해 효용이 더 큰 쪽에 투표하는 것이다.¹²⁾ 하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댓값이기 때문에 유권자는 더 정확한 효용 계산을 위해 기존에 정당들이 집권했을 때 어땠는지 고려하게 되고, 다운즈에 따르면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집권당이 t 시점에 유권자에게 제공한 효용과 반대 정당이 집권했다면 제공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효용을 비교하는 것이다.¹³⁾ 따라서 집권당이 집권 동안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떤 대안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유권자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는 정당의 모든 공약을 인지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며, 관심이 있고 본인에게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만약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본인이

12) A, B 정당이 있고 둘의 효용을 U 로 나타냈을 때 이러한 “정당 간 기대 효용 격차(expected party differential)”는 다음과 같다(Downs, 1957, 69쪽). 이때, 유권자는 식2.1의 값이 0보다 크면 A 정당, 0보다 작으면 B 정당에 투표하고, 0이면 기권한다.

$$E(U_{t+1}^A) - E(U_{t+1}^B) \quad (2.1)$$

13) 이는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Downs, 1957, 71쪽). 다운즈는 이후 주어진 식에 추세에 따른 변동 요인과 정당의 수행 능력 평가를 수정자로 포함시켰다(Downs, 1957, 72-78쪽).

$$(U_t^A) - E(U_t^B) \quad (2.2)$$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면 이슈에 관해서는 기권한다(Downs, 1957, 77쪽).

이슈투표 연구는 기대효용을 구하는 함수(식2.1)가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발전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권자가 정당의 모든 공약과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대해 알고 있고, 이를 본인의 선호와 연결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편익을 제공할 정당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정보는 비현실적이며 정보 취득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당과 유권자 모두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다.¹⁴⁾ 다운즈 모형(Downs, 1957, 153-155쪽)에서 지적하듯이 현실의 유권자들은 집권당이 집행해 온 정책들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하고, 이를 알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큰 비용을 내야 한다.¹⁵⁾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유권자는 모든 공약을 알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정당이 집권 이후 공약을 실현했을 때 본인에게 어떤 효용을 가져올지 언제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불확실성, 불완전 정보의 세상에서 유권자가 (기대) 효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다운즈는 ‘이념’을 제시했다(Downs, 1957). 다운즈는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유권자들이 정당 이념의 유용성을 발견하고, 정당 간 이념을 비교해 자신과 가장 이념이 비슷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때의 이념은 정당 간 효용 격차를 계산하는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지름길(rational short cut)로 기능한다. 이념은 정당의 정책을 포괄하는 하나의 이미지로써 정당에는 권력에 이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¹⁶⁾

한편, 제 1 절의 전제들에 따라 정당은 가능한 표를 많이 얻는 것을 목표로 한

14) 여기에서 불확실성은 모든 사건과 결정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결정이 사소하거나 결정과 관계없는 지식의 불확실성이라면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제거 가능성(removability), 강도(intensity), 적실성(relevance)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결정자의 확신 수준(level of confidence)으로 통합될 수 있다(Downs, 1957, 123-124쪽).

15) 추가적인 정보는 결정자의 기존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강화해줄 수도 있고, 결정에 반대되는 정보라면 확신을 줄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정보를 얻을수록 확신이 강해지는 것뿐이지 결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 입장에서는 추가적 정보의 한계 보상이 0에 점점 가까워진다(Downs, 1957).

16) 다운즈의 정확한 정의는 “좋은 사회와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수단에 관한 언어적 이미지(Downs, 1957, 150쪽)”이다.

다. 따라서 정당은 유권자들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고 공약을 제시하고자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당은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파악하고 선거에서 이를 제시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유리하다.¹⁷⁾ 정당은 가능한 많은 유권자에게서 표를 받기 위해 유권자가 만족할 정책을 만드는 한편,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유권자들이 믿도록 이끌고자 한다(Downs, 1957, 139쪽). 하지만 정당 역시 유권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유권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유권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나 비용의 한계로 무한 조사를 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가 완전한 것도 아니다.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유권자들이 이념을 수단으로 정당을 비교하게 되면, 정당은 득표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이념을 찾아내게 된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의 구체적 정책과도 일치해야 한다(Downs, 1957, 156쪽). 이념은 “각 정당이 장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척도가 될 만큼 정책들과 충분히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어야만 한다(Downs, 1957, 159쪽).”

그렇다면 정당은 이념 공간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다운즈는 양당제하에서 두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를 얻기 위해 중도로 이동하게 되고, 두 정당은 양극단의 유권자가 정당과 너무 멀어져서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가 얻는 유권자보다 커질 때까지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정당은 가까워지기만 할 뿐 상대 정당을 넘어가진 않는다(Downs, 1957, 178-189쪽).¹⁸⁾

17) 다운즈는 이에 대해 몇 가지 다른 경우들을 제시한다. 예컨대, 오히려 소수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상대 정당과 차별화해 승리를 가져오는 식이다(Downs, 1957). 하지만 다운즈 역시도 정책의 실현과 정치적 지지 등에 열성적으로 관심을 두고 강한 의견을 지니는 다수(그의 표현에 의하면 “열성적 다수”)가 있으면 정당은 다수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Downs, 1957, 105-107쪽).

18) 유권자의 분포는 중간에 모인 단봉형이 아닌 쌍봉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운즈는 이러한 유권자 분포로 양 정당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펴게 되어 민주주의 정부가 불안정해지고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Downs, 1957, 186-187쪽). 만일 유권자들이 고르게 분포한다면 다당제가 출현한다.

다운즈 모형의 한계

다운즈 모형을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합리적 유권자의 일부는 쟁점에 의해 투표하지만, 일부는 정보 획득의 비용으로 인해 이념에 근거해 투표하며, 몇몇은 단지 습관적으로 동일 정당에 투표한다. 앞으로 얻어질 효용이 무차별하거나 투표 참여의 비용이 큰 경우 등의 상황에선 기권한다. 이러한 다운즈 모형은 제1절의 기본 전제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 전제 위에 설계되어 있다. 첫째,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를 좌에서 우로 배열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이념 공간에서 각 정당의 대략적인 위치에 대해 동의한다(Downs, 1957, 179쪽). 즉, 유권자/정당의 정책 선호는 좌-우 연속선 상의 특정 위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만일 여러 개의 이슈가 부각된다면 각각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하나의 점(혹은 평균 위치와 그 분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Budge, 2009). 하지만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 중에는 찬/반을 나누기 어려운 이슈들이 있으며, 이슈 자체로 정책의 목적이나 가치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합의이슈’는 다운즈 모형으로 분석할 수 없다. 합의이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유권자의 선호는 가장 이상적인 지점을 기준으로 단봉형이며 이상 점에서 멀어질수록 선호가 단조적으로 낮아진다. 이는 반드시 일차원 공간이 아니더라도 적용 가능한 가정이다. 어떤 이념 공간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이상적 위치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선호가 감소한다(Downs, 1957, 179쪽). 이러한 가정에 따라 합리적 유권자는 정당들의 이념 위치를 바탕으로 정당 간 효용 격차를 계산할 수 있으며, 본인과 가장 가까운 정당에 투표한다.

다운즈는 정당과 유권자들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이념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념은 내부에서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정당의 강령, 정책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톱스(Stokes, 1963)는 다운즈의 첫 번째 비판점으로 이를 지적했다. 그는 “미시간 대학의 연구들(Campbell *et al.*, 1980)”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정책 태도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이념 성향에서 말하는 “진보적(liberal)”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혹은 누군가 더 진보적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Stokes, 1963, 370쪽). 캠벨 등(Campbell *et al.*, 1980)의 연구에 따르면, 예컨대 사회복지정책과 외국에 대한 미국 개입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 것이다(Stokes, 1963, 370쪽). 그는 정당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각각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당이나 유권자의 이념이 정책 선호를 반영한 일관된 어떤 것이라면, 실제 경험적 분석은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스톡스는 제3정당에 대한 지지 분석에서도 이념의 다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¹⁹⁾

다운즈 모형 이후의 경험적 연구들은 다운즈 모형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조금씩 수정했다. 선거에서 두드러진 몇 개의 정책들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살펴보거나, 이념을 경제, 사회 등의 차원으로 나누어 이념 투표를 살펴보거나, 이념을 이루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책 성향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등의 연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투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선거 이슈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다운즈 모형과 그 수정은 유권자와 정당을 공간 속의 위치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간모형(spatial model)으로 불렸다. 본 연구에서는 다운즈 이후 공간모형 연구자들이 공간모형을 어떻게 수정 및 보완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다운즈 모형은 유권자의 선호가 외생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즉, 정당의 활동 등 외부적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모형

19) 다운즈는 제3당에 대한 지지는 선거 승리와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지지 표시, 혹은 기존에 지지하던 정당의 불만족스러운 정책에 대한 협박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Downs, 1957). 하지만 스톡스는 1948년의 선거를 예로 들며, 당시의 민주당 이탈(Dixiecrat vote)이 시민권 정책에 대한 남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이 이슈가 경제-복지 정책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영역의 구별된 이슈로 보인다고 주장했다(Stokes, 1963, 371쪽). 즉, 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이념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이념의 다차원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관한 한국 사례 연구로는 강원택 (2003, 2010); 이갑윤·이현우 (2008) 등이 있다.

에서는 유권자의 선호가 바뀔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운즈 모형에서 심리적 요인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지만, 캠벨 등(Campbell *et al.*, 1980)의 연구 이후 정당일체감의 중요성은 많은 투표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인식할 때 정당일체감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3.3절에서 다룰 것이다.

2.2 대립이슈(position issue)와 공간모형(spatial model)

다운즈 모형을 비롯한 공간모형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좌-우 연속선에 (평균) 위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전제한다. 스토크스(Stokes, 1963)는 모든 이슈에 대한 선호가 이러한 전제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공간모형에서 다루는 이슈를 대립이슈(position issue)로 분류했다. 대립이슈(position issue)는 유권자들의 선호가 분포(分布)하며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표할 수 있는 이슈이다(Stokes, 1963, 383쪽). 대립이슈에는 정당 간 견해 차이가 뚜렷한 당파적 이슈(partisan issue), 정당 내부 혹은 지지층 내에서 입장이 나뉘는 분열 이슈(wedge issue) 등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슈 성격에 따른 것으로 선거 맥락이나 역사 흐름에 따라 대립이슈 중에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혹은 유권자들 대다수 의견이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교과서 이슈는 찬/반으로 견해차가 나타날 수 있는 대립이슈였지만 유권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이슈였다. 이러한 경우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정당/후보는 국정교과서 이슈가 부각되면 될수록 선거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공간모형은 정당/후보의 입장 차이를 좌-우 일 차원상의 거리로 정의한다. 이는 개별 이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몇 개의 이념 차원일 수도 있고, 평균 위치를 담은 하나의 이념 차원일 수도 있다. 이슈에 대해 후보들이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면 유권자가 본인의 입장을 고려해 자신과 입장이 가장 비슷한 후보에게 투표한다. 이러한 투표 결정 모형

의 대표적인 것이 근접 모형과 방향 모형이다. 유권자가 본인과 정책 거리가 가장 짧은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주장한 것이 근접 모형(proximity model)이며, 찬성과 반대 중 자신과 입장이 같은 쪽에 투표한다는 것이 방향 모형(directional model)이다(Downs, 1957; Rabinowitz and Macdonald, 1989).

앞서 살펴봤듯이 다운즈는 유권자 개인의 선호는 가장 선호가 높은 지점에서부터 좌, 우로 멀어질수록 선호가 단조 감소한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선호는 좌-우 이념 연속선의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정당이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근접 모형에서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효용을 계산해 가장 효용이 큰 후보에게 투표한다(Enelow and Hinich, 1984). 이후 연구들에 따르면 보다 정치적으로 세련된(sophisticated) 유권자들이 근접 모형에 가깝게 투표한다(Jessee, 2010).

이슈투표 연구는 다운즈 모형의 가정들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발전해왔다. 이슈의 방향과 강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투표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을 제시하고, 수정되거나 변형된 효용함수를 제시했다. 예컨대, 그로프만(Grofman, 1985)은 유권자들이 가까운 후보에게 투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현재의 상황이 유지(status quo)되거나 바뀔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고 주장하며 다운즈 모형의 수정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책방향이 지나치게 극보수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투표할 수도 있으며, 이때 정당들이 얼마나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장승진·송진미, 2017). 현재의 현상 유지에서 후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정도에 주목하고, 유권자들이 거리를 계산할 때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로프만(Grofman, 1985)은 이를 유권자들이 후보 입장을 감가(discount)한다고 표현했고, 따라서 이후 그로프만의 수정모형은 감가모형(discounting model)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근접 모형은 ‘중도 진보’의 유권자가 과연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진보’ 후보가 아닌 ‘중도 보수’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의문을 품은 학자들로부터 비판받았다. 대표적으로 라비노위츠 등(Rabinowitz and

Macdonald, 1989)은 유권자의 선호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으며, 따라서 각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은 이슈의 중요성과 입장의 극단적인 정도, 그리고 후보가 얼마나 강한 입장을 보이는지에 비례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²⁰⁾ 즉, 라비노위츠 등(Rabinowitz and Macdonald, 1989)에 따르면 이슈에 대해서 후보가 극단적인 견해를 보일수록 같은 방향에 있는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에 대해 갖는 효용은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시 ‘얼마나 극단적인 입장까지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그들은 극단적인 입장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circle of acceptability)가 있어서 무조건 효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책의 입장들을 나열한 직선에서 개인들이 각각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고, 이를 벗어난 후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Rabinowitz and Macdonald, 1989; Westholm, 2001). 허용범위까지만 후보의 입장이 극단적이고 강할수록 지지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맥도널드 등(Macdonald *et al.*, 1991)은 후속 연구에서 페널티를 포함하여 수정한 효용함수를 제시했다.²¹⁾ 갈라티와 기거(Gallati and Giger, 2019)는 스위를 대상으로 한 실험 설문을 통해 실제로 이슈의 수용 가능 영역(the region of acceptability)이 존재하고, 이는 개인 수준에서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20) 라비노위츠 등(Rabinowitz and Macdonald, 1989)의 모형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 유권자 i 가 V_i 의 입장을 갖고 있고, 후보 j 가 C_j 입장일 때, 후보(C)에게 갖는 효용(U)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U(V, C) = V_i C_j$$

21) 맥도널드 등(Macdonald *et al.*, 1991)은 다음과 같이 페널티를 나타내는 P항을 추가해 효용함수를 수정했다.

$$U_{ij} = V_i C_j - P_{ij}$$

이때 P_{ij} 는 후보가 허용범위(r) 안에 있으면 0의 값을 가지며, 후보가 허용범위에 걸쳐 있거나 그보다 밖에 있으면(즉, $|C_j| \geq r$ 이면) 다음과 같다.

$$P_{ij} = p|V_i|(|C_j| - r)$$

여기서 p 는 모수로 후보의 입장이 극단적일수록 얼마나 페널티가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Gallati and Giger, 2019, 2쪽).

공간모형을 선거에 적용해 분석하거나, 모형을 일부 수정하거나, 근접모형과 방향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매튜(Matthews, 1979)는 방향모형에서 입장의 강도를 제거한 모형을 제시했으며, 이를 그로프만(Grofman, 1985)이 발전시켰다.²²⁾ 근접모형과 방향모형은 지금까지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해오고 있으며, 어느 모형이 현실에 더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김성연, 2015). 투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접모형을 방향모형이나 감가모형보다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실험 연구를 통해 살펴본 연구들도 있으며(Lacy and Paolino, 2010; Tomz and Van Houweling, 2008), 혹은 베버(Weber, 2015)와 같이 모형들의 화합을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 우리나라를 사례로 한 연구로는 김성연 (2015, 2017)의 연구 등이 있다. 그는 제18대 대선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정책이 이념, 정당 지지, 연령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투표에 영향이 있는지 공간모형으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그는 안보·국방과 복지·사회 정책에 대한 유권자와 정당 사이의 입장 차가 20대 총선에 미친 영향을 근접모형과 방향모형으로 살펴봤는데, 그에 따르면 두 정책은 투표선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접모형보다는 방향모형의 설득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모형에서 더 선명하게 이슈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슈투표 연구 또한 대체로 이러한 공간 모형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근접모형과 방향모형의 적용과 수정을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김성연 (2015, 2017)의 연구를 비롯하여,

22) 매튜(Matthews, 1979)는 정치행위자들이 정책 입장의 정확한 위치에 특별히 민감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책 입장은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뉘고, 그 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방향만을 고려할 뿐 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라비노위츠 등(Rabinowitz and Macdonald, 1989)의 모형을 더욱 단순화했다. 후보자로서도 지지층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위험부담 때문에 후보자들이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튜(Matthews, 1979)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입장이 서로 같은 방향에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했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여러 개의 이슈에 대해 유권자와 후보자가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지 각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는 현상의 유지(status quo)가 이슈투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했으나 단순한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그로프만(Grofman, 1985)의 모형에서 더 발전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공간모형을 한국 선거에 적용한 연구(김성연, 2015, 2017; 김성연 외, 2013; 김성연·정효명, 2014; 송근원·정봉성, 2007; 정하운, 2014)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투표행태 연구의 역사 속에서 이슈투표 연구는 다른 투표결정 요인들, 예컨대 지역주의와 정당일체감 같은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다. 이슈투표 연구 중에서도 다수가 정당일체감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슈의 영향력을 분석했으며(송진미·박원호, 2014), 혹은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정책 투표를 살펴거나(김민정 외, 2003), 정책태도를 포괄하는 이념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태도와 투표 (혹은 정당 지지) 사이의 관계를 살폈다. 혹은 이슈투표에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한정훈, 2015). 대체로 국가적 차원에서 큰 이슈들이 부각되는 대통령 선거 혹은 총선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간모형을 정리한 연구들은 공간모형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유권자들은 자신이 정책으로부터 원하는 바(찬성 혹은 반대)를 알고 있으며, 이를 각각의 후보들과 비교할 수 있다. 둘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드러난(revealed) 정책 선호를 알고 인지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 선호를 알기 위해 정당일체감 등을 사용한 지름길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결과적으로 가용한 정보들을 통해 자신과 후보의 입장을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셋째, 모든 유권자는 모든 정당에 대해 같은 효용함수를 갖는다(Calvo *et al.*, 2013, 351-352쪽). 지난 연구들은 하나의 효용함수를 제시하면 그것을 모든 유권자, 모든 이슈,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세 번째 전제는 칼보 등(Calvo *et al.*, 2013)에 의해 비판 받기도 했다. 그들은 기존의 공간모형 연구들이 하나의 효용함수만을 제시하고 이를 모든 경우에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 등의 정책 입장 변화를 유권자들이 정당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가 정당과 자신의 거리를 비교할 때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간모형에 따르면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입장은 공간 속에서 하나의 점에 위

치하며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는 자신과 후보자의 정책 입장 차이의 거리 (혹은 방향의 일치 여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효용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한다. 하지만 공간모형은 이슈를 찬/반의 연속선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연속선 상 어느 점에 위치시키고, 각 후보의 위치를 모두 알고 있으며, 이를 본인과 비교해 ‘정책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슈투표를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유권자 본인의 정책 선호가 확실한 동시에 그러한 선호를 실현해 줄 후보가 있다고 믿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낮으며(Lewis-Beck *et al.*, 2008, 163 쪽),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Bartels, 1986; Enelow and Hinich, 1981).

또한 공간모형에서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거의 차이가 없고 비슷할 경우 효용 값 계산 결과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슈투표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실제 후보들은 유권자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공약은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인기 있는 공약들은 서로 따라하기도 하므로 유권자들이 이를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간모형 속에서는 효용 값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차이가 무차별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효용함수 계산을 위해 유권자들은 본인의 확실한 정책 선호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후보가 해당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합리적 유권자라는 전제에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에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자신의 선호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후보의 공약이 일차원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연구자는 공약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입장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Campbell *et al.*, 1980; Converse, 2006; Lewis-Beck *et al.*, 2008). 유권자들이 찬성에서 반대로 이어지는 일차원 상에 후보들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Bartels, 1986; Enelow and Hinich, 1981).

다운즈 모형의 수정이 이루어지며 공간모형이 발전했지만, 공간모형은 여전히 중요한 전제를 다운즈 모형과 공유하고 있다. 유권자의 이슈 선호를 좌-우

연속선 상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정당의 입장 또한 그 선 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간모형은 대립이슈만을 모형에서 다루며 이것이 공간모형의 한계이다. 만약 모든 정책별로 유권자가 정당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면, 그리고 정당 역시 이슈별 유권자의 선호를 파악해야 한다면 큰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다운즈가 주장한 대로 이념과 같은 보다 편리한 지름길이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선거에서 제시되는 이슈들이 대립이슈가 아니라면 이러한 전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세부적인 정책 대안들이 이념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나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묶인다면, 그리고 정당들도 정책의 목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이슈를 스톱스(Stokes, 1963)는 합의이슈(valence issue)로 구분했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를 대상으로 이슈투표의 전제들을 검토했을 때 가정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 실제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들을 분석할 것이다.

제 3 절 합의이슈모형

3.1 합의이슈(valence issue)

다운즈는 정당이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루는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극단에 있는 유권자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공약에 섞는다고 주장했다. 양당제 정당은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반응함으로써 지지자를 늘리려고 하게 된다. 이는 합리적 행위이지만, 정당들의 차이가 불분명해지면 유권자는 이슈에 근거해 투표하기 어려워진다(Downs, 1957, 208-209쪽).²³⁾ 중요한 이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당은 그 반대 입장에서 서 있는 유권자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양당제에서 정당들은 관점이 유사해지고 모호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모형 양극단에 있는 유권자들은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두 정당이 가까워질수록 두 정당의 차이를 인지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기권할 가능성이 더 높다(Downs, 1957, 185쪽).

23) 하지만 다당제에서는 정당 각자의 영역이 좁아져 이념적 색채가 분명해진다.

스톡스(Stokes, 1963, 1992)는 정당들의 경쟁을 공간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합의이슈(valence issue) 개념을 제시했다.²⁴⁾ 그의 정의를 따르면 합의이슈는 다음과 같다. “합의이슈(valence-issues)는 유권자들에 의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가치가 매겨져 정당과 연결되는(Stokes, 1963, 373쪽)” 이슈로써, “정당이나 정치적 리더들이 그들이 무엇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지에 따라 구별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어떤 상징이나 목표나 조건에 대중들의 생각과 연결된 정도(degree)로 구별되는(Stokes, 1992, 143쪽)” 이슈이다. 이러한 이슈는 “과거나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정당에게) 비난이나 신뢰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경쟁)이 되며, 미래의 상황에서는 어떤 정당이 집권해야 그(가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경쟁)으로 바뀐다(Stokes, 1963, 373쪽).” 합의이슈는 정책의 목표나 가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견은 대립이슈처럼 나뉘지 않는다.²⁵⁾ 스톡스는 합의이슈의 예로 경기침체와 경기회복을 들었다(Stokes, 1963, 373쪽). 경기침체는 부정적 가치이고 경기회복은 긍정적 가치이다. 선거에서 경기침체와 경기회복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 어느 정당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따라 평가받는다. 경기회복은 찬/반이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립이슈의 틀 속에서는 이슈로 보기 어렵다.

합의이슈 경쟁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평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유권자 다수가 같은 의견이나 가치를 가진 이러한 이슈에는 범죄 감소나 경제성장과 같은 이슈를 포함해 통합, 경쟁, 정칙과 같이 정책과 관련 없는 정당/후보의 특

24) 다운즈는 일부 투표행위는 이념과 연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는데, 스톡스는 다운즈의 관점에서 합의이슈는 비합리적 투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Downs, 1957; Stokes, 1963, 1992).

25) 합의이슈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연구자들에 따라 가치쟁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균형이슈, 합의제이슈, 수렴이슈 혹은 결합이슈로 번역하기도 하며, 대립이슈는 쟁점이슈 외에도 위치이슈 혹은 갈등이슈로 번역되기도 한다(강우진, 2012, 2013a; 강원택, 2003, 2010; 류재성, 2012; 문우진, 2009, 2012; 우효평, 2017; 이내영·정한울, 2007; 정한울, 2013; 조성대, 2012; 조진만, 2014). 본 연구에서는 어떤 가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 합의이슈가 정책의 목표를 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의 합의(consensus)라는 의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합의이슈라고 번역했다.

성이 포함되기도 한다(Clark, 2009, 111쪽). 본 연구에서는 경제, 복지, 안보와 같은 국가 정책들에 한해서 합의이슈를 다룰 것이다. 경제성장, 복지확대와 같은 이슈들이 대표적인 합의이슈에 해당하며, 부패척결과 같이 부정적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는 이슈들도 해당된다(현재호, 2012). 반면에 우리에게 익숙한 찬/반 입장이 나뉘는 대립이슈(position issue)는 유권자, 정당/후보가 다양한 선호가 있을 수 있다. 이민 정책, 세금 정책, 낙태, 총기규제 등의 정책이 해당한다(Adams *et al.*, 2005, 254쪽).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인 북한 관련 이슈의 경우,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긍정적 가치를 담은,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합의이슈이다.

하지만 합의이슈가 대립이슈와 공간모형을 비판하며 등장했다고 해서 두 이슈가 반드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이슈는 정의 그대로 어떤 목표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대립이슈가 숨어있기도 한다.²⁶⁾ 예를 들어, 최근 한국 선거에서 청장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했을 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립이슈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취업 교육 및 비용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당의 경쟁은 이러한 대립이슈가 아닌 “일자리 창출”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립이슈로 경쟁이 이루어지면 유권자들은 어떤 정책에 더 찬성하는지에 따라 투표하지만, 정당들이 일자리 창출 자체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이 그 목표를 더 잘 이룰 것인지 평가해 투표한다. 따라서 스톡스(Stokes, 1963)는 이슈의 구분은 경험적으로 밝힐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톡스(Stokes, 1963)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합의이슈가 유권자 선호의 변화나 역사적 흐름에 따라 대립이슈로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26) 스톡스(Stokes, 1963)는 대립이슈가 합의이슈 뒤에 숨어있다(lurk)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1952년 미국 선거에서 한국 6·25 전쟁 이슈를 두고 “전쟁 정당(war party)”이라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에 꼬리표를 붙인 경우이다. 미국의 개입 정도나 관련 외교 정책 등 다양한 대립이슈인 대안들이 있지만, 이를 “전쟁”이라는 영역으로 묶으면서 정당의 경쟁과 논쟁은 민주당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Stokes, 1963, 373쪽)

변영이 1830년대부터 줄곧 중요한 합의이슈였지만,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의 책임 문제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점차 생겨나 국가의 경제 변영이 더 이상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게 될 때에 합의이슈에서 대립이슈로 변화한다고 주장했다(Stokes, 1963, 374쪽). 하지만 이러한 이슈의 변신은 단기간에 일어나기 어렵고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보이기 어렵다. 그리고 자칫 이러한 접근은 합의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스톱스와 같은 예시의 경우 경제적 변영이 대립이슈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선거에서 합의이슈로 부각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개인적 문제로 환원되면서 발생한 변화라면 이미 정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립이슈로 변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패 척결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지만, 과거에도 부패는 척결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는데 단지 그 중요성이 덜 했을 뿐이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생계 등의 이유로 부패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공감대가 생긴다면 부패 척결에 대한 논의가 찬/반의 논쟁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밝힐 부분이다. 따라서 이슈투표의 대상이 되는 이슈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이슈투표 메커니즘을 밝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본 연구는 제4장에서 이를 분석한다.

스톱스(Stokes, 1963, 1992)의 연구 이후 공간모형 연구자들이 합의이슈의 관점을 모형에 포함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양자 대결 선거에서 합의이슈를 고려했을 때 후보들의 전략적 인센티브가 근본적으로 바뀐다(Ansolabehere and Snyder, 2000; Berger *et al.*, 2000; Feld and Grofman, 1991; Macdonald and Rabinowitz, 1998). 이들의 중심적인 발견은 합의이슈가 유리한 후보들, 득표 최대화를 추구하는 후보들은 대립이슈에는 중도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중도층을 흡수하는 한편 합의이슈에서 승부를 겨루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한쪽의 정당엔 전략적 선택지가 거의 없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3

당 경쟁구조, 혹은 그 이상의 다당경쟁 구도에서도 연구되었으며(Adams, 1999; Hug, 1995; Schofield, 2003, 2004, 등), 비슷한 결론을 끌어냈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합의이슈를 고려하게 되면, 선거에서 후보의 전략이 바뀔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이슈투표 메커니즘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합의이슈의 형태로 공약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이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투표에 반영하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 선거에서는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일수록 합의이슈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이슈가 부각되는 선거에서는 이에 맞는 분석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간모형에서는 동일 문제에 대해(예컨대, 경제성장) 몇 개의 대립 이슈로 이루어진 순위가 매겨진 정책 대안들(세금감면, 규제 완화 등)의 묶음을 두고 정당이 경쟁한다면, 합의이슈에 대해서는 몇 개의 구별된 이슈 영역 자체의 묶음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슈를 선택해 경쟁하게 된다(Stokes, 1963).

3.2 이슈소유(issue ownership)와 이슈선점, 이슈현저성(issue salience)과 이슈중요도(issue importance)

이슈소유(issue ownership)와 이슈선점

그렇다면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의 경쟁 방식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의 전략을 이슈소유(issue ownership)의 논의 속에서 찾고자 한다. 이슈소유는 특정 이슈에 대해 정당이 장기간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 해당 이슈를 다루는 데 능숙하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Budge and Farlie, 1983a,b; Egan, 2013; Petrocik, 1996; Stubager, 2018). 합의이슈에 대해 유권자는 어느 정당이 그 가치를 더 잘 성취할 것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정당은 문제 해결의 성공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이 해당 이슈 영역에 대해 집권 당시 보여줬던 성과들은 이슈 성취 능력의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이슈소유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Stubager, 2018, 347쪽).

주어진 이슈에 대해 어떤 정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요구된 목적

을 잘 이룰 것이라고 신뢰가 갈 때(Budge and Farlie, 1983a, 287쪽) 해당 정당은 해당 이슈를 소유할 수 있다. 정당이 지금까지 이슈에 대해 보여준 모습들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편익을 제공했고, 따라서 이슈가 선거에서 현저해지면 다수의 유권자는 해당 정당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슈를 소유하는 것이다(Budge and Farlie, 1983b, 41-42쪽). 이슈소유는 “정책에 대한 평판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attention), 주도(initiative), 그리고 혁신(innovation)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정당이 보다 더 해당 문제에 진심이고 전념하고자 한다고 믿게 만든다(Petrocik, 1996, 826쪽).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당의 이슈소유는 현직자들의 기록(성과)과 정당의 지지층을 통해 얻어진다(Petrocik, 1996, 827쪽). 그리고 어느 한 정당이 이슈를 소유하게 되면 이는 변함없이 유지된다(Budge and Farlie, 1983b). 유권자들은 이슈를 소유한 정당에 해당 이슈 해결 능력에 관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Stubager, 2018, 347쪽). 이슈소유의 핵심은 장기간의 데이터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만약 특정 이슈에 대한 특정 정당의 평가에 변동이 있다면 이는 정당이 이슈를 소유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슈소유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정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들을 강조하고 상대 정당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들은 언급을 피하는 방식으로 선거전략을 세운다(Petrocik, 1996, 2003). 예컨대, 미국 공화당의 경우에는 경제와 세금 관련된 이슈들을 강조하는 한편 복지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민주당은 복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강조하는 한편 세금감면과 같은 이슈들은 언급을 피하는 것이다. 특정 이슈를 소유한 정당은 해당 이슈가 중요해질수록 선거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정당은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best at handling)” 것이라고 인정받은 이슈, 즉 소유한 이슈를 선거에서 부각하는 방식으로 선거에서 이기고자 한다(Budge and Farlie, 1983a,b; Green-Pedersen, 2007; Petrocik,

1996; Stubager, 2018).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데 능숙하다고 생각한 정당에 투표했음을 밝혀냈다(Bélanger and Meguid, 2008; Green and Hobolt, 2008; van der Brug, 2004).

하지만 선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중요하게 부상하거나, 이슈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다른 정당이 소유하고 있던 이슈를 가져오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기적 이슈소유’의 시도를 이슈선점(先占)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단기적 이슈소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불안정하거나 단기적인 이슈소유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이슈를 임대(lease)했다고 표현하거나(Petrocik, 1996), “정당 능숙도(party competence)”로 부르기도 했다(Bellucci, 2006).

스투바거(Stubager, 2018)의 연구는 이슈소유를 장기적 소유와 단기적 소유(본 연구에서는 이슈선점)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실험 설문을 포함한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슈소유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어떤 정당이 이슈X를 가장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대답이 장/단기적 인식 중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유권자들이 가장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은 단기적 이슈선점에 더 영향을 받았다. 그의 연구 결과는 이슈를 잘 해결할 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오랜 기간의 정당의 성취로 평가하기보다는 최근의 상황을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연구에서 장기적 이슈소유는 유권자들의 인식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단기적 이슈선점은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 정의한 장기적으로 만들어진 안정적 이슈소유와 단기적으로 만들어지고 불안정한 이슈선점은 구분되는 개념이며,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슈선점과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슈소유 혹은 이슈선점은 대립이슈와 합의이슈 모두에 대해 가능하다. 특정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능숙함과 평판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다는 것,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자신 있다는 것 모두 가능하다. 합의이슈에 대해 정당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거나, 언론이나 연설에서

강조함으로써 이슈선점을 시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이미 소유한 이슈라면 선거에서 가능한 부각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합의이슈에 대해서 광고나 연설을 활용한 차별적 강조를 통해 입장 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Ansolabehere and Iyengar, 1994; Walgrave and De Swert, 2007). 어떤 이슈를 강조하거나 강조하지 않는지(de-emphasize), 혹은 어떤 이슈를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따라 정당 입장에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복지 확대에 대한 공약을 많이 제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복지 확대를 우선으로 두면서도 일자리와 경제 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두 정당에 비해 더 많은 이슈 영역을 포괄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당들은 서로 다른 이슈를 강조할 수 있지만 겹칠 수도 있으며(Green and Hobolt, 2008), 상황에 따라 단기간에 이슈소유권이 변화하거나(Damore, 2004; Holian, 2004) 먼저 이슈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슈선점(先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대립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한 뒤, 합의이슈에 대해 정당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이슈소유와 이슈선점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대립이슈의 후보 입장이 진보-보수의 특정 위치라면, 합의이슈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떤 정당이 더 해당 이슈를 강조했는지’ 혹은 합의이슈의 목표와 가치를 ‘어떤 정당이 더 잘 실현할 것 같은지’와 같다. 따라서 공간 모형과 달리 제3장에서 전개할 합의이슈 모형에서 유권자는 어떤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더 나은지’에 대한 평가만 가능하면 이슈투표할 수 있다. 즉, 공간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슈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적은 것이다. 합의이슈가 부각된 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들은 이슈선점 여부, 이슈강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합의이슈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된다.

이슈현저성(issue salience)과 이슈중요도(issue importance)

정당이 소유하거나 선점한 이슈에 대해 유권자는 주관적 이슈중요도를 통해 선호를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경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혹은 ‘경제 성장이 복지 확대보다 더 중요하다’와 같은 방식이다. 제2.1절에서도 설명했듯이 합의 이슈 내에는 대립이슈 정책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복지 확대라는 목표에는 임대 주택 확대, 통신비 절감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정책들에는 유권자들 간 찬/반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복지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경우, 세금에 대 한 고려만 없다면 대체로 사람들이 복지 확대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 대선 이후 복지 이슈는 선거에서 주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송진미·박원호, 2014). 이처럼 합의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슈선호는 구체적 정책들과 각 대안에 대한 위치가 아니라, 어떤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로 나타낼 수 있다. 유권자가 세세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기 어려워도 그것들이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보다 넓은 이슈 영역에서 이해하고, 그에 대해 중요도 점수를 매기거나 이슈 간 상대적 순위를 매기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의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이슈태도를 이슈중요도로 측정해 연구 모형에 포함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이슈중요도(issue importance)는 이슈 현저성 (issue salience)과는 구분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두 개념은 자주 혼동되어 쓰인다. 다운즈(Downs, 1957)는 이슈 현저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유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을 “강도를 둘러싼 합의(consensus of intensities)”라고 정의했는데, 각 이슈의 대안(정책)들이 다르고 그 중의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유권자들 간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²⁷⁾ 본 연구에서 이슈중요도는 유권자 개인적 차원의 주관적인 점수로써, 유권자가 각 이슈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27) 반면에 관점을 둘러싼 합의(consensus of views)는 특정 이슈에 대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특정 대안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Downs, 1957).

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 반면 이슈 현저성은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거나 시급한지를 나타낸다. 선거에서 이슈가 부각될수록 이슈 현저성이 높아지지만, 유권자의 이슈중요도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이슈소유와 이슈선점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구분하고 투표에도 반영할 수 있으며(Bellucci, 2006), 이슈의 중요성이나 더 바람직한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합의이슈 입장은 정당지지 혹은 투표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원택, 2003; 장승진, 2013). 합의이슈에 대해 정당이 이슈소유와 이슈선점을 시도하면, 유권자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정당에 투표한다. 이러한 정당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특정 이슈 영역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혹은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자신의 이슈 선호(이슈중요도)와 연결한다. 공간모형에서는 입장이 가까울수록 정당의 효용이 높아지지만, 합의이슈 모형에서는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정당이 잘 해결하리라 생각할수록, 그 문제를 강조했을수록 효용이 높아진다.

이슈투표 논의에 있어서 합의이슈의 강점은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에 있어서 더욱 빛을 발한다.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기간에 내놓은 공약들은 상당히 많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든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각각의 후보들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몇 개의 큰 범주의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후보가 해당 이슈를 강조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더 간단한 과정이다. 길거리를 오가며 보고 들은 이야기, 주변에서 해주는 이야기들, 관심을 두고 봤거나 우연히 보게 된 선거공약집이나 토론에 나온 이야기들이 모여서 후보 공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해당 후보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강조한 후보는 누구이며 주거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는 누구인지와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3.3 이슈와 정당일체감: 설득, 투사

합의이슈 모형 설계에 앞서 유권자의 이슈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정당일체감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당일체감에 의한 설득과 투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당파심에 따른 설득에 의한 이슈 투표는 유권자의 정책 선호가 아니라 정당 애착심이라는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비합리적 행위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슈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투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당일체감에 의한 합리화를 가능한 통제 하거나, 최소한 어느 이슈에 대해 합리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의이슈 투표모형 설계와 분석에 앞서 정당일체감이 합의이슈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합의이슈에 대해 나타나는 설득과 투사를 분석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대립이슈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 글에서 정당일체감에 의한 이슈 태도 합리화를 이론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제5장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당일체감은 특정 정당에 대해 유권자가 느끼는 심리적 애착심과 소속감으로,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당일체감은 한번 형성되고 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다(Campbell *et al.*, 1980).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동인(unmoved mover)’으로 유권자의 정책 입장이나 투표 선택 등의 정치적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Bartels, 2002; 박원호·신화용, 2014). 정당일체감에 관한 전통주의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정당일체감이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특성을 가졌다고 주장한다(Campbell *et al.*, 1980; Lewis-Beck *et al.*, 2008). 그리고 이러한 개인 수준에서의 정당일체감 안정성은 정당 지지 구도의 안정성과 연결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정당 체제를 만들어 낸다(박원호·신화용, 2014; 허석재, 2014).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정당입장을 추론하는데 단서(cue)로 사용되거나, 역으로 응답자의 이슈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chen and Bartels, 2017; Markus and Converse, 1979).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이슈 태도에 설득 혹은 투사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들은 정당/후보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거나²⁸⁾, 자신과 입장이 비슷하도록 합리화 한다.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박원호, 2012; 이갑윤, 2011; Campbell *et al.*, 1980; Lewis-Beck *et al.*, 2008; Miller, 1992), 정당일체감에 의해 이슈태도 합리화가 일어날 수 있다. 브로디와 페이지(Brody and Page, 1972)에 따르면, 유권자는 자신의 이슈 선호를 지지하는 정당에 반영하거나, 반대로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이 맞춰 본인의 이슈태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지지정당 후보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일치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자는 투사 효과, 후자는 설득 효과이다. 설득과 투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elson *et al.*, 1954).

설득과 투사는 유권자가 이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후보의 입장을 인지해야만 이슈투표가 가능한데,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추론이 어려운 것이다(Brody and Page, 1972; Conover and Feldman, 1982). 특히 설득의 경우, 유권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혹은 정당 간 기대효용이 무차별하다는 것에 확신한다면 유권자는 본인의 결정을 강화해줄 정보가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Downs, 1957, 133-135쪽). 하지만 아직 투표할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정도 혹은 정당들이 무차별하다는 잠정적 결론에 머무르고 있는 유권자들이라면 설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Downs, 1957, 134쪽).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 때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자신과 일치하는 후보를 선택해 투표하면 되지만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정당일체감 연구에서 의미하는 설득은 유권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이슈 선호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의 설득이 반드시 맹목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부족할 때 유권자는 설득에 노출되지만,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 다운즈는 설득

28) 선거전까지 정당 행적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정당의 공약을 인지하는 것이 추론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약을 알고 있다’는 것이 추론에 해당한다.

을 유권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선호를 강화하거나 바꾸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정당과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 중 일부가 유권자들의 설득에 나선다.²⁹⁾ 이는 똑같이 정당에 의한 설득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일체감에 따른 설득은 맹목적인 데 반해 다운즈가 말하는 설득은 유권자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본인의 판단하에 의견을 바꾸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는 ‘맹목적 설득’ 후자를 ‘합리적 설득’으로 구분해 서술할 것이며, 이하 다른 언급이 없다면 ‘설득’은 맹목적 설득을 의미한다.

맹목적 설득이나 투사의 경우 좋아하는 후보와 자신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도 일어난다(Brody and Page, 1972; Conover and Feldman, 1982). 이 때, 유권자 자신의 입장이 강할 경우에는 설득보다는 투사가 일어나기 쉽다. 반대로 후보가 강한 입장을 취하고 이에 대해 인지할 경우 설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설득과 투사는 다시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와 비슷한 입장을 갖는 동화 효과(assimilation effect)와 비선호하는 후보와 부정적(negative) 입장을 갖는 대조 효과(contrast effect)로 나뉜다(Brody and Page, 1972; Conover and Feldman, 1982; Page, 1978).

투사와 설득에 관한 연구들은 유권자의 이슈 태도와 유권자가 인식하는 정당 입장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두 요인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설득과 투사의 분리 또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실 정치에서 이슈 태도가 정당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시 정당 입장이 유권자의 이슈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슈 태도와 정당 입장 사이에 순환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과 설득

29) 이들을 다운즈는 선동가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특정 정당의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욕망, 혹은 그가 좋아하는 어떤 정책이 시행된 데 보답하려는 동기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나선다.(Downs, 1957, 132쪽)” 그리고 정당의 설득 능력은 리더십에 달려있다. 다운즈는 리더십을 “유권자들이 특정의 관점을 유권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정당은 표를 많이 받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이 좋은 것이라고 믿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했다. 즉,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 방향이 좋은 것, 본인들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의 경계, 추론과 투사의 경계 역시 뚜렷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슈 태도 형성의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행위자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유권자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여론조사 기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유권자의 이슈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혹은 유권자가 생각하는 정당 입장이 어디에서부터 추론되는지 밝히기 어려워지는 것이다.³⁰⁾ 따라서 정당일체감을 고려하거나 통제한 후에 정책에 기반한 투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기술이 필요하다(Brody and Page, 1972, 451쪽).

정당일체감과 구분되는 이슈투표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투사와 설득의 과정을 분리해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Boyd, 1972; Brody and Page, 1972; Converse, 1966). 마커스와 컨버스(Markus and Converse, 1979)는 동적 연립 방정식 모형을 통해 투사와 설득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마커스 등에 따르면 유권자가 추론한 t 시점의 후보 입장은 실제 후보의 입장과 응답자 자신의 입장, 그리고 유권자의 후보평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투사가 일어난다. 동시에 t 시점의 유권자 입장은 $t-1$ 시점의 유권자 입장과 후보 평가, 그리고 t 시점의 후보 입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때, 후보에 대한 평가는 후보 호감도로, 실제 후보 입장은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표시한 후보 입장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표시한 후보 입장의 평균으로 실제 후보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후 코노버와 펠드만(Conover and Feldman, 1982)은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켜 유권자가 후보 입장을 인식하는 과정에 유권자가 인지하는 후보 소속정당의 입장을 포함한 모형을 제안했다. 그들은 이슈에 대한 투사가 응답자 입장, 후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후보 소속 정당의 입장, 후보 이념 성향, 온라인 뉴스와 신문 이용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모형 분석을 통해 정

30) 설득과 투사에는 정당일체감(호감도)에 의한 설득과 후보 호감도에 의한 설득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초기 설득 효과 연구들에서 명확히 구분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당에 의한 설득 효과를 중점 있게 다루기 때문에 본 연구도 정당일체감에 의한 설득에 초점을 맞췄다.

당의 이슈 입장을 함께 분석했을 때 투사나 설득 효과가 일정 부분 해소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고려해 후보의 이슈 입장을 추론한다는 것이다(Conover and Feldman, 1982; Feldman and Conover, 1983).

최근 실험 방법론의 개발 등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설득/투사 효과를 더 면밀히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연구들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유권자에게 정보가 부족하고, 후보의 입장이 강할 때 설득이 일어나게 된다는 초기 연구들에 따라 후보의 입장을 제시하는 등 실험 설문 방식을 통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확실하고 강한 후보의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설득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최신 연구 방법론들을 도입한 연구자들은 최근 유권자들이 정당 입장에 쉽게 설득된다는 전통적 입장에 반하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포함한 정체성 요인이나 감정 호소 등에 비합리적으로 설득된다는 주장과 그를 받쳐주는 많은 연구가 최근까지도 정책 선거 연구에서 해결하고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믿음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많은 연구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쉽게 설득되지 않으며 오히려 후보/정당이나 감정 등에 의한 설득의 효과가 없거나 거의 0에 가까우며 있더라도 빠르게 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Bartels, 2014; Coppock *et al.*, 2019; Hill *et al.*, 2013; Kalla and Broockman, 2018). 힐 등(Hill *et al.*, 2013)은 설득 효과는 있더라도 빨리 사라지며, 대통령 선거보다는 지역 선거들에서 그 효과가 더 빨리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칼라 등(Kalla and Broockman, 2018) 역시 선거 캠페인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설득의 효과를 살폈는데, 후보자가 상당히 특이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캠페인에 많은 투자를 한 경우 외에는 캠페인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 기간을 많이 남기고 설득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역시 빨리 사라졌다. 바텔스(Bartels, 2014)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칼라 등(Kalla and Broockman, 2018)이 메일, 전화, 방문 방식을 통한 설득을 살폈다면, 바텔스는 영상을 통한 설득의 효과를 검증했다.

실험 방법을 사용했으며, 영상을 통한 설득이 제한적인 영향만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광고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지 않았거나 영상 속 후보를 이미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 무당파 유권자들에게는 설득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미 해당 캠페인 속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텔스는 영상이 제공하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최근 연구 결과들은 유권자들이 당파심이나 후보에 대한 호감도만으로 쉽게 설득되지 않으며, 설득이 여러 조건 속에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설득의 방향에 이미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의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설득의 無 효과 혹은 제한적 효과에 관해 주장하는 연구들은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이슈 태도가 얼마나 후보/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지 의문을 가졌던 전통적 연구들에 대한 반론이다.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로 설득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설득과 투사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대립이슈 논의에 근거해 이슈 태도를 찬/반의 형태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이슈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 또한 설득과 투사효과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동시에 그 영향을 관찰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에서의 이슈투표 과정을 살피기에 앞서 합의이슈에 대해 설득과 투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공간모형에서 설득, 투사와 마찬가지로, 이슈선점 연구가 직면하는 도전 중 대표적인 것이 정당일체감과의 구분이다(Stubager, 2018, 352쪽). 캠벨 등(Campbell et al., 1980, 130-135쪽)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인식의 스크린으로써 정치적인 대상들을 정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슈소유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정당일체감에 따라 선호정당에 더 우호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슈소유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도 했

다(Bellucci, 2006; Kuechler, 1991; Stubager and Slothuus, 2013; Wagner and Zeglövits, 2014). 이슈소유와 단기적 이슈선점을 구분한 스투버거 (Stubager, 2018)에 따르면, 이슈소유는 정당일체감으로부터 독립적이었으나 단기적 이슈선점은 정당일체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이슈중요도 역시 정당일체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가 강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들이 해당 이슈를 중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은 유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Pass, 197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과 이슈소유/이슈선점, 이슈중요도와 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종 모형에 정당일체감을 포함하거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정당일체감을 통제할 것이다.

제 4 절 소 결

이슈투표란 유권자가 본인의 이슈 선호를 후보 선택에 반영하는 모든 방식의 투표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정당이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방식, 그리고 유권자가 정당의 공약을 인지하고 본인의 선호를 기준으로 평가해 표에 반영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 이슈는 ‘경쟁과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며, 이슈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에 근거해 투표하는 것’이다.

이슈투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제가 필요하다. 제1절에서는 이슈투표 모형의 기본 전제인 민주주의 정치체제, 정당의 득표 극대화, 합리적 유권자에 대해 검토했다. 본 연구 모형 역시 ‘유권자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내에서 득표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에 대해 효용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투표한다’라고 가정한다. 후보는 공정한 선거 규칙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유권자는 투표 과정에서 동일한 크기의 권리를 갖는다. 본 연구는 후보의 공약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권자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 기간에는 선거 제도 등 이슈투표의 환경적 요인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합리적 유권자의 합리성은

과정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이는 비합리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합리적 이슈투표의 기본 모형인 다운즈 모형을 검토하고 그의 수정 모형으로써 다양한 공간모형에 대해 정리했다. 이를 통해 공간모형이 유권자의 입장이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대립이슈에 한정해 이슈투표를 분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부각될 경우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에서 주목받은 이슈가 합의이슈인지 대립이슈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선거 맥락을 고려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의이슈 모형 설계를 위한 개념 정의와 이론적 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문헌들을 제3절에서 검토했다. 합의이슈는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가치가 매겨져 정당과 연결된 이슈(Stokes, 1963)”로 수단보다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후보들은 합의이슈를 ‘얼마나 잘 해결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경쟁하며 이는 이슈선점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정당은 과거의 성과에 따라서 이슈를 소유할 수 있으며, 후보는 공약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이슈를 단기간에 선점할 수 있다. 유권자의 합의이슈에 대한 선호는 주관적인 중요도 점수 혹은 이슈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제2장에서 축적한 이론적 자원들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두드러졌을 때 후보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권자의 이슈선점 평가와 이슈중요도가 후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설득과 투사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모형: 합의이슈 모형

제2장에 따르면, 이슈는 대립이슈(positional issue)와 합의이슈(valence issue)로 나눌 수 있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선거에서 부각된 이슈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이슈도 선거에서 합의이슈 혹은 대립이슈 중 어느 것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 파파로와 루이스백(Paparo and Lewis-Beck, 2019, 3쪽)의 비유를 인용하자면, 경제 이슈의 경우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합의이슈이지만,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대립이슈가 된다. 많은 사람이 안전한 도로를 선호하지만(합의이슈), 모든 사람이 경찰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대립이슈). 따라서 선거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동일한 이슈 영역에서 합의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고, 논쟁적인 대립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다. 강우진 (2013b) 역시 그의 논문에서 한국에서 경제 투표가 합의이슈 관점에서만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한다. 이렇듯 선거 상황에 따라 부각되는 이슈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 필요하게 된다.

1.1 정당의 전략

정당은 합의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이슈소유 혹은 이슈선점으로 전략을 세운다. 만약 해당 이슈가 이미 정당이 장기간에 걸쳐 소유한 이슈라면, 정당은 해당 이슈가 선거에서 더욱 부각되도록 강조하고 자주 언급할 것이다. 만약 정당이 소유한 이슈가 아니라면, 정당은 두 가지의 전략 중 선택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가능한 그 이슈가 선거에서 부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외면하는 것이다. 상대 정당이 해당 이슈를 소유했을수록 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슈가 현재 해결수록 정당에 불리하고 상대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해당 이슈의 선점을 시도하는 것이다. 해당 이슈가 새로 부상한 이슈거나 정당 소유가 불분명할 때, 비록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상대 정당 정권이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을 때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과 후보는 자신이 해당 이슈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거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거나, 선거에서 공약 등을 통해 해당 이슈를 강조하고 1순위로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1.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부각되었고, 어느 한 정당이 이를 소유하고 있을 때,

1. 해당 이슈를 소유한 정당은 그 이슈를 강조하고 선거에서 더 부각한다.
2. 해당 이슈를 소유하지 않은 정당은 그 이슈를 가능한 언급 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

전략 2.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부각되었고, 이슈소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정당은 이슈선점을 시도한다.

전략1과 전략2가 정당의 주 전략이라면 후술할 전략3과 전략4는 정당의 부수적 전략이다. 본 연구는 전략1과 전략2를 중심으로 후보 공약을 분석하고, 일부 경우에 한 해 전략3과 전략4를 고려할 것이다. 이슈선점의 원료는 정당이 그

동안 보여준 성과, 후보의 특성, 정당의 공약과 선거 캠페인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제18대, 제19대 대선 자료를 통해 제4장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편, 이슈의 경쟁은 합의이슈 대 합의이슈가 아닌 합의이슈 대 대립이슈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합의이슈 소유에 대해 반대 정당이 의도적 외면이나 이슈선점이 아니라 대립이슈로 대응할 수 있다면 위의 전략에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합의이슈 경쟁에서 상대 정당이 이슈선점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오히려 해당 합의이슈가 속하는 이슈 영역의 대립이슈를 부각함으로써 이슈 입장에 대한 논쟁을 부추기고 유권자 간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다면, 예컨대 경제성장에 대한 정당의 경쟁은 구체적인 경제 정책들에 대한 경쟁으로 바뀔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이슈들을 완전히 공간 모형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오히려 합의이슈를 강조한 정당의 입장은 유권자들에게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이론적 검토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던 다운즈의 소수 입장 연합 논의와 비슷하다. 특정 이슈에 대해 다수 입장과 소수 입장이 있을 때 정당은 두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득표를 최대화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라는 점을 상기했을 때 당연히 다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다운즈는 집권당이 다수 입장을 선택했을 때 반대정당이 소수 입장을 선택함으로써 집권당에 대응하고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Downs, 1957, 93-94쪽).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 다수가 어느 정도 선호하고 소수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하나 이상의 이슈에 대해 소수 입장을 갖고 있을 때 집권당이 모든 이슈에 대해 다수 입장을 지지한다면, 유권자는 각자가 소수 입장을 갖는 이슈에 근거해 반대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이다.¹⁾ 왜냐하

1) 다운즈가 지정한 반대당의 승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의 과반수가 [쟁점들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에 속하는 몇몇 쟁점에서 각기 소수 입장에 선다. 즉 시민의 과반수가 최소 한 번 이상은 [어떤 개별 정책]에 대해 [다수가 선호하는 정책 대안]보다 [소수가 선호하는 정책 대안]을 선호한다. (2) [쟁점들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내의 쟁점들 가운데 모두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 소수 입장을 갖는 각각의 시민들은, 자신이 다수 입장에 있을 때보다 소수 입장에 있을 때 찬성한 정책에 더 강한 선호를 지닌다.

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슈에 대해 집권당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가져오는 효용의 감소가 반대당에 투표할 만큼 크기 때문이다.

합의이슈가 가치와 목표를 담는 이슈인 만큼 유권자들의 입장은 얼마나 중요한가로 구분될 뿐 그 자체로는 모두가 동의하고 추구하는 이슈이다. 하지만 대립이슈의 경우 유권자들의 입장이 나뉘며, 선거에서 부각되는 대립이슈일수록 양 진영 간 대립이 뚜렷한 경우가 많다. 다운즈의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²⁾ 합의이슈가 부각된 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당이 대립이슈를 강조하는 상황을 설명할 단서를 제공해 준다. 대다수가 추구하는 합의이슈를 다수입장처럼 생각한다면, 반대 견해를 보인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대립이슈가 소수 입장처럼 작용할 수 있다. 대립이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즉 강하거나(strong)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합의이슈보다 대립이슈에 의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A가 다수의 합의이슈에 대해 이슈소유에 성공하더라도 정당B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대립이슈를 찾아내 이에 동의하는 소수(대다수의 상대 개념으로써의 소수)를 공략한다면 이는 정당A에게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합의이슈가 부각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해당 이슈들을 소유하거나 선점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상대 정당은 무리해서 합의이슈를 공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응할만한 대립이슈를 찾아내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3. 합의이슈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 정당은 대립이슈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두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각 정당은 좀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내세울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상대 정당이 소유한

(3) 반대당은 [쟁점들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내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집권당보다 먼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쟁점들의 전체 집합] 속의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집권당의 입장이 먼저 밝혀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Downs, 1957, 93-94 쪽).”

2) 앞서 각주에서 정리한 조건 외에 더 자세한 부분들은 다운즈의 책 4장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중심적인 논의만 합의이슈에 적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다운즈의 논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슈의 탈취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슈소유권이 분명할수록 이는 오히려 해당 이슈를 더욱 부각하는 결과만 일으키고, 탈취를 시도하는 정당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에는 한 가지 제한이 있다. 정당이 소유하고 있는 이슈와 자칫 충돌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선점이나 소유를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운즈가 정당이 정책에 대한 정직성과 책임성 때문에 정당들이 이념 공간에서 서로를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Downs, 1957, 189-190쪽).

전략 4. 정당은 반대 진영의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대 진영이 소유한 이슈에 대해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

이상의 전략들은 정당이 선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이다. 다음 절에서는 합의이슈를 고려했을 때 유권자의 효용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정당일체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2 유권자의 선택

본 연구는 합의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을 유권자의 이슈소유/이슈선점 인식과 이슈중요도로 구성된 효용함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정당의 합의이슈 선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이슈 평가 모형*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초기 다운즈 모형(식2.1)이 정당의 미래 기대효용을 비교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합의이슈 평가 모형* 역시 정당의 기대효용을 비교하고 가장 효용이 큰 정당에 투표한다고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도 다운즈가 모형을 구축해나간 방식대로 가장 이상적인 모형에서 출발해 현실의 제약을 모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수정해 나갈 것이다.

A, B 두 정당이 경쟁한다고 할 때, 유권자는 $t + 1$ 시점(당선된 이후 선거주기)에 가장 큰 효용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에 투표한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의 기본 형태(식3.1) 또한 식2.1과 같다. 식3.1의 값은 유권자가 이슈로부터 얻는 정당 간 기대효용의 차이이다. 식3.1의 계산 값이 0보다 크면 A정당에, 0

보다 작으면 B정당에, 0이면 기권하거나 이슈가 아닌 다른 투표 결정 요인에 근거해 투표한다.

$$E(U_{t+1}^A) - E(U_{t+1}^B) \quad (3.1)$$

만일 정당이 셋 이상이라면 유권자는 모든 정당의 기대효용을 비교하고 가장 효용값이 큰 정당에 투표한다. 만약 세 정당의 기대효용이 같다면 기권하거나 다른 투표 결정 요인에 근거해 투표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효용 U 는 정당의 전략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즉 정당의 이슈소유/선점에 대해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유권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의 함수이다. 먼저 유권자 본인의 이슈중요도가 이슈별로 존재할 것이다. 개인은 선거에서 부각된 합의이슈들에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거나, 각각의 이슈에 대해 중요도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순위를 매긴 경우에도 그 순위에 따라 이슈별로 점수를 줄 수 있다. 만약 해당 이슈가 유권자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가장 낮은 순위로 중요하다면, 0 또는 0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 i 가 이슈 k 에 대해 갖는 이슈 태도인 주관적 중요도 $w_{i,k}$ 는 다음과 같다.

$$w_{i,k} \geq 0 \quad (3.2)$$

유권자의 주관적 이슈중요도는 선거에서 이슈가 부각된 정도를 나타내는 이슈 현저성과는 구분되며, 합의이슈모형에서 유권자의 이슈 태도를 나타낸다. 공간모형에서 주관적 이슈중요도는 대체로 후보와 유권자 간 정책 거리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중치이다. 이슈가 중요할수록 정책 거리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가 합의이슈에 대해 갖는 선호로써, 정당의 이슈소유에 대한 인식 차이와 결합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슈중요도의 값이 0이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아래 투표모형(식3.7)에서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권자가 인식하는 정당의 입장은 이슈소유 혹은 이슈선점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로 나타난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슈를 소유한 것과 이슈를 선점한 것 모두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의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인식하는 장기적 이슈소유와 단기적 이슈선점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Stubager, 2018; Bellucci, 2006)에 따라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는 단기적 이슈선점에 초점을 맞추고 후보가 이슈를 강조한 정도로 측정했다.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의 입장에 대해 유권자는 정당이 해당 이슈를 소유/선점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의 강조 여부로 나타난다. 유권자 i 가 이슈 k 에 대해 후보 j 가 강조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면 식3.3과 같다. 후보 j 가 이슈를 강조했다고 생각하면 1, 이슈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0의 값을 갖는다.

$$C_{i,j,k} = 0 \text{ or } 1 \quad (3.3)$$

혹은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값을 부여할 수 있다. 역시 후보가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투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질 것이다.

$$C_{i,j,k} = d \ (d \geq 0) \quad (3.4)$$

유권자가 이슈에 대한 정당의 태도를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간결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대로 합의이슈는 포괄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슈의 상징성이 더 크고 대립이슈보다 간결한 모습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위의 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당의 입장 또한 ‘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므로 유권자들에 따라 많은 정보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당 간 비교가 간결해지면서 이슈중요도는 위에서 지정한 대로 가중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권자마다 중요한 이슈가 다르고 선거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효용값을 이슈마다 계산하고, 각 이슈에서 어떤 정당이 유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합의이슈 효용함수인 합의이슈 평가 모형에서 유권자 i 의 이슈 k 에 대한 후보 j 기대효용값 $U_{i,j,k}$ 은 식3.5와 같다. 선거에서 부각된 합의이슈가 m 개 있다면, 유권자 i 의 기대효용 $U_{i,j,k}$ 는 m 에 정당의 수를 곱한 수만큼 존재한다.

$$U_{i,j,k} = w_{i,k}C_{i,j,k} \quad (3.5)$$

위와 같은 모형은 마치 소비자가 몇 개의 기준으로 기업의 상품을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시장에 A, B, C의 세 기업이 경쟁하고 각 회사의 상품이 세 가지 기능으로 평가받을 때 소비자는 기능별로 기업을 비교할 수 있다. 기능1에 대해 ‘A회사 상품=B회사 상품>C회사 상품’과 같이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이다. A, B회사의 상품이 C회사보다 좋기 때문에 기능1이 중요할 때는 A와 B회사를 선호하게 되는데 두 회사가 무차별하므로 이때는 더 선호하는 다른 기능을 비교해보거나,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면 기능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상품 구매를 선택할 것이다. 각각의 기업들이 기능별로 얼마나 우수하고, 각 기능에 대해 소비자가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계산한 뒤, 그 평점을 비교할 수 있다.

선거에서 주요 후보가 셋 이상일 때 후보의 입장 비교는 단순히 ‘서로 차이가 없다’ 혹은 ‘누가 더 낫다’로 나누어 1 혹은 0의 값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별, 이슈별 효용함수를 계산해 비교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당제와 다당제의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며, 양당 구도로 2012년 제18대 대선을, 다당 구도 선거로 2017년 제19대 대선을 사례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제2장 제3.2절에서 검토한 대로 정당은 소유한 이슈를 선거에서 가능한 강조하려고 하고, 이슈선점 또한 해당 이슈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며 이슈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연구들은 이슈소유를 ‘이슈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을 고르는 방식으로 측정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당보다는 후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이슈를 ‘가장 강조한 후보’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즉, 이슈

소유가 아닌 선거 당시의 이슈선점 시도를 측정하고자 했으며, 제1 절의 1.1에서 정리한 정당의 이슈소유/선점 전략은 제4장에서 정당 공약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양당제의 경우

후보가 a, b 두 명인 경우 유권자 i 는 특정 이슈 k 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더 나은지, 혹은 두 후보가 차이가 없는지 정도를 구별하기만 하면 된다. 이에 대한 경우의 수는 [표 3.1]과 같다. 후보a와 후보b의 입장은 0 또는 1이므로 유권자가 인식하는 이슈선점은, 두 후보의 입장이 같거나, 후보a가 차별적으로 강조했거나, 후보b가 차별적으로 강조했을 경우일 것이다.

표 3.1: 합의이슈에 대한 후보의 이슈선점: 양당제의 경우

	후보a 강조	후보a 강조하지 않음
후보b 강조	$C_{a,i,k} = 1, C_{b,i,k} = 1$	$C_{a,i,k} = 0, C_{b,i,k} = 1$
후보b 강조하지 않음	$C_{a,i,k} = 1, C_{b,i,k} = 0$	$C_{a,i,k} = 0, C_{b,i,k} = 0$

양당제의 경우 두 정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정당a와 정당b의 효용 차이는 $U_{a,i,k}$ 와 $U_{b,i,k}$ 의 차이일 것이다. 양당제에서 유권자 i 가 이슈 k 에 대해 갖는 효용 $U_{i,k}$ 는 다음과 같다.

$$U_{i,k} = U_{a,i,k} - U_{b,i,k} = w_{i,k}C_{a,i,k} - w_{i,k}C_{b,i,k} = w_{i,k}(C_{a,i,k} - C_{b,i,k}) \quad (3.6)$$

이 때, $C_{a,i,k}$ 와 $C_{b,i,k}$ 는 0 또는 1이므로 $U_{i,k}$ 는 다음과 같다.

$$U_{i,k} = -w_{i,k} \text{ or } 0 \text{ or } w_{i,k} \quad (3.7)$$

위의 양당제 모형은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만일 이슈선점만을 변수로 고려한다면 $w_{i,k}$ 가 생략될 것이다. 이슈선점만을 고려했을 때의 기대효용은 후

보a가 더 강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1, 반대의 경우 -1이 된다. 두 후보가 동일하게 해당 이슈를 강조했거나 강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0이 된다. 후보의 입장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에도 해당 이슈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권자가 생각하는 이슈의 중요도가 생략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가 강조만 한다면 해당 이슈를 보고 투표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식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권자의 이슈중요도가 0일 경우 정당의 이슈선점 여부와 상관없이 효용은 0의 값을 갖는다. 정당이 이슈를 소유/선점했더라도 유권자가 해당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슈에 근거해 투표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이슈선점만 고려하는 경우 이슈에 전혀 관심 없는 유권자들의 선호가 왜곡되며, 특정 이슈에 아주 강한 선호가 있는 유권자들의 선호도 과소평가 된다.

둘째, 반대로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의해서만 투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유권자는 정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 간 비교 없이 $w_{i,k}$ 에 의해서만 투표한다. 이러한 모형은 유권자의 이슈중요도만 담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이슈k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투표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다. 두 정당 간 이슈소유/선점이 무차별할 때 이슈가 중요해도 정당 간 차이가 없으므로 기대효용 차이는 0이 되는데, 이슈중요도만 고려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 인식 차이가 0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합의이슈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특정 합의이슈에 대해 정당 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 모두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해당 이슈에 기대하는 효용은 0이다. 따라서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둘을 결합한 것이 식3.7이다. 이슈중요도 $w_{i,k}$ 는 대립이슈 모형에서 추정되는 모수로서의 가중치가 아닌 유권자가 직접 드러낸 이슈중요도로 관찰 값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유권자의 이슈별 효용값을 계산할 수 있고, 이 효용값이 후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력의

정도를 회귀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다당제의 경우

다당제에서의 모형은 양당제 모형과 비슷하지만, 후보가 셋 이상인 경우 이슈선점 비교를 $-1, 0, 1$ 과 같은 형태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르다. 다당제의 경우에도 효용함수는 다음 식3.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후보가 얼마나 특정 이슈를 강조했는지 측정하고, 이를 유권자의 이슈중요도와 결합한 아래 효용값을 이슈 평가점수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본 모형의 유권자들은 이슈 평가점수를 계산한 뒤에 후보별로 비교한다.

$$U_{i,j,k} = w_{i,k} C_{i,j,k} \quad (3.8)$$

만약 a, b, c 세 후보가 출마했고 각각 세 개의 이슈에 대해 공약을 제시했을 때, 유권자 i 의 각 이슈에 대한 중요도가 순서대로 1, 2, 3이라면 a, b, c 후보 각각이 얼마나 세 이슈를 강조했는지에 따라 기대효용을 구할 수 있다. 만약 후보가 해당 이슈를 강조한 정도를 점수로 표현한다면, a, b, c 후보에 대해 유권자 i 는 각각 일정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권자 i 가 a후보는 이슈들을 순서대로 1, 2, 3만큼 강조했고, b후보는 세 이슈 중 1번 이슈만 3만큼 강조했고, c후보는 1, 2번 이슈는 3만큼씩, 3번 이슈는 강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슈1에 대해 세 후보의 기대효용값은 a후보는 1점, b후보는 3점, c후보는 3점이 된다. 이슈2에 대해서는 a후보는 4점, b후보는 아예 강조하지 않았으므로 0점, c후보는 6점이 된다. 이슈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대효용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이슈 평가점수는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 인지의 곱으로 식3.8의 $U_{i,j,k}$ 값이다. [표 3.2]와 같은 경우 이슈1을 기준으로 후보b와 후보c 중의 한 명을 선택하게 되며, 두 후보의 점수가 같기 때문에 이슈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이슈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슈2를 기준으로 후보c를, 이슈3을 기준으로 후보a에게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다당제 모형에서는 이슈별 후보별로 기대효용을 계산하고 이를 각

표 3.2: 세 후보가 출마한 경우 유권자 i 의 이슈선점 인지와 이슈평가점수

	이슈 중요도	이슈선점 인지			이슈평가 점수		
		후보a	후보b	후보c	후보a	후보b	후보c
이슈1	1	1	3	3	1	3	3
이슈2	2	2	0	3	4	0	6
이슈3	3	3	0	0	9	0	0

이슈에 대해 후보별로 비교해 높은 쪽에 투표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유권자 i 가 후보 j 라는 대안을 선택, 즉 $Y_i = j$ 는 유권자 i 가 선택 가능한 대안의 집합 C_i 중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안 j 를 선택한다. 즉 “ $U_{i,j} \geq \max\{U_{i,l} : l \in C_i, l \neq j\}$, $Y_i = j$ 라는 선택이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된 것이다(고길곤, 2018, 179쪽).”

본 연구에서는 다당제 모형을 통해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의 이슈투표를 설명할 것이다. 2017년 대선은 총 5명 주요 후보의 경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응답자들은 5명의 후보에 대해 각각 이슈별로 효용값이 있고, 효용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슈별 효용값이 달라지므로, 응답범주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³⁾가 있는 연구 모형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로지스틱 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조건부 로지스틱 모형에서 유권자 i 가 후보 j 를 선택할 확률은 식3.9와 같다(McFadden, 1974, 1978). 이때 $X_{i,j}$ 는 유권자 i 가 후보 j 를 선택했을 때 독립변수의 벡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선거에서 총 5명의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모형이므로, $j \in \{1, 2, 3, 4, 5\}$ 이다.

$$P_{i,j} = \frac{e^{\beta X_{i,j}}}{e^{\beta X_{i,1}} + e^{\beta X_{i,2}} + e^{\beta X_{i,3}} + e^{\beta X_{i,4}} + e^{\beta X_{i,5}}} \quad (3.9)$$

조건부 로지스틱 분석은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t of irrele-

3) 본 연구의 경우 응답범주는 후보 선택이고, 변화하는 변수는 각 이슈에 대한 효용값이다.

vant alternative)을 전제한다. 이는 두 대안, 예컨대 A와 B 대안의 선호가 오직 두 대안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A, B 대안 중에서 A가 더 선호될 때, 새로운 대안 C가 존재한다고 해서 B가 A보다 더 선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건부 로지스틱에서는 두 대안 A, B의 확률의 비율이 오로지 두 대안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다른 대안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르면 추정된 회귀계수는 대안의 조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길곤, 2018, 179쪽). 본 연구모형에서는 효용값을 이슈별 후보별 각각 계산하고, 후보 둘의 선택의 확률의 비율이 두 대안에 의해서 결정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선택하므로 이 조건을 만족한다.

본 연구에서 조건부 로지스틱 모형의 종속변수는 후보 선택으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5명의 후보이고, 비교 기준인 참조 대안(reference choice)은 문재인 후보이다. 설명변수는 대안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이슈별 후보별 기대효용으로, 유권자에 따른 효용값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모형 1). 이후 [모형 2]는 [모형 1]에 성별, 나이, 최종학력, 소득수준 등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 그리고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을 포함해 추가 분석했다. 이 때 위와 같은 일반적 조건부 로지스틱 모형이 아닌 맥파든(McFadden, 1974, 1978) 모형 (혹은 대안 특정 조건부 모형(alternative-specific conditional logit))으로 분석했다. 이는 일반적인 조건부 로지스틱 모형에서 인구학적 변수 등은 개인이 선택하는 대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수(case-specific variables)로 분석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변수와 정당일체감을 포함한 [모형 2], 정당일체감에 따라 집단을 나눠 분석한 [모형 3], 마지막으로 대립이슈를 포함한 [모형 4]는 대안-특정 조건부 모형으로 분석했다.⁴⁾

정당일체감과 후보 호감도는 투표 결정 시점에서 유권자의 이슈 선호와 함께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송진마·박원호, 2014; Simas, 2013), 이슈 선호나 공약

4) 일반 조건부 로지스틱 모형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택 대안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포함한다.

인식 형성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장승진, 2013; 한정훈, 2015; Carsey and Layman, 2006)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유권자의 이슈 소비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설득과 투사 효과에 대해 제5장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슈 평가 모형에서의 이슈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합의이슈 평가 모형에도 두 변수를 모형에 포함해 통제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모형: 정당일체감에 의한 투사, 설득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설득과 투사의 논의는 이슈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정당일체감과 유권자의 정책 태도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여 왔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⁵⁾. 브로디와 페이지(Brody and Page, 1972, 450-451쪽)는 가설적으로는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고, 이것이 당파심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쉽게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횡단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슈의 단기적 효과는 횡단(cross section) 분석에서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연구들은 정책과 정당 지지 사이의 더욱 확실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데이터와 분석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로디와 페이지(Brody and Page, 1972)의 연구 이후 지금까지 약 40여 년 간 많은 연구자가 정책과 정당일체감 사이의 선후 관계를 밝히기 위한 많은 방법을 개발해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실험 설문 방식이다. 또한, 최근에는 동일 유권자들을 오랜 기간 관찰하고 직접적으로 정책 입장 변화와 정당일체감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5년간 추적된 패널 데이터의 활용, 비재귀 구조방정식 모형과 같은 방법론 활용 등을 통해 이슈 선호와 정당일체감 사이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5) 제2장 참조

표 3.3: 정당일체감 변화에 따른 집단 구분

2012년 지지 정당	2017년 지지 정당	집단 구분
무당파	무당파	견고한 무당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층
민주당	민주당	정당 지지층
새누리당	무당파,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부동층
민주당	무당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부동층

설득과 투사 연구들은 대체로 유권자들의 당파심(partisanship)을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으로 이해한다. 브로디와 페이지 역시 정당일체감이 경험에 의해서 변화되기 어려운 장기적 태도이며, 고정적 결정(standing decision)이라고 표현했다. 본 연구 역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강한 정치적 충격이나 사건과 같이 예외적 경우(예컨대, [송진미 \(2019\)](#) 참조) 외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가정한다([박원호·신화용, 2014](#)).

2.1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과 합의이슈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 모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모형은 2012-2017년 5년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표 3.3]과 같이 집단을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다. [표 3.3]의 집단별로 이슈선점 평가와 이슈중요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정당일체감 변동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집단별 정치적 태도를 비교하게 되면 정당일체감 변화를 통제하는 것과 같다. 정당일체감을 고정한 뒤 이슈 태도를 살핀다는 점에서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이다.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을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얼마나 안정적인었는지 살펴보고, 안정적인 집단과 유동적인 집단,

그리고 견고한 무당파층으로 집단을 나눠 각 집단의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안정적인 정당일체감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정당의 이슈선점이 수년간 유지된다면, 즉 모든 집단에서 장기간 특정 정당이 해당 이슈를 선점해왔다고 응답한다면, 해당 이슈를 정당이 소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당파층과의 비교를 통해 이슈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견고한 무당파층은 정당일체감과 독립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슈선호 변화를 통해 정당일체감과 독립된 이슈 선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2.2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이슈선점 인식과 유권자의 이슈 태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을 활용한다.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과의 차이는 투표의 순간에 일어나는 단기적인 설득과 투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말하는 맹목적 설득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과 이슈 태도 사이의 관계이므로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은 이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또한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과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의 비교는 장/단기적으로 정당일체감이 이슈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다.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은 특정 시점(t)의 후보(혹은 정당) 입장(C_t)과 유권자 입장(V_t)⁶⁾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때 두 변수는 연속변수인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t 시점의 후보 입장(C_t)에는 이전 시점($t-1$)부터 응답자가 갖고 있던 정당 입장에 대한 생각(C_{t-1})과⁷⁾ t 시점에 자신이 가진 이슈에 대한 입장(V_t)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3.10과 같다. 이때 b_2 가 응답자 입장이 정당 입장에 미치는 영향인 투사(projection) 효과이다.

6) 본 연구에서는 $V_t = w_t$

7) 유권자가 생각하는 정당의 입장으로, 실제 정당의 입장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정당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에 따라 투사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 기존연구들은 식3.10의 응답자 입장(V_t)에 정당평가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통해 투사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Markus and Converse, 1979; Conover and Feldman, 1989).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t 시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응답자들을 나누고,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투사 효과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항 대신 집단을 나누는 방식을 취한 것은 본 연구모형이 경로모형이기 때문이다.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모형에 포함할 수 있지만, 모형이 복잡해지고,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집단을 나눠 각각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C_t = a + b_1 C_{t-1} + b_2 V_t + e_t \quad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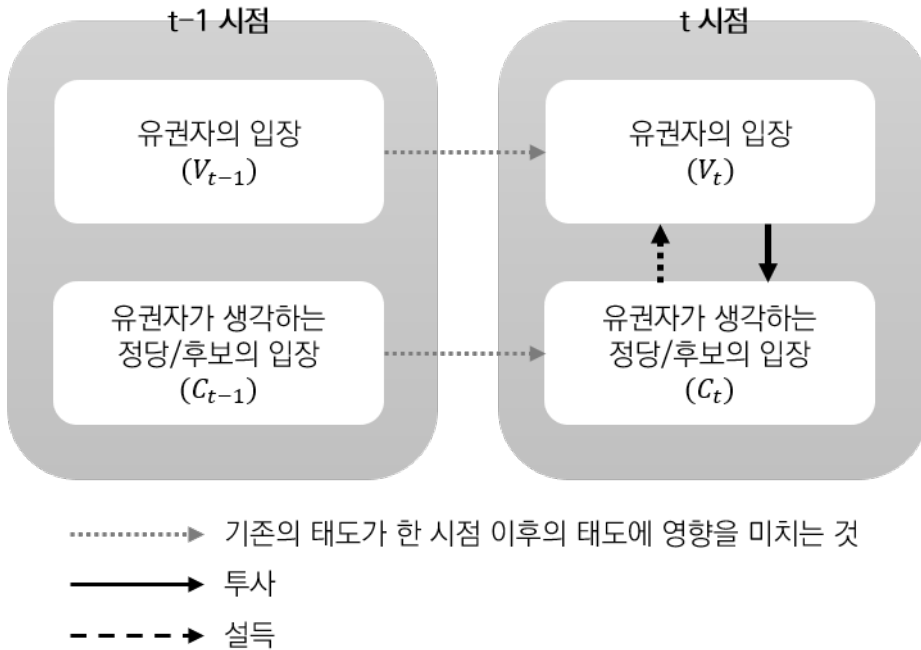
이 때, 나이, 소득수준, 학력, 거주지역, 이념 성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변수이면서 응답자의 이슈 선호나 정당 입장을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노버와 펠드먼(Conover and Feldman, 1989)은 2단계 최소제곱법 분석을 통해 첫 번째 단계에서 $t-1$ 시점의 정당 입장(C_{t-1})을 정당일체감, 연령, 인종 등의 변수로 추정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것이나,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활용해 더욱 직접적으로 유권자의 의견 형성과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t 시점의 응답자 입장(V_t)이 t 시점의 정당 입장(C_t)에 의해 설득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면 식3.11과 같다. 식3.11의 b_2 는 설득효과를 의미한다. t 시점의 유권자 태도(V_t)는 그 이전 시점($t-1$)의 유권자 태도(V_{t-1})와 t 시점의 정당 입장(C_t)에 영향을 받는다.

$$V_t = a + b_1 V_{t-1} + b_2 C_t + e_t \quad (3.11)$$

설득과 투사, 그리고 추론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식 3.10과 식 3.11은 동시에 함께 추정해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설득과 투사 연구 모형



만약 대북지원에 찬성하는 유권자 값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는 선거 이전부터 대북지원에 반대했으므로 이후에도 대북지원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수정당의 후보들이 이전부터 대북지원에 반대했다고 생각했다면, 이후에도 보수정당의 후보가 대북지원에 반대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전에 갖고 있던 의견이 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그림 3.1에서 회색 점선 화살표로 나타나 있다. 유권자의 t 시점에서의 입장은 $t-1$ 시점에 갖고 있던 기존의 의견에 영향을 받으며, 유권자가 t 시점에 정당 입장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t-1$ 시점에 갖고 있던 생각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설득과 투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유권자 값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입장에 설득될 수 있다. 이 과정이 합리적으로 다른 후보와의 공약 비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아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혹은 오랫동안 지지한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라갈 수도 있다. 이것이 설득으로, 그림 3.1에서 검은색 점선이다. 유권자 값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갑이 좋아하는 후보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그 의견을 따라 대북지원에 찬성한다면 후보에게 설득된 것이다. 반대로 갑이 후보의 입장을 알아보지 않고 본인만 대북지원에 반대하기 때문에 후보도 반대하리라 생각하는 것이 투사이다. 투사는 그림 3.1의 검은색 화살표이다.

유권자가 후보의 입장 추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설득 혹은 투사가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의 모형을 합의이슈에 대해서 추정할 것이다. 서로 영향을 받는 t시점의 변수들을 동시에 추정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할 것이며, 이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수한 관계임을 고려해 비재귀(non-recursive) 모형⁸⁾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동시에 추정하는 식은 위에서 설명한 식 3.10과 식 3.11이다.

제 3 절 분석 자료 및 변수 조작화

3.1 분석 자료

제4장, 제5장, 그리고 제6장에서는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는 2012년 세 차례, 2017년 두 차례,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선거 전후의 여론 조사 자료를 수집했다.⁹⁾ 제19대 대선 온라인 패널 조사에서는

8) 모형의 화살표 흐름이 순환적임에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이를 비재귀적(non-recursive)이라고 표현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재귀적(recursive)라는 말은 일방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에 대해 김수영 (2013, 134-135쪽)은 표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귀모형은 일방향모형, 비재귀모형은 양방향모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 2012년과 2017년 여론조사는 동일한 기관과 동일한 데이터 수집업체에서 진행했으나 각각 서로 다른 연구 주제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조사 목적에 따라 자료의 특성이 약간 다르다. 2012년 조사의 경우, 트위터 사용자와 안철수 지지자들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표집했다. 두 집단은 각각 일반적으로 할당표집된 일반 응답자들과 트위터 사용자 중 표집된 응답자들로, 약 1.5:1의 비율로 표집했다. 구체적인 응답자 수는 제1차 조사의 경우 일반 패널 1,329명, 트위터 패널 922명, 제2차 조사의 경우 일반 패널 1,144명, 트위터 패널 777명, 제3차 조사의 경우 일반 패널 1,100명, 트위터 패널 743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패널 모두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위터 패널의 경우, 트위터 사용자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이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 자료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사 대상자에 제18대 대선 온라인 제1차 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을 추가로 포함했다. 제18대 대선 제1차 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에게 설문 참여를 요청했고, 이 중 782명이 참여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설문자료 목록은 [표 3.4]와 같다. 모든 자료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온라인 리서치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수집한 것이며, 표집 방법은 할당표집이다.¹⁰⁾ 이 외에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기관에서 수행한 2016년 선거자료를 함께 사용했다. 2016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역시 제19대 대선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모든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¹¹⁾ 온라인 조사의 경우 면접 조사에 비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비교적 긴 문장의 문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실험 문항을 포함해 문항 속에서 특정 조건을 제시하거나, 후속 문항을 더할 수 있는 점 등이 장점이다(장승진·송진미, 2017, 87쪽). 나아가 응답자를 추적해 다년간의 패널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 면접 조사에 비해 응답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3.2 변수 조작화

후보 선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 선택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 1,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 0으로 코딩했다. 2017

연구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형들에 대해 트위터 패널을 제외한 뒤에도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고 동일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했다.

- 10) 2012년 패널 응답자 수는 2012년 1차와 2017년 1, 2차 조사 모두 응답한 응답자 수이다. 2016년 패널 응답자 수는 2016년 1차와 2017년 1, 2차 조사 모두 응답한 응답자 수이다.
- 11) 2016년 자료의 경우 60대 이상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만 60세 이상의 경우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 조사에서만 60대 이상이 샘플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2016-2017년 패널데이터에는 만 60세 이상의 응답자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2016년의 경우 연령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2016년 자료는 2017년에 나타난 투사와 설득을 살펴보기 위해 동일인의 이슈선점과 이슈 태도가 얼마나 지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므로 대표성의 한계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 3.4: 분석하는 설문 자료 목록

조사명	조사시기	응답자	2012년 패널	2016년 패널
제18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 제1차	2012년 10월 31 일 ~ 11월 26일	2,251명		
제18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 제2차	2012년 12월 7 일 ~ 18일	1,921명		
제18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 제3차	2012년 12월 20 일 ~ 27일	1,843명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패널 조사 제1차	2016년 3월 29 일~4월 7일	3,000명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패널 조사 제2차	2016년 4월 27 일~5월 4일	2,308명		
제19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 제1차	2017년 4월 20 일 ~ 30일	3,686명	782명	1,765명
제19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 제2차	2017년 5월 16 일 ~ 24일	3,361명	739명	1,402명

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1, 홍준표 후보 2, 안철수 후보 3, 유승민 후보 4, 심상정 후보 5의 값을 부여했다. 기타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기권한 경우 제6장의 후보 선택 모형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슈중요도

합의이슈에 대한 이슈 태도는 이슈중요도로 측정했다. 2012년의 경우 응답자에게 경제성장, 후보들의 역사 인식,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복지정책, 교육개혁, 대북정책, 정치개혁, 그리고 기타 중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했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 1위라고 표시한 경우 3점, 2위라고 표시한 경우 2점, 3위라고 표시한 경우 1점, 그리고 1~3위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0점의 값을 부여했다. 제1차와 제2차 조사에서 이슈중요도를 조사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코딩했다.

2017년의 경우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통일/안보, 경찰/치안, 문화산업 활성화, 보건의료, 외교 국제교류, 부패 척결 등 10개 이슈에 대해 2012년과 마찬가지로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하고 0 3점까지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10개 이슈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0점)’부터 ‘중요하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중요도를 조사했다. 이슈의 순위는 제1차에서 조사했으며 이슈별 중요도는 제1차와 제2차 모두 조사했다. 제2차 조사에서는 ‘여성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추가로 조사했다.

그리고 2016년 제1차 조사에서는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활성화, 보건의료, 외교/국제교류 등 8개 이슈에 대해 2017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다(0점)’부터 ‘중요하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이슈중요도를 조사했다.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했다.

이슈선점

2012년 대선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후보들의 이슈선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보들의 선거 공보 등을 통해 어떤 이슈들을 강조했었는지 분석한 뒤 이를 유권자들의 이슈중요도와 연결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들의 이념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생각한 정당/후보의 이슈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와의 영향 관계 등을 통해 설득과 투사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 응답자들의 후보들에 대한 이슈선점 인지는 이슈중요도와 마찬가지로 제2차 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며,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통일/안보, 경찰/치안, 문화산업 활성화, 보건의료, 외교/국제교류, 부패 척결, 여성 정책 등 총 11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모든 이슈에 대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각각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경제성장]을 얼마나 강조했다

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하고,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강조했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가능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강조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므로 0점으로 코딩했고,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점, ‘보통’은 2점, ‘조금 강조했다’는 3점, ‘매우 강조했다’는 4점으로 코딩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2016년에는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 산업, 보건의료, 외교/국제교류 등 총 8가지 이슈에 대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보들이 각각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2017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강조했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했다. 역시 강조하지 않다고 한 경우 0점으로 코딩했고,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점, ‘보통’은 2점, ‘조금 강조했다’는 3점, ‘매우 강조했다’는 4점으로 코딩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슈선점 설문 문항과 변수 조작화는 [표 3.5]와 같다.

정당일체감과 후보 호감도

정당일체감은 2012년 제1차, 제2차, 제3차 모두에서 조사했다.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무엇인지 묻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때 ‘없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에게는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정당이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이라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경우 2의 값을, ‘진보정의당’, ‘기타’ 혹은 ‘통합진보당’이라고 응답한 경우 3의 값을,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2017년 제1차, 제2차 조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일체감을 조사했으며, 무당파의 경우 0,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1,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2, 국민의당 지지자는 3, 바른정당 지지자는 4, 정의당 지지자는 5의 값으로 코딩했다.

후보 호감도는 주요 후보들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질문하고 온도계로 그

표 3.5: 이슈선점 변수 조작화

<i>2016년 제2차 조사</i>	
설문문항	다음은 이번 총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더불어민주당 후보/국민의당 후보]들이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조사대상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활성화, 보건/의료, 외교/국제교류
변수 조작화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0) ~ 보통(2) ~ 매우 강조했다(4)
<i>2017년 제2차 조사</i>	
설문문항	다음은 이번 대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문재인 후보/홍준표 후보/안철수 후보/유승민 후보/심상정 후보]가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조사대상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통일/안보, 경찰/치안, 문화산업 활성화, 보건의료, 외교/국제교류, 부패 척결, 여성 정책
변수 조작화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0) ~ 보통(2) ~ 매우 강조했다(4)

정도를 표시하게 했다. 대단히 부정적인 0°C부터 대단히 호의적인 100°C까지 응답자들은 직접 온도계의 눈금을 움직여 후보에 대한 온도를 표시했다. 2012년에는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2017년에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 대한 심리적 온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회경제적 변수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독립변수 외에 유권자의 이슈 태도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구소득, 최종학력, 그리고 유권자 본인의 이념 성향을 조사해 통제변수로 모델에 포함했다. 유권자 거주지역은 ‘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충청/대전/세종’, ‘전라/광주’, ‘경상/대구/울산/부산’의 다섯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남성의 경우 1, 여성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연령은 만 연령을 조사해 그대로 사용했다. 교육 수준은 2012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는 1, 고등학교 졸업은 2, 대학재학/졸업 이상은 3으로 코딩했다. 2017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은 1, 중학교 졸업은 2, 고등학교 졸업은 3, 대학교 졸업은 4, 대학원 졸업은 5로 코딩했다. ‘무학(1명)’과 ‘기타(11명)’라고 응답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간격으로 1부터 11까지의 값으로 코딩했다. 유권자의 이념 성향의 경우에는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이념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측정했으며 일차원의 연속선 상에서 ‘매우 진보’는 0점, ‘매우 보수’는 10점으로 측정했다.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했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3.6]과 같다.¹²⁾

표 3.6: 주요 변수 기술통계

	2012년 제1차	2017년 제1차
성별	남성: 1,440명(64%), 여성:811명(36%)	남성: 1,784명(48.4%), 여성: 1,902명(51.6%)
연령	평균: 39.2세, 표준편차: 11, 응답자수: 2,251명	평균: 41세, 표준편차: 11.5, 응답자수: 3,686명
거주지역	서울/경기/인천: 1,231명(54.7%), 강원/제주: 71명(3.2%), 충청/대전: 177명(7.9%), 전라/광주: 201명(9%), 경상/대구/부산/울산: 571명(25.4%)	서울/경기/인천: 1,853명(50.3%), 강원/제주: 148명(4%), 충청/세종: 372명(10.1%), 전라/광주: 354명(9.6%), 경상/대구/부산/울산: 959명(26%)

다음 장에서 계속

12) 2017년 제1차 조사에는 이념성향 문항이 실험설문으로 포함되어 있어 제2차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표 3.6 – 이전 장에서 계속

	2012년 제1차	2017년 제1차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7명(2%), 100-199만원: 149명(6.7%), 200-299만원: 356명(16%), 300-399만원: 456명(20.5%), 400-499만원: 447명(20.1%), 500-599만원: 340명(15.3%), 600-699만원: 142명(6.4%), 700-799만원: 128명(5.7%), 800-899만원: 71명(3.2%), 900-999만원: 13명(0.6%), 1,000만원 이상: 80명(3.6%)	100만원 미만: 102명(2.8%), 100-199만원: 273명(7.5%), 200-299만원: 543명(15%), 300-399만원: 631명(17.4%), 400-499만원: 720명(19.9%), 500-599만원: 485명(13.4%), 600-699만원: 274명(7.6%), 700-799만원: 239명(6.6%), 800-899만원: 137명(3.8%), 900-999만원: 79명(2.2%), 1,000만원 이상: 143명(3.9%)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9명(0.4%), 중학교 졸업: 395명(17.6%), 고등학교 졸업: 1,847명(82%)	초등학교 졸업: 4명(0.11%), 중학교 졸업: 22명(0.6%), 고등학교 졸업: 724명(19.7%), 대학교 졸업: 2,498명(68%), 대학원 졸업: 426명(11.6%)
이념 성향	평균: 4.58, 표준편차: 1.97, 응답자수: 2,251명	평균: 4.46, 표준편차: 1.88, 응답자수: 3,361명
정당일체감	무당파: 443명(22.4%), 새누리당: 650명(32.8%), 민주통합당: 888명(44.8%)	무당파: 1,122명(30.7%), 더불어민주당: 1,421명(38.8%), 자유한국당: 207명(5.7%), 국민의당: 421명(11.5%), 바른정당: 155명(4.23%), 정의당: 334명(9.1%)
후보호감도	박근혜: 평균: 39.7점, 표준편차: 28.8점, 응답자수: 2,251명	문재인: 평균: 54.4점, 표준편차: 28.3점, 응답자수: 3,686명

다음 장에서 계속

표 3.6 – 이전 장에서 계속

	2012년 제1차	2017년 제1차
	문재인: 평균: 56.3점, 표준편차: 24점, 응답자수: 2,251명	<p>홍준표: 평균: 21.6점, 표준편차: 24.6점, 응답자수: 3,686명</p> <p>안철수: 평균: 43.9점, 표준편차: 24.6점, 응답자수: 3,686명</p> <p>유승민: 평균: 43.6점, 표준편차: 21.2점, 응답자수: 3,686명</p> <p>심상정: 평균: 50.8점, 표준편차: 24점, 응답자수: 3,686명</p>
후보선택	<p>박근혜: 695명(40%), 문재인: 1,043명(60%)</p>	<p>문재인: 1,838명(57.9%), 홍준표: 310명(9.8%), 안철수: 537명(16.9%), 유승민: 231명(7.3%), 심상정: 258명(8.1%)</p>

제 4 절 소결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는 대립이슈와 합의이슈로 나눌 수 있으며, 대립이슈는 공간모형, 합의이슈는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의 전략과 유권자의 선택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분석에 사용할 자료에 대해 정리했다.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현저할 때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두드러질 때 해당 이슈를 소유한 정당은 그 이슈를 강조하고 선거에서 더 부각하지만, 해당 이슈를 소유하지 않은 정당은 그 이슈를 가능한 외면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당 이슈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정당들은 이슈선점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합의이슈 경쟁에서 불리한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합의이슈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 정당은 대립이슈를 강조하거나 상대 진영이 소유한 이슈에 대해 탈취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본래 정당이 소유하고 있던 이슈의 목표와 충돌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탈취가 어렵다.

유권자는 합의이슈에 대해 후보별로 기대효용을 계산하고 가장 효용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한다. 합의이슈의 기대효용은 후보 이슈선점에 대한 인식과 이슈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유권자는 후보가 얼마나 이슈선점에 성공했는지 평가하고 이를 이슈중요도와 연결해 이슈 평가점수를 계산하며 이것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각 이슈에 대한 기대효용이 투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을 설계했으며, 제6장에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슈의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합의이슈 평가모형은 두 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와 3명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에 따라 모형이 약간 다르다. 후보별 기대효용을 비교하는 것은 같지만, 두 명의 후보만 경쟁하는 경우 ‘한 후보가 차별적으로 강조했다’ 혹은 ‘두 후보가 차이가 없었다’로 이슈선점을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이 더 단순하다. 합의이슈 평가모형의 핵심은 합의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공간모형이 아닌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이슈선점 인식과 이슈중요도의 함수라는 것이다.

이때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이슈선점 인식과 이슈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권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선점했다고 평가하거나(투사), 좋아하는 후보가 강조하는 이슈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다(설득). 따라서 제2절에서는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했다. 5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정당일체감 변화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집단별 이슈 태도 변화를 살펴보는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과 정당 지지자별로 이슈선점 인식과 이슈중요도 사이의 단기간 영향을 살펴보는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을 설계했다. 제5장에서 정당일체감 모형을 분석하고, 합의이슈에 대해 나타나는 설득과 투사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대립이슈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합의이슈의 설득, 투사 효과가 대립이슈와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면, 이는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영향력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 서울대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한 5년 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했다. 다음 제4장에서는 2012년과 2017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제 4 장

합의이슈와 대통령선거 공약

제4장에서는 제18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다. 또한 현저한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4장의 목표는 선거에서 부각된 합의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이슈들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제3장에서 정리했던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후보 공약집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제4장에서는 이러한 후보의 전략에 대해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분석한다.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슈는 무엇이었으며, 각 후보의 이슈선점 시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선거에서 현저했던 합의이슈가 무엇이고, 후보들의 이슈선점은 어떤 이슈에 대해 얼마나 성공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합의이슈에 대한 논의는 최근 선거에서 정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입장이 명확히 둘로 나뉘는 이슈들은 정당들에 있어 지지자를 끌어올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입장이 다른 반대편 유권자들을 잃을 수 있는 이슈들이다. 유권자들이 이슈 외에도 정당일체감, 정치적 사건들,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투표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어느 정도의 지지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들은 이러한 위험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정당들은 유권자들 대다수가 의견 방향의 일치를 보이는 이슈들에 관심을 두게 된다. 반대 관점을 가진 유권자들의

이탈을 우려한 정당들이 대립이슈보다는 합의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송진미·박원호, 2016).

다양한 설문조사들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에 근거해 투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투표 결정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약 85%(900명)의 응답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6.11%(65명)에 불과했다.¹⁾ 제19대 대선의 경우에도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은 3.3%(105명)에 불과했으며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보투고 표했다는 응답이 28.9%(9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보고 뽑았다는 응답이 21.9%(512명)로 뒤를 이었다.²⁾ 제18대 대선과 제19대 대선 모두에서 공약이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제 1 절 제18대 대통령선거

1.1 대통령선거 공약 분석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총 7명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박종선, 무소속 김소연, 무소속 강지원, 무소속 김순자이다.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 외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

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귀하께서 투표한 후보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응답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0)’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10)’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0점에서 4점까지의 응답을, ‘영향을 주었다’는 6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중립 및 잘 모르겠다(99명) 응답은 제외했다.

2) 응답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투표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하는 식이다. 투표 결정요인 역시 실제로는 공약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공약을 고려해 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공약 투표를 했다고 응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했을 때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공약을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므로, 여전히 이슈가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사퇴 직전까지 20~27%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으나³⁾ 11월 23일 사퇴했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1월 26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다.⁴⁾ 총 7명의 후보 중 유의미하게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였으며 3번 이정희 후보는 12월 16일 사퇴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이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2년 11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들의 30.3%(650명),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비율은 41.4%(888명), 무당파의 비율은 20.65%(443명)였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무당파 비율은 낮게는 12%에서 많게는 33.5%까지 집계되었다.⁵⁾ 같은 시기 새누리당 지지자의 비율은 낮게는 32%에서 최대 42.3%로 조사되었고,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최소 27%부터 최대 39.4%까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약간 앞섰지만,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만약 정당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한다면 무당파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각자의 정당 경계 안에 있는 지지자들을 잘 지키는 동시에 경계 밖에 있는 무당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고, 나아가 상대 진영의 지지자들을 끌어올 이슈들을 생각하고 강조해야 했다. 두 후보 모두 정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자칫 지지자들을 잃을 위험이 있는 이슈들은 피하면서, 많은 사람들-특히 중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3) 『한국갤럽 역대 대선 정치지표: 1987년(제13대)~2012년(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추이』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9월 1주 차 25%의 지지율로 시작해서 사퇴 직전까지 최소 20%, 최대 27%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4) 이 외에 무소속 이진개 후보가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 후 사퇴했다.

5)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에 따른 11월 3주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ARS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모노리서치 20.2%(전체 응답자 2,320명), 리서치뷰 21.8%(전체 응답자 3,000명, 뷰앤플 의뢰), 리얼미터 19.7%(전체 응답자 5,250명, JTBC/중앙일보 등 의뢰) 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한국갤럽 37%(전체 응답자 1,545명), 리서치앤리서치 29.2%(전체 응답자 1,056명, 채널A/동아일보 의뢰), 엠브레인 34.8%(전체 응답자 1,200명, 서울신문 의뢰), 중앙일보 33.5%(전체 응답자 1,500명), 한국리서치 17.2%(전체 응답자 800명, 동아시아연구원 의뢰), 한국리서치 12.3%(전체 응답자 1,005명, MBC 의뢰)로 무당파의 비율이 집계되었다.

수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고 강조하는 것이 유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 간 의견이 뚜렷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에 대해 후보자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 이념적으로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⁶⁾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입장에 공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내세우게 되면 선거의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무당파의 표를 잃을 위험이 크다.

캐치프레이즈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모두 우리나라의 양 거대정당 후보였기 때문에 지지층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했다. 지지층의 의견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무당파 중도층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는 피하면서 유권자 다수가 동의하고 좋아할만한 내용들로 공약을 채우는 한편, 각자의 강점을 부각시키려고 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두 후보의 선거공보 속 캐치프레이즈를 살펴보면⁷⁾, 박근혜 후보의 경우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그 내용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여성대통령의 탄생이 가장 큰 변화이자 쇄신입니다’였다.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모성애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첫 여성대통령이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사례라는 점을 들어 변화와 쇄신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를 다시 부정부패 척결과 낡은 의식 철폐, 차별에 대한 대항으로 연결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사람이 먼저다’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념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학력보다, 지위보다, 성공보다, 집안보다, 아파트보다, 자동차보다, 명함보다, 승리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다’였다. 문재인 후보의 캐치프

6)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대선 직전에 본인이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당파 중에서 51.02%(226명), 새누리당 26.15%(170명), 민주통합당 31.98%(284명), 진보정의당 23.17%(38명)이었다. 각 지지정당별 이념점수 평균은 무당파의 경우 4.6점, 새누리당의 경우 6.1점,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3.8점, 진보정의당 지지자들 3.4점이었다.

7) 제18대 대선에서 선거공보는 2012년 12월 4일 각 가정에 발송되었다.

레이즈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의 선거공보 내용 중 절반이 문재인 개인의 능력과 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관한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그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에는 시민 개개인이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시에, 개개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또한 오랜 정치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의미부여를 많이 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와의 대척점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또한 ‘서민의 편, 약자의 편’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 진보진영의 후보로서 상대적으로 서민과 약자들을 위해 일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두 후보 모두 캐치프레이즈에 후보 개인적 특징을 많이 담아냈으며, 각자 자신만의 강점을 강조하고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각자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지만, 그 각각의 내용은 갈등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들이었다. 박근혜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여성 유권자들과 오랜 경력을 믿는 보수적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었고, 문재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서민과 약자, 소수자, 그리고 인권과 개인을 중시하는 젊은 유권자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후보가 남성 유권자들을 배제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권자들이나 중년 유권자들에게 반발을 일으킬만한 내용을 캐치프레이즈에 담은 것은 아니었다.

선거의 주요 이슈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아젠다 개발』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경제와 복지의 조화와 실행, 일자리 창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순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대답했다(전용주 외, 2012, 14쪽). 제1순위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경제와 복지의 조화는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

며,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한 관심은 사회경제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높았다(전용주 외, 2012, 10-15쪽).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사회복지, 남북관계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⁸⁾ 이러한 배경에서 2012년 대선의 가장 현저한 이슈는 경제민주화였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후보들의 공약집에서도 우선하여 다루어졌으며 TV토론 등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연합뉴스 2012/12/10⁹⁾). 이외 경제영역의 이슈로 경기침체 극복, 경제성장 등의 이슈가 중요했으며 일자리 창출, 대북문제와 안보가 뒤를 이었다¹⁰⁾.

특히 경제민주화는 이전 선거들과 달리 2012년 총선¹¹⁾과 대선에서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히 부상한 이슈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새로운 돌파구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원칙 세우고)”를 대표 경제공약으로 내세웠다.¹²⁾ 하지만 당선 이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유권자 다수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중반 2010년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5일(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절반이 되는 날입니다. 00님께서 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했다고 혹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운영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 경제, 남북관계, 외교, 교육, 복지, 사회 분야 중 어떤 점을 특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000명 중 539명이 잘 못 했다고 응답했고, 그중 가장 많은 26.9%가 “경제”를 특히 잘 못 했다고 응답했다.¹³⁾ 또한 2012년 한국정치학회에서 실시한 여론조

8) 『한국갤럽 데일리 정치지표 제47호(2012년 12월 1주)』

9) 연합뉴스. 2012년 12월 10일. “〈TV토론 분야별 쟁점〉-②경제민주화 실현방안”

10) 경향신문, 이주영·박홍두 기자. 2012년 12월 10일. “박 “순환출자 끊으면 경제 악영향” 문 “출총제는 MB정부서 폐지”” 연합뉴스. 2012년 12월 10일. “〈TV토론 분야별 쟁점〉”, MBN, 이상민. 2012년 12월 10일. [대선 D-9] 경제 분야 2차 TV토론…쟁점은?

11) 세계일보. 2012.04.04 “다시 ‘경제 민주화’ 내건 野”, 한겨레. 2012.03.20 “새누리-민주당, 경제민주화 정책 비교해보니…”

12) 한겨레. 2007/10/24. “한나라당 ‘줄푸세 타고 747로’”

13) 출처: 중앙일보. 『이명박 대통령 전반기 평가 여론조사』, 조사시기: 2010.08.22-2010.08.22, 모집단: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샘플 수: 1,000명.

사에서 “선생님께서서는 이명박 정부 기관 동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았다’라는 응답은 1,200명의 응답자 중 17%에 불과했던 반면 ‘나빴다’라는 응답은 83%에 달했다¹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성장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유권자들이 기대했고, 이에 따라 경제 이슈 투표가 관찰되었다는 점(강원택, 2008; 이재철, 2008), 그 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에 많은 유권자가 경제 상황을 나쁘게 평가했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공약집에서도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안보를 비롯한 합의이슈가 강조되는 경향이 보였다. 이 중 경제민주화의 경우, 목표를 실현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후보들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었지만(장승진, 2013), 경제민주화 이슈가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같은 경제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며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기보다는 가치 실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이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선의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 다수의 여론조사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 ‘가장 잘 해결할 후보는 누구인지’ 등의 문항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¹⁵⁾ 제1.2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에 무리 없이(무응답 혹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 거의 없이) 응답했고, 상당수의 응답자가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후보와 유권자 모두에게서 합의이슈로 인식된 이슈였다. 일자리 창출과 강한 안보 역시 정책의 수단보다는 목표와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찬/반의 대결보다는 누가 더 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합의이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 출처: 한국정치학회.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 조사(2012)』, 조사시기: 2012.12.20-12.25, 모집단: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샘플 수: 1,200명

15) 한국정당학회 『동아일보 한국정당학회 공동 기획 대선 후보 평가(201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한국 사회 정치 인식 조사(2012)], SBS [SBS 대선 여론조사] 등. 예외적으로 KBS에서 실시한 [경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2012]의 경우,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정책인 재벌개혁, 조세 정의실현, 중소기업인 보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중소기업 지원/육성 등에 대해 조사했다.

표 4.1: 제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선거공보 내 선거공약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우리 집, 걱정 없다! 가정 걱정 줄이기 4대 약속 일자리, 늘어난다! 일자리 늘·자·오 3 대 약속 우리 사회, 행복하다! 더불어 사는 안 전한 사회 만들기 3대 약속	일자리 대통령 진짜 경제민주화와 가짜 경제민주화 복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튼튼한 안보,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안보와 평화: 임기 첫해에 남북정상회 담,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선거공약은 몇 가지 형태로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데, 가장 가깝게 모든 유권자가 접하는 것이 선거공보이다. 두 후보의 선거공보 중 공약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4.1]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외 일자리 확충, 안전한 사회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립이슈는 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했던 선거였던 만큼 두 후보 모두 가능한 유권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갈등의 여지가 있는 대립이슈들을 가능한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공약서들에서도 드러난다. 두 후보의 공약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후보들이 제작해 배부한 선거공약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10대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며 [표 4.2]와 같다. 대체로 공약들이 찬/반이 나뉘기 어려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공보에 있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10대 공약 문서에 있는 내용 역시 갈등의 부분을 최소화했다. 두 후보 모두 공통으로 복지체계 확충,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경제 균형 발전, 경제민주화, 안전한 사회 등을 강조했는데 모두 합의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후보가 어떤 이슈를 더 우선순위에 놓았고, 이슈의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이 차이가 무당파, 중도층의 표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 제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10대 공약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만·나·바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 경제’ 실현!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 협력의 경제민주화’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 평등사회’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강도 높은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 실현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과 미래형 창조 정부 구현	남북경제협력과 균형 외교, ‘평화·번영의 북방경제 시대’
6	일 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자·오’ 정책 추진	범죄·재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 ‘미래를 여는 혁신 교육’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 교육	혁신경제로 성장 동력 확충, ‘과학기술·문화강국’ 실현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www.nec.go.kr>)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이슈선점 시도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공약집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우선 순위에 놓았고 정치개혁, 남북관계 문제를 이어서 강조했다. 두 후보가 강조한 이슈 분야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박근혜 후보가 공약집에 1순위로 경제민주화를 올렸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경제민주화가 제18대 대선에서 가장 현저한 이슈였던 만큼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영역 정책이었지만 그 내용 때문에 의제 성격이 진보에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김병권,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제1순위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으며, 균형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적 약자를 돕는 정책 등을 공약에 담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제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문재인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에서는 일자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이슈라는 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두 후보 모두 이슈선점을 시도한 것이다. 정당 전략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선점을 위해 2011년 말에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을 주도한 김종인을 영입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 경선패드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만들기에 들어갔고, 이후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핵심 공약이 되었다(송진미·박원호, 2014). 박근혜 후보가 일찍부터 시장개입 정책의 의지를 보이며 경제민주화 선점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의 행보는 작은 정부를 정책 기조로 하고 있던 한나라당(선거 당시 새누리당)에 파격적인 시도였다(세계일보 2012/01/27).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소속 정당 후보로서 이명박 정부와 선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민주당 역시 경제민주화를 일찍부터 강조했다. 2011년 7월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특위’를 발족했으며, 2011년 말 ‘경제민주화 10대 정책’을 발표했다.¹⁶⁾ 선거공보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차별화하고 상대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 ‘가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생과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

16) 경향신문, 안홍욱 기자. 2011/11/17. ““출출제 부활, 최고세율 신설” 민주, 경제민주화 정책 제시”

화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가계부채 감소, 사회적 경제와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도 골목상권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재벌 개혁이나 금융개혁과 같은 단어 사용은 피했으며, 문재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새누리당의 복지와 민주당의 안보

[표 4.1]과 [표 4.2]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안보에 관해 박근혜 후보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공보 속 공약의 내용은 주로 경제성장과 복지에 맞춰져 있었으며 대북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반대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공보에서는 안보와 대북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담겼다. 이는 선거마다 강한 안보에 대한 지지가 보수정당의 중요 지지기반이 되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¹⁷⁾, 예상에서 벗어나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이슈소유와 이슈선점에는 정당들이 지금까지 쌓아 온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근혜 후보는 보수정당 후보로서 안보/대북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문재인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로서 복지 문제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두 후보는 각자의 강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 정당이 소유(own)하고 있던 이슈를 가져오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제3장 정당의 전략 중 전략4에 해당한다. 두 후보가 기존과 다른 이슈를 강조했다라는 점은 각자 상대 진영의 유권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었다. 각 후보가 각자 안정적인 지지층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상대 진영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슈에 도전한 것이다. 그리고

17) 예컨대, 2002년 대한매일신문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조사한 [16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국민여론조사(2차)]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대북문제 대처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후보가 대북문제를 얼마나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지를 0-1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회창 후보에게 평균 6.6점, 노무현 후보에게 평균 6.2점의 점수를 매겼다. 두 후보의 점수 차이는 0.36점($N=1,000$, $T=4.103$, $p=0.000$)으로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이회창 후보가 더 잘 다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과정은 최대한 갈등을 피하는 방식, 즉 박근혜 후보는 ‘무상급식’과 같은 찬반의 형태가 아닌 ‘복지 확대’와 같은 형태로 복지를 강조했고, 문재인 후보는 ‘대북지원’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튼튼한 안보, 평화’와 같은 형태로 안보 이슈를 다루었다.

또한 이슈 탈취 시도의 배경에는 후보 개인의 특성이 작용했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라서 군대와는 거리가 멀었던 반면 문재인 후보는 만기 제대한 군필자였다는 점이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본인이 군필자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또한 안보와 대북 문제는 통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를 연결해 이슈선점에 유리한 지점을 만들고자 했다. 남북교류, 통일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이 소유해 온 이슈였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선거공보에 “안보와 평화”라고 쓰고 그 아래에는 ‘남북정상회담’, ‘평화와 공존의 시대’와 같은 문구를 썼다. 이를 통해 안보를 평화로운 남북관계 및 통일과 연결함으로써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이슈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복지체계 구축을 10대 공약에서 두번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이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 제시 등을 통해 진보 의제를 선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김병권, 2012; 이지호, 2013). 박상운 (2013)은 박근혜 후보가 연설 속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이미지였던 보수적인 모습에 매몰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체로 사회복지 이슈는 진보적 가치로 여겨져 왔고, 따라서 진보진영의 이슈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이다(Faricy, 2011; Layman and Carsey, 2002; Petrocik, 2003).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역시 복지보다는 경제 이슈를 더 강조했다. 강원택 (2010)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의 공약 중 절반에 가까운 공약이 경제 관련 공약이었으며, 경제 정책의 방향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따르는 것이었다. 복지 공약은 경제 공약에 비해 순위도 낮았으며 그 양도 경제 관련 공약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박근혜 후보의 시도는 진보 진영에서 소유 및 선점해오던 진보 의제에 접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 일자리창출, 그리고 젠더이슈

복지 이슈 다음으로 두 후보가 강조한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박근혜 후보는 세 번째로, 문재인 후보는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선거 공보에서도 두 후보는 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보에서도 가장 먼저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의 복지정책 선점 시도가 있었다면,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선점하고자 가장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육성, 고용안정체계 강화, 노사관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골자로 한다.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은 선거마다 경제영역의 중요한 이슈였다.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박근혜 후보는 ‘새로움’을 강조하며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벤처 기업 육성 등을 공약에 담았지만, 문재인 후보가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박근혜 후보는 단순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진보정당이 선점하기 쉬운 형태가 되지만,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형태로 접근할 경우 보수정당이 선점하는 이슈가 된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와 같이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며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에 접근할 경

우, 문재인 후보보다 보수정당이 갖는 이미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시민들의 찬/반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은 대립이슈 형태로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문제를 어느 후보가 더 잘 선점해서, 더 잘 해결한 것이라는 인상을 남겼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제18대 온라인 패널 제1차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1순위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99%였으며, 문재인 후보 투표자 중에서는 16.12%였다.

보수진영에서 이전부터 소유해오던 경제성장 이슈는 제18대 대선에서도 역시 중요한 이슈였고, 박근혜 후보는 세 번째 공약에서 ‘창조경제’를 내세워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복지와 같은 의제의 선점을 시도하면서 기존에 소유해오던 이슈 또한 강조하고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홍식 (2013) 연구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같은 이슈를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보수정당이 소유한 이슈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보수 담론이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결국 진보 진영의 공약 차별성이 사라지고 두 후보 간 정책 수렴이 발생했다(김윤철, 2013). 결국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더 복지 이슈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복지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비추어졌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복지정책을 세 번째로 강조하면서 ‘성 평등사회’를 함께 언급하며 젠더 이슈를 다루었는데, 이는 2017년 대선에까지 문재인 후보가 젠더 이슈를 선점하는 발판이 된다.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10대 공약을 요약하면, 박근혜 후보의 키워드는 ‘새로움’이고 문재인 후보의 키워드는 ‘개혁’과 ‘평등’이다. 합의이슈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가 얼마나 해당 이슈를 강조했고, 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나가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보수정당이 갖고 있던 안보와 경제성장에 강하다는

이미지 위에 복지 또한 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미지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조경제’, ‘미래형 창조 정부’ 등의 표현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를 시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공평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경제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진보적 가치관과 맥락을 같이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새로운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과감한 시도를 했다면, 문재인 후보는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먼저 노력을 쏟은 뒤 안보와 안전, 경제성장 등의 이슈를 통해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오하고자 했다.

1.2 선거 공약에 대한 유권자 반응

각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2012년에 각각 선거 전후로 수집한 자료이다. 조사 자료와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에 정리했다. 응답자들에게 총 9개 이슈 중 중요한 이슈를 1위부터 3위까지 선택하도록 했고, 1위부터 3위까지 순서대로 3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했다. 선택하지 않은 이슈의 중요도는 0점으로 코딩했다. 따라서 2012년에 조사한 응답자의 주관적 이슈중요도 점수는 최소 0점부터 최대 3점까지이다. 2012년 제1차, 제2차 조사의 이슈중요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3]과 같다.

2012년에 응답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경제성장이었고,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부패척결, 정치개혁이 중요했다. 경제성장의 경우 두 조사에서 모두 평균점수가 1점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일자리 창출은 제1차 조사에서는 평균 1.02점, 제2차 조사에서는 평균 0.96점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였다. 그 뒤로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 평균 1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며, 복지정책이 바로 뒤를 이었다. 교육개혁, 지역균형발전, 대북정책, 후보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중요도 점수 평균은 모두 0.4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1.1절의 선거 주요이슈 분석에서도 유권자들이 경제와 복지, 일자리

표 4.3: 이슈중요도 평균: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성장	1.17	1.25	1.15	1.24
일자리창출	1.02	1.17	0.96	1.15
부패척결	0.91	1.17	0.93	1.15
정치개혁	0.89	1.16	0.98	1.2
복지정책	0.86	1.09	0.82	1.07
교육개혁	0.35	0.76	0.28	0.69
지역균형발전	0.34	0.76	0.32	0.74
대북정책	0.23	0.65	0.27	0.72
역사인식	0.19	0.61	0.26	0.73
응답자 수	2,251		1,921	

창출, 경제민주화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응하듯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경제, 복지, 일자리 창출 이슈를 강조했으며, 정치개혁 이슈의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는 다섯 번째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의 경우 네 번째 공약으로 공약집에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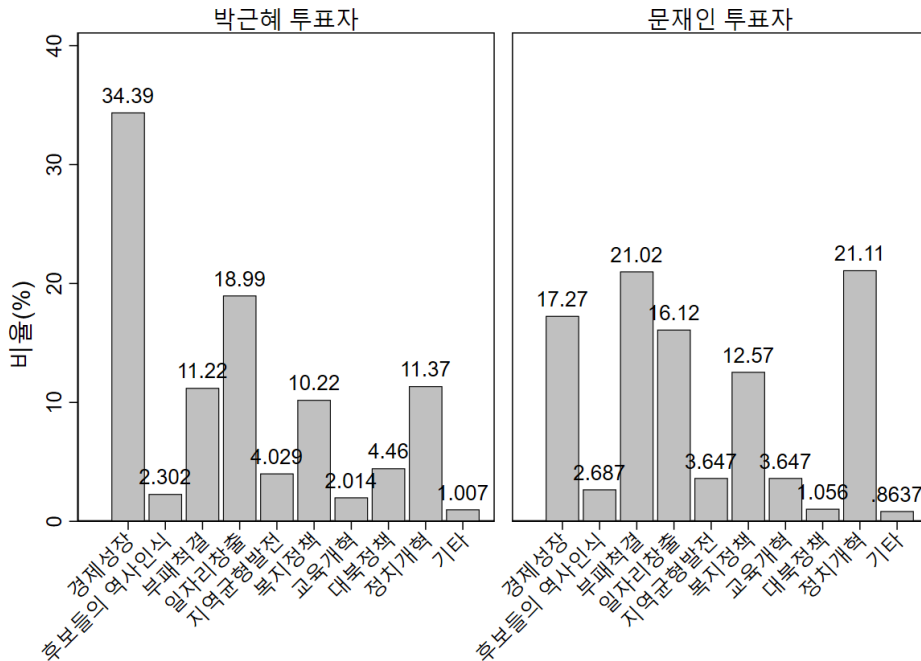
[표 4.3]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2년 선거에서 대북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북정책이 대북지원과 같은 정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립이슈에 더 가깝지만, 안보와 평화를 목표로 한다는 관점에서서는 합의이슈이다. 분석하는 여론조사 자료에서 안보/평화의 중요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대북정책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표 4.3]에서 대북정책 중요도는 교육개혁이나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이슈보다도 중요도 평균점수가 더 낮았다.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안보가 새누리당이 소유한 이슈였음에도 박근혜 후보는 다른 이슈에 비해 안보 이슈를 우선하지 않았다. 선거공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으며, 공약집에서는 네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표현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후

보는 대북관계 문제나 안보 이슈를 선거공보에서 ‘튼튼한 안보’, ‘안보와 평화’와 같은 표현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집에서도 다섯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표 4.3]의 결과를 보면, 2012년 선거에서 대북정책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안보를 강조한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6장에서 할 것이다.

2012년 선거에서 주요 국가 사안 중 응답자들에게 1순위로 중요했던 것은 경제성장(544명, 24.2%), 일자리 창출(387명, 17.2%), 부패 척결(375명, 16.7%), 정치개혁(380명, 16.4%), 복지정책(275명, 12.2%)이었다. 이를 지지자별로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은 각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후보 선택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박근혜 투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이었으며, 문재인 투표자들에게는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그리고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가 안보를 강조했지만, 대북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과 안보 이슈를 복지와 일자리 창출보다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지지자들보다 경제성장과 대북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모두 강조했던 복지와 일자리 창출 이슈의 경우 두 후보가 비슷했으나 각각 복지는 문재인 후보에게,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중요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창출 문제를 제1순위로 강조했음에도 경제성장을 포함한 경제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잘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 대결 구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당파 응답자들이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가 경제성장(106명, 23.9%), 일자리 창출(82명, 18.5%), 부패 척결(78명, 17.6%) 순서였다는 점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점한 후보가 이슈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제18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림 4.1: 후보 지지자별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제18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¹⁸⁾ [표 4.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선점은 성공적이었다. 복지 및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장 잘 시행할 후보로 응답자의 36.7%가 박근혜 후보를 뽑은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라고 응답한 440명의 응답자 중에 355명(80.7%)가 내일이 선거라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대북/안보 문제 이슈선점 시도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안보 이슈선점을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표 4.4]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관계 및 외교정책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비슷한 정도로 대북문제에서 차이를 좁혔다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두 후보가 차이가 거의 없었던 만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2012년 선거에서 두 후보의 주력 상품이 경제민주화였다는 점,

18) [표 4.4]의 결과는 “선생님께서도 현재 대선후보들 가운데 다음 각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후보가 누구라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표 4.4: 후보별 이슈선점: 제18대 대통령선거

	복지 및 경제민주화 정책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박근혜	440	36.7	427	35.6
문재인	289	24.1	425	35.4
안철수	287	23.9	151	12.6
그 외 후보	9	0.75	13	1.1
없다	74	6.2	68	5.7
무응답	101	8.4	116	9.7
전체	1,200	100	1,200	100

출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한국사회 정치인식 조사(2012)’

남북관계가 2012년에 유권자들에게 경제나 복지에 비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였다는 점에서 합의이슈 경쟁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선점이 유권자들의 표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제6장에서 다룰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진보 의제 선점 노력은 유권자들에게도 비교적 잘 전달되었다.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제18대 온라인 패널 제1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인식했다. 가장 진보적인 경우 0점, 가장 보수적인 경우 10점의 11점 척도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념점수를 물었을 때, 응답자 2,249명은 박근혜 후보가 평균적으로 7.79점만큼 보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02점만큼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차이는 0.227점으로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였다(2,249명¹⁹⁾, $t=-8.7725$, $p=0.0000$). 문재인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 복지, 남북협력 등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공약들은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가 진보적이라고 인식하게 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한 문재인 후보의 이념

19) 모르겠다고 응답한 2명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성향 점수 평균은 3.58점이었으며, 민주당의 이념점수 평균은 3.98점이었다. 두 점수의 차이는 0.396점(2,251명, $t=-12.3339$, $p=0.0000$)으로, 응답자들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민주당보다 문재인 후보를 더 진보적으로 인식했다.

제 2 절 제19대 대통령선거

2.1 대통령선거 공약 분석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로 치러졌다.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선거였으나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었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였으므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기간이 사실상 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와의 대선과 달리 당선 직후 바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 후보들은 “준비된 후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또한, 촛불집회 등으로 탄핵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 높아진 정치적 효능감²⁰⁾, 그리고 전례 없는 탄핵 이후 선거라는 점에서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었던 선거였다. 5월 9일 최종 투표율을 77.2%로 15대 대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²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15명이 후보 등록을 했으며, 이 중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후보,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가 사퇴하면서 선거는 총 13명의 후보가 치러졌다. 원내정당 후보 6명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조원진이었다. 그리고 이 중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여론조사들에서 한 자릿수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를 받았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선거일에

20) 2017년 선거 직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선거 관심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54점(3,686명, 표준편차 0.62), 정치적 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3,686명, 표준편차 1.06)이었다.

21) MBC, 2017년 5월 10일,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2%, 20년 만에 최고치”

다다를수록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해서 갤럽의 선거 직전 지지도 조사에서는 8%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제19대 대선은 이 5명의 후보 간 다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TV토론 등에서 5명의 후보가 경쟁했고, 여론조사도 5명의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5명의 주요 후보에 맞춰서 대선 공약을 분석할 것이다.

캐치프레이즈

먼저 각 후보의 선거공보 속 캐치프레이즈를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두 번째 대선 출마 경험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선거에 대한 나름의 강점을 호소한 것이며, 선거공보에서 검증된 후보, 준비된 후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중에서도 “대선 재수”라는 표현이 주목할만하다. ‘재수’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 참여정부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선거공보 첫 장부터 촛불 사진을 실어서 촛불집회의 계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홍준표 후보는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선거공보 표지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이에 맞게 선거공보에 안보와 관련한 이슈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는 선거 공보에 상대적으로 공약보다는 현재 국제 상황이나 국가의 상황, 후보 개인의 일생과 특징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았다. 2017년 대선 여론조사들에서 줄곧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불리한 상황이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탈한 기존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흡수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에게 필요했을 것이다.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가진 문재인 후보와는 합의이슈 경쟁에서 불리하므로 불리한 이슈들에서는 후보 개인 요인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국민이 이긴다’가 캐치프레이즈였으나²²⁾ 다른 후보들에 비해 캐치프레이즈를 덜 강조한 측면이 있다. 다른 후보들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모두에 본인의 강점을 살리거나 정당이 목표하는 바를 나타내는 문구들

22) 이후 걸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걸어서 국민 속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기도 했다.

을 함께 넣었으나, 안철수 후보는 선거 벽보에 정당 이름조차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공보에는 안철수 사진과 정당명을 함께 넣었으나 다른 후보들처럼 표지에 따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속 안철수가 두르고 있는 띠에 정당명과 정당 로고가 쓰여 있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상식이나 형식을 깨려는 시도를 많이 했으며, 선거공보 역시 흰 바탕에 초록색 글씨로 설명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항목과 주제어들을 여러 가지 색깔로 강조하거나 일목요연하게 나열하는 다른 후보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의 선거공보였다. 국민의당이 새로 생긴 제3당이란 점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안철수 후보의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보에서도 기존의 틀을 깨고 정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후보 개인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보였다.

유승민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보수의 새 희망’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들 상당수 이탈한 상황에서 바른정당은 새로운 정당을 찾는 보수층 유권자들을 겨냥해 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바른정당이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책임 논쟁 끝에 갈라져 나온 만큼, 같은 이유로 새누리당을 이탈한 보수진영 유권자들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바뀌야 한다’는 표현과 ‘정의’를 강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했다. ‘보수의 새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는 이러한 유승민 후보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심상정 후보는 지금까지 정의당이 추구해 온 가치와 맞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캐치프레이즈였다. 그리고 선거공보에는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음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으면 국민의 삶 또한 변화할 것이라는 정의당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선거공보의 후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심상정 후보의 노동자로서의 삶과 노동운동 경력, 그리고 노동 관련 공약을 담아내고 있다. 다른 이슈 영역들에 대한 공약도 있으나, ‘노동’과 ‘평등’이 주요 주제이다. 이를 통해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이슈선점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의 주요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촉발된 선거였던 만큼 제19대 대선의 주요 이슈는 부패 척결, 정치개혁이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의 2017년 대선 제1차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사안 중에서”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3,686명의 응답자 중 29.6%가 ‘부패 척결’이라고 응답했다. 그 뒤로 경제성장(27.9%), 일자리 창출(16.4%), 복지 확대(11.0%)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고서²³⁾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이번 대선에서 다뤄져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고,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이 16.4%,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14.8%로 뒤를 이었다. 한국정치학회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에 대해 실업문제(40%), 물가 문제(13.6%), 안보 문제(10.3%)의 순서로 시급하다고 응답했다.²⁴⁾ 제19대 대선에서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복지, 안보 등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후보의 공약은 [표 4.5], [표 4.6]과 같다. 각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들이 마주한 상황에 따라 공약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꾸준히 30%에서 40%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월 1주 차부터 선거가 치러진 5월까지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 1위 후보를 내어준 적이 없었다.²⁵⁾ 탄핵 이후부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까지 기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한때 문제

23) 출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9대 대선 유권자 핵심의제 개발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샘플 수: 1,015명, 조사시기: 2017년 3월 3일-3월 4일

24) 출처: 한국정치학회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샘플 수: 1,200명, 조사시기: 2017년 5월 11일 - 5월 24일

25)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후조사', 3쪽, 대선 후보 지지도.

인 후보와 양자구도를 형성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점차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안철수 역시 다른 후보들과 지지율이 비슷해졌다.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선거 전 한 달 정도의 기간에 안정적이고 큰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던 문재인 후보와 15% 내외의 지지를 받은 홍준표, 안철수 후보, 그리고 8%의 지지율로 나름의 입지를 굳힌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다자대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선거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컨대, 문재인 후보는 기존의 지지층을 지키는 것이 그대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특히 2012년 대선 직후 24%까지 떨어졌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2017년 대선에서는 35%까지 상승했고,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새로운 지지층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므로 가능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립이슈의 언급은 피하고 합의이슈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저한 일자리창출 요구

다섯 명의 후보가 공통으로 강조했던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²⁶⁾ 위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업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은 부패 척결과 함께 1, 2위로 중요하다고 뽑힌 이슈였다. 2017년 봄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함께 오르면서 일자리 상황이 나빠졌고,²⁷⁾ 선거가 치러진 5월에 상황이 조금 나아졌으나 유권자들이 이를 체감할 정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⁸⁾ 따라서 주요 후보 모두가 일자리 창출을 먼저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당의 이전 일자리 창출의 이슈소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국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일자리가 중요했던 선거에서 민주당이 소

26) 일자리 창출은 외국의 선거에서도 대표적인 합의 이슈이다(Bélanger and Meguid, 2008; Petrocik, 1996; Egan, 2013).

27) 연합뉴스. 2017/03/15. “‘실업률 7년 만에 최악’, 연합뉴스. 2017/04/24. “[그래픽] 물가 오르고 실업률 뛰고…가계 경제 고통, 5년 만에 최고”,한겨레, 노현웅, 2017/03/15. “뽕뽕 연 고용시장…실업률 5%, 16년 만에 최고”

28) 연합뉴스. 2017/05/01. “경제 온기 돈다는데…20대·50대 체감 경제 고통은 악화”

표 4.5: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 10대 공약: 문재인, 홍준표 후보

	문재인	홍준표
1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2	정치 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4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5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6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7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부패 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 부조리 차단
8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9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
10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www.nec.go.kr>)

유했던 이슈라고 분석했다(Benoit and Hansen, 2004; Benoit and Airne, 2005; Benoit, 2007). 하지만 이슈소유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선거 당시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에 유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 이슈소유가 이전 선거들에서 불분명했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했다.

표 4.6: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 10대 공약: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촛불혁명 인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2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 외교로 평화 공영 시대		
3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I, 경쟁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4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II,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5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 평등사회 실현		
6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 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		
7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I.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보육, 의료, 노후安心 복지 실현		
8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II. 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육 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9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V.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1-2인 가구 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탈핵 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10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V. 국민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www.nec.go.kr>)

합의이슈가 부각되었지만 이슈소유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정당들은 해당 이슈 선점에 나선다(전략2). 문재인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크게 세 가지 이슈들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안보, 부패 척결 이슈를 합의이슈 형태로 담아 내었다. 그중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표 4.5). 그는 2012년 대선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일자리를 강조했었다. '성장'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선거공보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81만 개 공공일자리, 청년 고용할당제, 창업 지원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의 내용에는 분명 찬/반의 대립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정책의 용어에 대한 설명 등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실제로 후보자 간 토론 등에서 공격받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의이슈 형태로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제2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10대 공약의 2, 3, 4위 공약을 모두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표 4.6).

부패 척결 이슈에 대한 강조 대 회피

앞서 언급한 대로 2017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패 척결이었다. 부패 척결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주요 이슈로 부상한 만큼 야당에 유리하고 여당에 불리한 이슈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제10대 공약에서 제2, 제3 순위로 정치개혁과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표 4.5). 선거공보에서도 세 번째로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부패 척결과 관련한 공약들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하고 촛불집회를 계승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자유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24시간 대통령의 일정 공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개혁 등의 권력 분산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반부패 정치'를 강조함으로써 부패 척결 역시 합의이슈로

강조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찬/반이 나뉠 수 있는 정책이었다. 반부패 정책을 제시하는 선거공보 페이지에는 “광화문 대통령: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박근혜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부패와 관련한 이슈들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과 동의하는 유권자들을 더욱 견고한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편의 유권자들의 반대는 고려하지 않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²⁹⁾

이에 반해 홍준표 후보는 제7순위에 부패 척결 이슈를 넣었으며, 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유승민 후보는 본인 공약의 마지막 열 번째에 부패 척결 이슈를 위치시켰다.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전략1).

합의이슈 경쟁과 홍준표 후보의 전략

문재인 후보가 선거의 주요 합의이슈인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선점을 시도하는 한편, 후술할 안보 이슈 선점을 시도하자 홍준표 후보는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유권자들의 입장이 양극화된 대립이슈들을 강조했다(전략3).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 기간 초반 5% 미만에서 선거 직전 17%까지 상승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를 대립이슈 경쟁 구도로 끌어오자 노력했는데, 이를 통해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문재인 후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드러내 보임으로써 상대편 유권자들의 이탈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례가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 중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 관련 의견을 지속해서 물은 것이다. 이때, 성 소수자 문제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지 않고 “동성애에 반대하냐”고 질문함으로써 성 소수자 문제를 찬/반의 이슈로 프레임 했다. 문재인 후보가 “반대한다”고 거듭 대답하자 이후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고 성 소수자와 성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층과

29) 당시 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가 소수일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합의에 가깝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시된 정책들은 문재인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높은 지지를 받는 거대정당 후보가 대립이슈를 강조했다 때 불필요하게 반대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보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³⁰⁾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출신 지역, 종교 등을 비롯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중 성 소수자의 차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 등 보수진영에서는 해당 법안을 지속해서 반대했다. 흥미로운 점은 동성애 혼인 합법화에 대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모두 지속해서 반대했었는데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일수록 대립이슈 프레임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준표 후보는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라고 거듭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하는 등 ‘좌우 대결 프레임’으로 다른 후보들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다(연합뉴스 2017/04/19; JTBC 2017/04/20)³¹⁾.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탄핵의 책임이 있는 정당의 후보로서 정당에 실망하고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주요 선거 의제들을 대립이슈의 형태로 부각하면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선거공보에는 “좌파와 맞서 이겨냈습니다”, “민주 노동, 전교조”와 싸워 이겼다고 표현하고, “좌파 기득권 혁파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강성노조, 더 안됩니다.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정치파업 엄단. 노동 개혁을 통해 귀족노조의 비정규직 차별 및 세습하고요 철폐”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념적으로 좌-우 편 가르기를 끊임없이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극단적이고 뚜렷한 보수적 이념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우파 유권자들을 끌어오고 상대 후보가 진보 진영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홍준표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한강의 기적, 산업화, 민주화 등 과거 역사를 언급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자칫 보수진영에 불리할 수 있는 복지 이슈 영역에서는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고 당시 유행하던 “흙수저”라는

30) 한겨레, 2017년 4월 26일, “동성애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후보? 문재인 발언에 비판 봇물(김색일: 2020년 4월 11일)”, 연합뉴스, 2017년 4월 20일, “성 소수자 단체, 文 ‘동성애 발언’ 사과 요구 기습시위”

31) JTBC, 2017년 4월 20일, “주적·국가보안법...’좌우 대결 프레임’ 꺼낸 보수 후보들”, 연합뉴스,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토론] 국가보안법, 주적 논란-3”

표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서민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거의 장마다 있을 만큼 강조했고, “흙수저”를 넘어 “무수저”라는 표현을 통해 후보 본인의 능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복지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했다. 또한 후보자 본인이 검사, 국회의원, 도지사 등의 경력이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준비된 인재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했다. 전체적으로 후보 개인의 특성들을 적절하게 관련 이슈들과 결합해 복지와 경제 관련 이슈들에 대해 ‘잘 할 수 있다’는 이미지 형성을 시도하고, 이슈선점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복지를 강조했듯이 복지에 관해서 만큼은 홍준표 후보도 합의이슈의 형태로 접근했다.

민주당의 안보 이슈 선점 시도와 자유한국당의 공격

2016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에 따르면, 안보 이슈는 새누리당이 소유한 이슈였다.³²⁾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슷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에 유리한 이슈였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안보를 강조했다. 10대 공약에는 네 번째로 안보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대북정책과 연결되는 안보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진보/보수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되어 왔고(강원택 2004; 김무경, 이갑윤 2005; 김주찬, 윤성이 2003), 보수정당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슈이기도 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가능한 안보 이슈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와 연결했다. 협력외교, 강한 안보 안전한 나라 등의 어휘는 누구나 공감할만한 것이었고, 진보정당에 안보 이슈가 상대적으로 뒷순위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슈 선점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의

32)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국방/안보문제를 고려할 때, 다음 중 어느 정당이 가장 잘 해결하리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199명의 응답자 중 46.5%가 새누리당이라고 응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9%에 그쳤다.

33)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다음 중 어느 정당이 가장 잘 해결하리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199명의 응답자 중 새누리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9%였다.

안보 공약은 2012년과 달리 통일이나 대북관계보다는 “강한 안보”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여전히 대북관계 진전을 목표로 하는 안보 이슈였지만 2017년 공약집에는 “북핵 대응”,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국방비 확충”을 더 앞세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재인 후보의 판단은 옳았는데, 2012년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온 ‘안정적 지지자’들과 2017년 새로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새로운 지지자’들이 이념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견해를 가졌지만, 대북지원과 한미동맹 강화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2012-2017년 패널 자료에 따르면,³⁴⁾ 새로운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존의 지지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대북지원과 한미동맹 강화에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³⁵⁾. 따라서 새로운 지지자들을 지키기 위해 안보 이슈를 강조하고 이를 진보정당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과 같은 목표와 엮어 제시한 것은 좋은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후보는 안보 이슈를 재난/안전과 함께 묶어서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세월호 사건과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안전 이슈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중요한 합의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를 안보와 함께 묶어 제시한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도 대립이슈로 공약을 프레임 했다. 안보에는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아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라고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선거 공보에는 미사일과 군대 사진 등을 함께 실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사드 배치 조기 완료, 해병특수전사령부 신설 등 강력한 정책을 주장하면서, “스트롱맨 시대”, “힘의 우위 정책”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안보 이슈를 선거공보와 공약서에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안보보다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상반되기

34) 분석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 제1절에 정리했다.

35) 매우 진보(1점)부터 매우 보수(4점)까지 정책 이념점수를 측정했을 때 대북지원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새로운 지지자들이 0.05 유의수준에서 기존 지지자들보다 약 0.2-0.4 정도씩 유의미하게 더 보수적이었다. 이는 2012년과 2017년 두 시기 모두에서 그러했다. 다른 사회경제적 정책들에 대해 새로운 지지자들과 기존 지지자들의 의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달랐다.

때문이다. 홍준표 후보는 지지층 집결에 집중하면서 보수당이 자신 있는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개편,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와 같은 기업규제 축소/철폐와 관련한 경제성장 공약들도 보수적인 홍준표 후보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홍준표의 행보는 전략³⁾과 비슷하지만, 안보가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소유했던 이슈라는 점에서 다르다. 위의 부패 척결 이슈 역시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소유/선점에 유리한 이슈이며 이것이 거의 확실시되자 오히려 대립이슈의 공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즉,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합의이슈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 정당은 대립이슈를 강조(전략³⁾)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문재인, 홍준표 후보 모두 오히려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이슈에서 대립이슈를 함께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젠더 이슈 및 기타

문재인 후보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것은 성 평등 이슈의 강조이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6번째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10번째 공약으로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를 제시한 것과는 달리 “여성 성차별”을 직접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에도 복지정책을 세 번째로 강조하면서 ‘성 평등사회’를 함께 언급하며 젠더 이슈를 다루었는데, 이는 2017년 대선에서 젠더 이슈를 선점하는 발판이 된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여성 정책 중요도 점수 평균은 6.82점으로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심상정 후보 투표자들의 점수(7.13) 다음으로 높았다.³⁶⁾ 문재인 후보가 여성 정책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4점 만점(최저 0점)에 응답자들은 평균 2.65점(표준편차 0.85)이라고 응답했다. 역시 심상정 후보(3.05) 다음으로 높은 점수였으며, 가장 최저점인 홍준표 후보(1.39점)와는 평균 1.26점 차이($p=0.0000$)였다. 젠더 이슈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36) 분석 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패널 자료의 2017년 제2차 조사 자료이다.

않았고, 성 평등에 대해서는 찬/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슈소유/선점의 뚜렷한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젠더 이슈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사회에서 이를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재인 후보의 이러한 밑 작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문재인 후보는 치매 국가 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등의 복지 정책들을 공약으로 나열했으며, 주로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약들로 채워졌다. 특히 선거공보 마지막에 제시한 ‘통신비 절감’과 같은 정책은 그전까지 제시한 이슈들에 비해 상당히 미시적인 측면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복지 이슈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유리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문재인 후보는 다양한 주제어를 제시하고 이를 합의 이슈 형태로 담아내었다. 이러한 위험 기피 성향은 후보자 간 TV토론이나 언론, 시민단체의 인터뷰 등에서도 이어졌다. 지지층을 잃지 않고 중도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가 가능한 단정적인 의견 제시를 회피했기 때문이다(국민일보 2017/04/21; 국민일보 2017/05/07; 한겨레 2017/04/23)³⁷⁾.

문재인 후보가 정치적 경력과 준비를 강조하며 기존의 합의 이슈 영역들을 잠식해갔다면,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이슈에 접근했다(표 4.6, 4.7). 대립이슈를 부각함으로써 홍준표 후보가 우파 유권자들 설득에 나섰다면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합의이슈들을 발굴하고 강조함으로써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렸다. 따라서 미래와 과학에 초점을 맞추는 공약을 제시했다. 제19대 대선의 화두였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4차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었다.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대립이슈 논쟁을 피하고 합의 이슈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약력을 강조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본인이 의사, 컴퓨터 백신 개발자, 벤처기업 대표,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들

37) 국민일보, 2017년 4월 21일, “동성애, 문재인은 ‘오락가락’... 안철수·홍준표·유승민 ‘절대 반대’”; 국민일보, 2017년 5월 7일, “‘북한 인권 문제 말하지 않는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 없다’”; 한겨레, 2017년 4월 23일, A2면, “성 소수자 인권 공약하는 후보, 정녕 없나요?”.

표 4.7: 안철수 후보 선거공보 속 선거공약

안철수 후보
<p>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p> <p>튼튼한 안보가 경제의 시작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자강 안보, 국방비 증액. 사드 배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 대응센터 설치, 방산 비리 근절.</p> <p>교육, 과학기술,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p> <p>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p> <p>임금 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p> <p>기득권 타파와 국민주권의 협치와 통합의 정치</p> <p>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p> <p>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구현</p> <p>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p> <p>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p> <p>국민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p>

가졌다고 설명하며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의 정치 세력과 본인을 차별화하고자 했다. 안철수 후보의 선거공보 키워드는 “새로움, 미래, 변화”였다. 대통령선거 초반에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새로운 정치”라는 이미지는 지지율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월 1주 차와 2주 차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35%와 37%로 문재인 후보와 3%포인트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³⁸⁾

하지만 선거가 진행될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낮아져 선거 직전 17%까지 떨어진다. 안철수 후보가 “새로움”을 내세우고 나왔던 것이 무색하게 선거공보와 토론에서 보여준 공약들은 대체로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것이 없었다. 제4차 산업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자 시도했으나 선거공보의 속 공약의 상당 부분을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의 강조에 할당했고, 구체적인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신생 정

38)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후조사」 3쪽.

당이였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했듯이 합의이슈에 대한 이슈선점은 지금까지 정당과 정치 엘리트들이 쌓아온 기록과 이미지에 근거한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치 신인에 가까웠고, 경력도 오래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이슈 경쟁에서 문재인 후보에 불리했고, 대립이슈 경쟁을 하기에는 중도 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에 위치가 모호했다. 선거 공보에서도 “이 나라,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닙니다... 편 가르기도 하지 않고”라는 표현을 통해 중도 후보의 모습을 강조했다.

2.2 선거 공약에 대한 유권자 반응

[표 4.8]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슈별로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이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것의 평균이다. 제19대 대선에서 부패척결이 가장 중요했으며,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통일/안보 순으로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18대 대선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에 비해서 제19대 대선에서는 경제성장보다는 부패척결,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했다. 경제성장과 부패척결의 평균 차이는 0.8점(3,686명, $t=-27.5260$, $p=0.000$)이었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평균 차이는 0.34점(3,686명, $t=-14.3191$, $p=0.000$)으로 모두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였다.

[표 4.9]와 [그림 4.2]는 각 후보 투표자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을 보여준다. 먼저 [그림 4.2]는 각 후보 투표자들이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이다. 11개 이슈 영역들 중에 어떤 이슈가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통일/안보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후보 지지자들의 2배 이상 비율의 지지자들이 통일/안보가 국가 정책 중 1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경우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지지자들의 경우 부패 척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장 강조했던 이슈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1순위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예상보다는 높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

표 4.8: 이슈중요도 평균: 제19대 대통령선거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패척결	8.74	1.69	8.75	1.63
일자리창출	8.28	1.61	8.3	1.59
경제성장	7.94	1.71	7.87	1.61
통일안보	7.66	1.88	7.65	1.83
교육정책	7.65	1.72	7.78	1.64
외교국제교류	7.58	1.74	7.77	1.63
경찰치안	7.56	1.73	7.73	1.64
복지확대	7.53	1.84	7.51	1.72
보건의료	7.44	1.67	7.62	1.58
문화산업 활성화	6.51	1.84	6.7	1.75
응답자 수 (명)	3,686		3,361	

중 11%만이 일자리 창출이 1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지지자들도 18, 19%만이 일자리가 1순위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각 이슈별로 0점부터 10점까지 중요도 점수를 매기도록 했을 때, 모든 지지자 집단에서 평균 8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은 일자리 창출과 부패 척결 이슈였다(표 4.9). 일자리 창출이 1순위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선거에서 부각된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표 4.10]과 같다. [표 4.10]의 이슈선점 점수는 해당 후보가 얼마나 각 이슈를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 0점부터 4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한 뒤 응답자들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³⁹⁾ 평균의 다

39) 모든 이슈별로 각 후보들이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했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했다. 2017년 1차 조사에 참여한 총 3,686명의 응답자 중 이슈선점 문항이 포함된 2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3,361명이었으며 이 중 68명의 응답자가 모든 후보, 모든 이슈에 해당하는 50개 문항에 대해 모두 동일한 응답을 했다. 따라서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표 4.9: 제19대 대선 후보 지지자별 이슈중요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분산분석
경제성장	평균	7.84	8.38	8.07	7.94	7.47	N=3,174
	표준오차	0.04	0.08	0.06	0.10	0.11	F=14.22 P=0.000
복지확대	평균	7.79	6.75	7.27	7.13	7.69	N=3,174
	표준오차	0.04	0.12	0.07	0.12	0.10	F=35.76 P=0.000
일자리창출	평균	8.46	8.09	8.35	8.13	8.13	N=3,174
	표준오차	0.03	0.10	0.06	0.11	0.10	F=6.88 P=0.000
교육정책	평균	7.89	7.63	7.81	7.57	7.75	N=3,174
	표준오차	0.04	0.10	0.07	0.12	0.11	F=3.71 P=0.0051
통일/안보	평균	7.61	8.15	7.83	7.66	7.24	N=3,174
	표준오차	0.04	0.12	0.08	0.11	0.12	F=10.64 P=0.000
경찰/치안	평균	7.77	8.01	7.84	7.53	7.50	N=3,174
	표준오차	0.04	0.09	0.07	0.11	0.11	F=5.13 P=0.0004
문화산업	평균	6.86	6.41	6.64	6.32	6.75	N=3,174
	표준오차	0.04	0.11	0.07	0.12	0.12	F=8.84 P=0.000
보건의료	평균	7.75	7.42	7.53	7.38	7.72	N=3,174
	표준오차	0.04	0.10	0.06	0.11	0.10	F=6.51 P=0.000
외교/국제교류	평균	7.89	7.79	7.80	7.60	7.54	N=3,174
	표준오차	0.04	0.09	0.06	0.10	0.11	F=3.93 P=0.0035
부패척결	평균	9.04	8.04	8.60	8.51	8.77	N=3,174
	표준오차	0.03	0.11	0.07	0.11	0.10	F=33.73 P=0.000
여성정책	평균	6.82	5.93	6.57	5.84	7.13	N=3,174
	표준오차	0.05	0.15	0.09	0.17	0.12	F=22.35 P=0.000

그림 4.2: 후보 지지자별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제19대 대통령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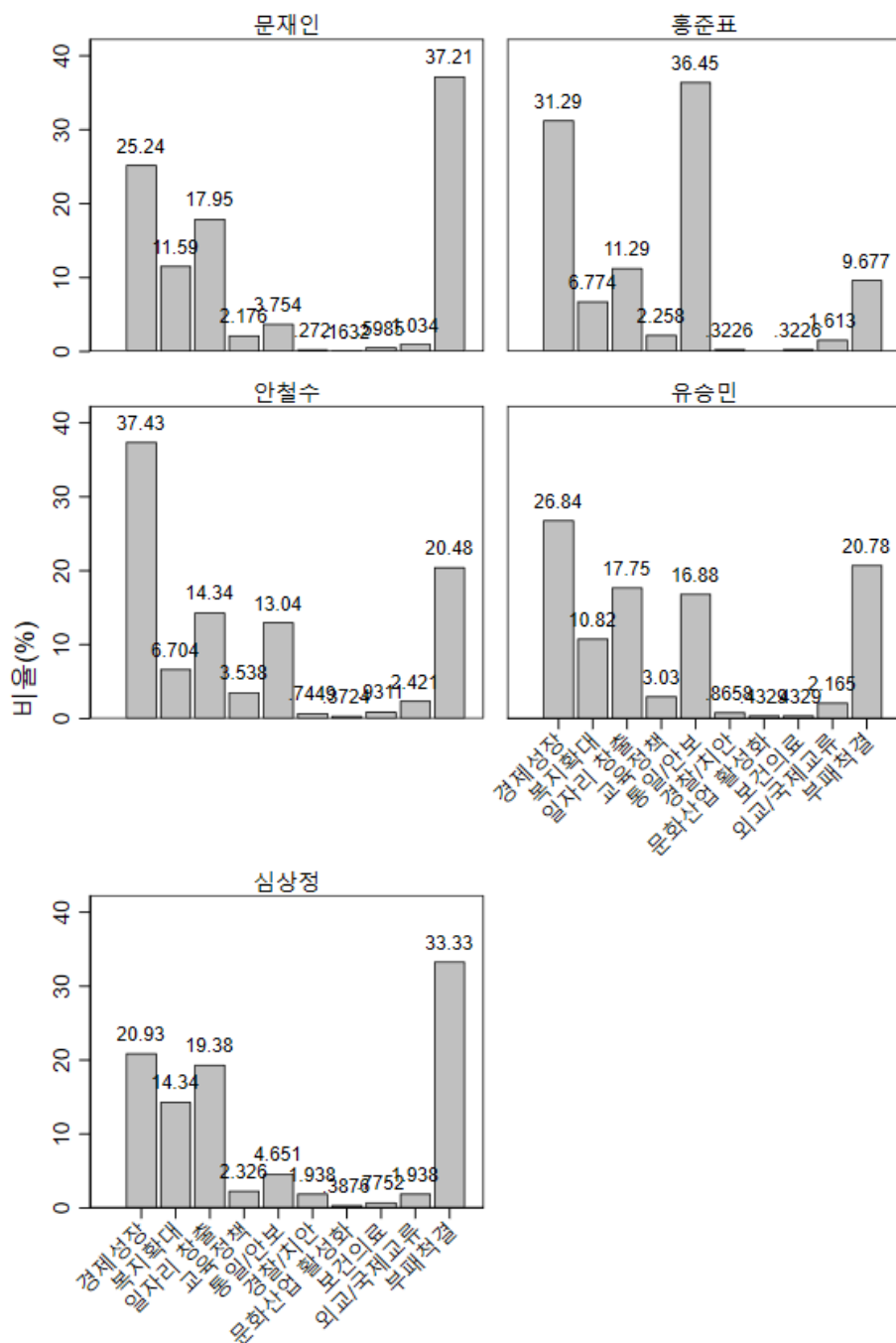


표 4.10: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의 이슈선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N	평균 다변량 검정
경제성장	2.98 (0.02)	2.5 (0.02)	3.04 (0.02)	3.02 (0.02)	2.64 (0.02)	2627	F(4,2623)=269.3 Prob>F=0.0000
복지확대	3.27 (0.01)	1.84 (0.02)	2.72 (0.02)	2.64 (0.02)	3.27 (0.02)	2608	F(4,2604)=760.7 Prob>F=0.0000
일자리창출	3.65 (0.01)	2.09 (0.02)	2.92 (0.02)	2.79 (0.02)	3.12 (0.02)	2597	F(4,2593)=934.7 Prob>F=0.0000
교육정책	2.76 (0.02)	1.8 (0.02)	2.92 (0.02)	2.45 (0.02)	2.57 (0.02)	2502	F(4,2498)=511.2 Prob>F=0.0000
통일안보	2.9 (0.02)	2.82 (0.03)	2.53 (0.02)	2.9 (0.02)	2.37 (0.02)	2559	F(4,2555)=258.3 Prob>F=0.0000
경찰치안	2.54 (0.02)	2.15 (0.02)	2.24 (0.02)	2.36 (0.02)	2.29 (0.02)	2463	F(4,2459)=75.4 Prob>F=0.0000
문화산업	2.5 (0.02)	1.63 (0.02)	2.3 (0.02)	2.15 (0.02)	2.3 (0.02)	2440	F(4,2436)=342.0 Prob>F=0.0000
보건의료	2.63 (0.02)	1.73 (0.02)	2.3 (0.02)	2.24 (0.02)	2.49 (0.02)	2462	F(4,2458)=318.4 Prob>F=0.0000
외교국제	2.93 (0.02)	2.14 (0.02)	2.43 (0.02)	2.52 (0.02)	2.35 (0.02)	2482	F(4,2478)=277.4 Prob>F=0.0000
부패척결	3.51 (0.02)	1.51 (0.02)	2.47 (0.02)	2.39 (0.02)	3.12 (0.02)	2508	F(4,2504)=953.1 Prob>F=0.0000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변량 검정(multivariate tests of means)은 변수들의 평균값이 모두 같다는 영가설을 검정하는 것으로, 0.05 유의수준에서 p가 0.05 미만이면 영가설을 기각한다. 즉, 변수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 된다. [표 4.10]의 평균 다변량 검정 결과를 보면 10개 모든 이슈에서 5명 후보의 이슈선점 점수 평균이 모두 같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10개 이슈에 대해 최소한 한 명의 후보는 차별적으로 이슈선점을 했거나, 최소한 한 명의 후보가 이슈선점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된다.

판단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68명의 응답자를 분석에 포함해도 평균 다변량 검정의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모든 이슈에 대해 영가설을 기각했다.

민주당의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선점

2019년 선거에서 주요 이슈였던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부터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가 두 이슈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도 1순위로 강조해 온 이슈였으며, 2017년 대선 토론 등에서도 81만 개 공공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득주도 성장 등의 정책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서 평균 3.65점을 받았으며 이는 부패 척결보다 높은 점수였다.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심상정 후보였다. 일자리 창출에 진보 후보 두 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패 척결에 대해서도 야당 소속 후보라는 점, 야당 정치인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다는 점 등에 기대가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한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국정원 재편 등이 부패 척결 이슈선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창출과 부패 척결과 관련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찬/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립이슈였지만, 이를 ‘일자리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일자리와 부패 척결이라는 큰 합의이슈의 형태로 묶이면서 유권자들 또한 문재인 후보가 해당 이슈들을 강조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경우 일자리 창출과 부패 척결이 중요한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이슈선점이 투표에 작용했는지는 제6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지지자별 이슈중요도 역시 문재인 지지자들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표 4.9). 문재인 투표자들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1순위로 뽑은 부패 척결은 각 이슈중요도 점수에서도 평균 9.04점을 받았다. 지지자별 이슈중요도 평균값 중 유일한 9점대 점수였다.

안보 이슈의 분점(分占)

통일/안보 영역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슈선점 점수가 모두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낮았지만,

통일/안보 이슈선점 점수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이슈선점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그가 대립이슈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슈선점 형태로 선거전략을 짰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에서 불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일/안보 이슈의 경우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유승민 후보와 점수가 비슷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점수가 더 높았다. 문재인 후보와의 차이는 0.08점($N=2,559$, $p=0.0133$), 유승민 후보와의 차이는 0.08점($N=2,559$, $p=0.0008$)이었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N=2,559$, $\text{diff}=0.0016$, $p=0.9490$).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통일/안보 이슈를 상당히 대립적인 관점에서 제시했음에도 응답자들은 그가 문재인, 유승민 후보와 비슷한 정도로 통일/안보를 강조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주목해볼 점이다. 만약 통일/안보가 중요한 유권자라면 세 후보에 대한 이슈 평가 점수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통일/안보 이슈를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선점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에서 문재인, 유승민 후보와 비슷한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던 대북정책 기조나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이미지가 작용했고, 대립이슈의 형태지만 극단적인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한 홍준표의 이미지가 안보를 강조한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이다.

경제, 교육, 복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고, 그 뒤로 유승민, 문재인 순으로 이슈선점 점수가 높았다. 세 후보의 점수는 거의 비슷했는데, 안철수, 유승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지만($N=2,627$, $\text{diff}=0.23$, $p=0.1502$), 다른 세 후보와의 차이는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문재인 후보보다는 평균 0.06점($N=2,627$, $p=0.0047$), 홍준표 후보보다는 0.54점($N=2,627$, $p=0.000$), 심상정 후보보다는 평균 0.4점($N=2,627$, $p=0.000$)이 높았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보다 경제성장을 차별적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이고, 홍준표 후보가 역사가 오랜 보수정당 소속 후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보수정당이 전통적으로 선점해오던 경제성장 이슈를 제3당 후보가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철수 후보의 사업가 배경이 이슈선점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같은 보수진영 유권자들이라도 신생 정당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더 경제성장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정책에 대한 이슈선점 점수 역시 후보의 배경이 이슈선점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다른 4명의 후보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문재인 후보와의 차이는 0.16점($N=2,502$ $p=0.000$), 홍준표 후보와의 차이는 1.12점($N=2,502$ $p=0.000$), 유승민 후보와의 차이는 0.47점($N=2,502$ $p=0.000$), 심상정 후보와의 차이는 0.35점($N=2,502$ $p=0.000$)이었다. 안철수 후보의 학력과 교육자로서의 경력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보에서 후보가 살아온 배경과 경력을 소개하는 것이 관련 이슈들을 잘 해결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이슈선점 점수를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거의 같은 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0.003점 더 높은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둘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후보와 다른 세 명의 후보들과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⁴⁰⁾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복지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보 정당 후보들이 선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가 2.63점, 심상정 후보가 2.49점이었으며 두 후보의 점수 차($\text{diff}=0.14$, $p=0.000$)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문재인 후보는 꾸준히 치매 국

40)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차이는 1.4점($N=2,608$ $p=0.000$), 안철수 후보와의 차이는 0.55점($N=2,608$ $p=0.000$), 유승민 후보와의 차이는 0.6점($N=2,608$ $p=0.000$)이었다. 심상정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차이는 1.4점($N=2,608$ $p=0.000$), 안철수 후보와의 차이는 0.55점($N=2,608$ $p=0.000$), 유승민 후보와의 차이는 0.63점($N=2,608$ $p=0.000$)이었다.

가책임제 등 의료 복지를 강조했는데 이러한 공약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안철수 후보의 점수가 문재인, 심상정 후보 다음인 세 번째로 높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의사였던 안철수 후보의 경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응답자들이 보건/의료 이슈를 복지 이슈로 인식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표 4.10]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여성정책 이슈선점 또한 함께 조사했다. 이슈선점 점수는 문재인 후보 2.67점, 홍준표 후보 1.40점, 안철수 후보 2.15점, 유승민 후보 2.14점, 심상정 후보가 3.07점을 받았다.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 정책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심상정 후보 투표자들이 생각하는 여성 정책의 중요도는 평균 7.13점이었으며, 이는 전체 평균 6.63점보다 0.5점 높은 점수이다. 그리고 여성 정책 이슈선점 점수에서도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가 3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홍준표 후보와는 1.73점 차이($p=0.000$)였다. 홍준표 후보는 4점 만점에 1.40점을 받았는데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유일한 1점대 점수였다. 2점이 보통 정도 강조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1점대 점수는 응답자들이 홍준표 후보가 여성 정책을 거의 강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진 홍준표 후보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 성 평등 정책을 강조해 온 문재인 후보도 2.67점으로 2위였지만 심상정 후보와의 평균 0.4점 차이($p=0.000$)였다. 홍준표 후보는 복지, 교육, 문화산업, 보건의료, 부패 척결에 대해서도 1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정리하면, 과거에 경제와 안보는 보수정당, 복지는 진보정당에 유리한 이슈였으나 2017년 대선에서는 제3당, 제4당 후보의 등장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러한 이슈선점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은 안철수 후보가 선점했고, 안보는 두 명의 보수진영 후보와 2012년부터 안보를 꾸준히 강조해 온 문재인 후보까지 세 명의 후보가 분점했다. 이는 복지, 보건/의료 이슈들을 진보정당 후보들이 선점한 것과 상반된다. 결국, 문재인 후보는 전통적으로 강했던 복지 이슈들 선점에 성공하고 2012년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일자리 창출,

그리고 박근혜 탄핵과 촛불집회로 주요 이슈로 떠오른 부패 척결 등 모두 이슈 선점에 성공함으로써 선거에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소 결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중요했던 이슈는 경제와 복지의 조화, 사회적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이었으며 이는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배경을 보여준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족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여론조사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대북관계, 안보, 복지 확대 등이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듯이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는 복지, 일자리, 안보,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거 공보에서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당시 가장 중요했던 이슈로써 두 후보가 모두 일찍부터 공약집에 넣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 진보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박근혜 후보의 적극적인 선점 시도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선점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보다 많았다(표 4.4).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1순위로 강조했다. 기존 연구들은 정당이 기존에 소유하고 강조해 온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경제성장, 민주당은 복지가 선거에서 유리한 이슈였다(강원택, 2010; 윤홍식, 2013).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상대 진영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안보를 강조했다으나, ‘강한 안보’보다는 평화적인 대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두 후보의 이슈선점 경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 투표자들은 경제성장이 다른 이슈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중요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 투표자들에게는 부패척결, 정치개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이 비슷한 정도로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경제

성장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일자리 창출 이슈의 선점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이슈는 박근혜 후보가 선점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안보/대북관계 이슈선점을 시도했으나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에 민주당이 소유하고 있었던 복지이슈의 경우 박근혜 후보의 이슈선점 시도가 있었으며, 문재인 후보의 이슈 선점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박근혜 후보의 노력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보다 진보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경우 민주당보다 진보적으로 인식했다.

2017년 대선에서 중요했던 이슈는 부패척결, 일자리 창출, 복지, 안보이다. 모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으며, 문재인 후보의 경우 부패척결을 특히 강조했고 홍준표 후보는 부패척결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권자들은 부패척결, 일자리 창출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다고 평가했다. 통일/안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분점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은 안철수 후보가 높은 이슈선점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유승민, 문재인 후보 역시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정당이 소유하고 있던 이슈를 후보자가 선점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복지 이슈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집에서 복지를 강조했으며, 복지 확대 이슈선점 점수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와 큰 차이로 앞섰으며 심상정 후보와는 같은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 후보가 정당 소유가 불분명한데 선점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슈는 일자리창출과 부패 척결이다. 공약에서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슈선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의 경우 정당이 소유하고 있던 안보와 경제성장에 대해 대립이슈 공약을 내세웠다. 이슈선점이 반드시 합의 이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안보, 경제 이슈 선점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대립이슈의 선점은 “안보 이슈의 선점”이라기 보다는 각 구체적인 정책, 예컨대 “사드 배치 이슈선점”에 가깝다. 홍준표 후보의 다른 이슈 평균 점수 중 안보 이슈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유일하게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근소

했던 이슈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분점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선점을 시도했으나 안보와 젠더 이슈는 분점에 그치거나 선점하지 못했다. 안보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후보 간 경쟁 속에서 분점에 그쳤으며, 젠더 이슈는 문재인 후보가 공약집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인 제6순위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2년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현저한 이슈가 아니었으며, 한국 사회에서는 찬/반 논쟁의 영역에 있다.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의 경우 부패 척결 이슈를 정당이 소유하지도 않았고, 두 후보가 선거 상황에서 불리한 이슈였기 때문에 공약에는 있었지만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 5 장

합의이슈와 정당일체감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공약과 여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일체감과 합의이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정당일체감이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에 미치는 영향을 제3장에서 설계한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과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으로 분석할 것이다.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을 통해서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가 단기적으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 분석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변화를 바탕으로 응답자를 ‘견고한 무당파’, ‘정당 지지층’, ‘부동층’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표 3.3).

본 장의 목표는 합의이슈에 대한 설득과 투사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합의이슈가 대립이슈와 어떻게 다른지 밝혀내는 것이다. 유권자가 좋아하는 후보의 찬/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립이슈의 설득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가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대립이슈의 투사이다. 합의이슈의 경우, 좋아하는 후보가 강조하고 선점을 시도한 이슈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이 설득이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좋아하는 후보 역시 강조하고 선점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투사이다. 어떤 조건, 어떤 이슈에 대해 설득, 투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합의이슈의 투사/설득이 대립이슈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 분석한 공약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 설득과 투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폈다면, 이후 제6장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을 분석할 것이다. 제5장은 후보 선택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유권자의 이슈에 대한 수요와 요구, 그리고 후보의 공약과 이슈선점 시도,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사와 설득을 분석한 이후, 제6장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필 것이다.

제5장의 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이슈 태도가 정당일체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정당일체감에 의한 합리화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슈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전에 이슈 태도에 정당일체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슈선점과 이슈 태도가 공약과 정당일체감 등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입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본 장에서 사용한 자료와 변수 조작화는 제3장 제3절에 정리되어 있다.

제 1 절 제18대 대통령선거: 이슈중요도와 정당일체감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 전 두 차례, 선거 직후 한 차례, 총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정당 혹은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조사한 문항은 없었으며 응답자들의 국가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만을 조사했다. 따라서 본 설문자료만으로는 당시 후보들의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본 절에서는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의 관계를 통해 설득과 투사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정당일체감은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dy and Page, 1972; RePass, 1971). 본 연구에서 합의이슈에 대한 설득과 투사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설득과 투사의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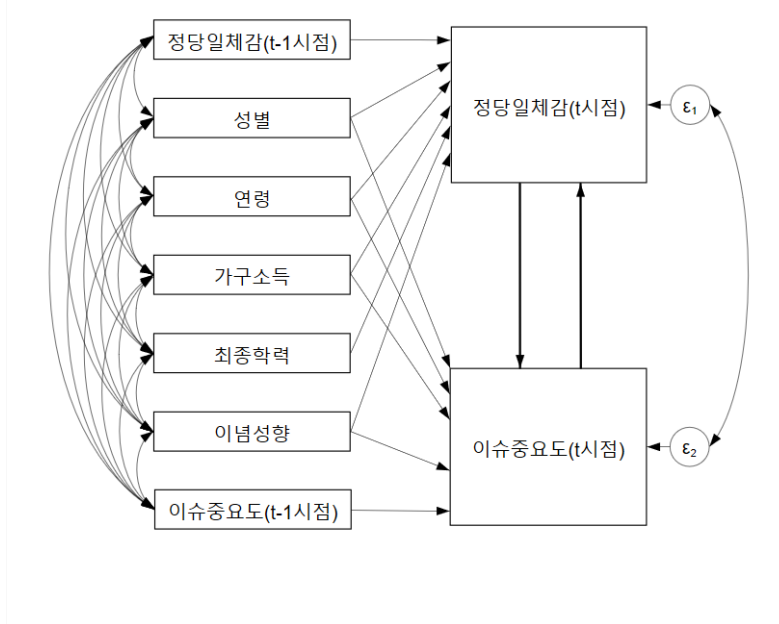
설득 효과에는 좋아하는 후보에게 동의하는 동조 효과와 싫어하는 후보의 입장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대조 효과가 있다. 이를 합의이슈에 적용하면, 좋아하는 후보가 강조한 이슈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싫어하는 후보가 강조한 이슈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된다. 투사와 설

득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이를 한 모형에서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3장에서 설계한 경로모형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경로모형은 내생변수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분석 모형이다. 2012년 설득과 투사 효과 연구모형은 [그림 5.1]과 같다. 자칫 모형 내에서 순환이 발생해 추정이 불가능한 모형이 될 수 있으므로 사후검정으로 안정성 검정을 실행한다. 본 연구에서도 모형마다 안정성 지수(stability index)를 적시했으며,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연구모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카이제곱 검정¹⁾,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을 확인했다. 카이제곱의 p 값은 0.05보다 클 때, RMSEA는 0.05보다 작을 때, CFI는 0.9보다 클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홍세희, 2000).

[그림 5.1]을 분석한 것이 [표 5.1]이다. [표 5.1]는 주요 결과만을 요약한 것이며, 모형의 모든 회귀계수와 모형적합도를 정리한 표는 부록에 첨부했다.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했던 이슈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 안보, 경제성장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1순위로 강조하며 선점했고, 그 뒤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경제성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점을 시도했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 공보에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이어서 경제민주화, 복지, 정치개혁, 균형 발전 이슈선점을 시도했다. 문재인 후보는 평화로운 대북관계와 안보 이슈 역시 공약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 부패 척결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설득될 가능성이 있었다. 일자리창출과 복지 이슈의 경우 두 후보가 모두 강조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카이제곱 검정 영가설은 “전집(in the population) 모형은 변수 간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홍세희, 2000, 164쪽)”는 것으로, 홍세희 (2000)는 이에 대해 모형의 간접성을 해칠 수 있고, 샘플 수에 영향을 받는 검정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있어 카이제곱 검정 대신 CFI와 같은 적합도 지수가 많이 사용된다(홍세희, 2000, 164-165쪽).

그림 5.1: 제18대 대통령선거 합의이슈 중요도와 정당일체감 연구 모형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라면 지지하는 후보에게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

[표 5.1]의 결과 중 이슈중요도가 정당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본 자료에서 조사한 모든 합의이슈에 대해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유권자들이 본인의 이슈중요도에 따라 지지할 정당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정당일체감이 이슈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추정했을 때, 경제성장, 부패 척결,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에 따라 이슈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민주

2) 다만,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슈중요도가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미쳤다. 대북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N=1,027$, $\text{coef.}=0.28$, $\text{beta}=0.18$, $\text{S.E.}=0.07$, $p=0.000$). 반대로 정당일체감은 대북정책 중요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제4장에서도 지적했듯이 대북정책은 합의이슈가 아닌 대립이슈이기 때문에 본 장의 분석 대상이 아니며, 대북정책의 이슈중요도 점수 또한 평균 0.27점($N=1,921$)으로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따라서 본문의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이슈중요도가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이 이슈중요도에 따라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또한, 대립이슈에서 설득이 잘 일어난다는 선행 연구들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며, 대립이슈와 합의이슈의 차이를 보여준다. 대북정책 경로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text{stability index}=0.0858214$, $\chi^2(df)=0.826$, $p=0.363$, $\text{RMSEA}=0$, $\text{CFI}=1$.

표 5.1: 정당일체감과 합의이슈 경로모형 분석 결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이슈중요도→정당일체감		정당일체감→이슈중요도		N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경제성장	0.03 (0.02)	0.08	0.41*** (0.11)	0.16***	1027
역사인식	0.04 (0.04)	0.05	-0.09 (0.06)	-0.06	1027
부패척결	-0.02 (0.02)	-0.05	-0.22* (0.09)	-0.10*	1027
일자리창출	-0.02 (0.02)	-0.05	-0.16 (0.10)	-0.07	1027
지역경제	0.03 (0.03)	0.04	0.06 (0.07)	0.04	1027
복지정책	0.01 (0.02)	0.01	-0.13 (0.09)	-0.06	1027
교육개혁	0.01 (0.04)	0.01	0.08 (0.06)	0.06	1027
정치개혁	-0.03 (0.02)	-0.08	-0.23* (0.10)	-0.10*	1027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당 지지자들보다 경제성장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³⁾

이러한 결과를 제4장의 분석과 연결해보면, 먼저 이번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던 이슈에 대해서는 정당일체감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후보들의 역사 인식,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개혁 이슈는 이슈중요도 평균이 모두 0.35점

3) 설득과 투사에는 정당일체감 외에도 후보 호감도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후보 호감도를 추가로 통제한 모형 또한 분석했으며 그 결과 정당일체감이 부패 척결과 경제성장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후보 역사 인식과 일자리 창출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보의 역사 인식은 중요도 점수 평균이 0.26점(N=1,921)에 불과해 응답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이하였다(표 4.3). 반면 정당일체감의 영향이 나타난 경제성장 이슈중요도 평균 점수는 1.15점(N=1,921)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정치개혁과 부패 척결의 평균점수 또한 각각 0.98점(N=1,921), 0.93점(N=1,921)으로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표 4.3). 하지만 역시 유권자들에게 중요했던 일 자리창출과 복지에 대해서는 정당일체감의 영향이 없었다.

경제성장의 경우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선점한 것이 유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는 일찍부터 경제민주화 선점을 위해 노력해왔고, 선거 기간 동안 가장 강조한 이슈였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재벌 개혁, 양극화 해소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함께 묶일 수 있는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유권자들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비즈에서 발표한 경제개혁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응답자 1,000명 중 76.8%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⁴⁾ 언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경제성장을 화두로 올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보도했다.⁵⁾ 따라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경제성장, 경제민주화 공약에 설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10대 공약에서 제2순위, 제3순위로 정치개혁과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12월 4일 진행된 첫 TV토론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지금 새누리당 정부는 거의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가족까지 모두 합쳐 47명이 비리로 구속됐다.”라고 강도 높게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그리고 이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할 통한 공직사회와 재벌의 비리를 근절,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이라는 대책을 제시했다.⁶⁾ 선거 유세에서도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에...

4) 경향비즈, 김경학. 2012/12/05. “경제민주화 정책, 경제성장에 도움 될 것”

5) 동아일보, 김동주. 2012/11/13. “박근혜, 성장 - 안보 부쩍 강조... ‘집토끼’를 지켜라?”

6) 연합뉴스. 2012/12/04. “〈박근혜-문재인, 첫 TV토론 지상 중계〉”

검찰의 부패와 오만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정부의 부패를 비판하는 등 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⁷⁾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캠페인 등에 설득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은 두 후보가 모두 강조하며 선점을 시도했던 이슈였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이슈 소유가 불분명해 양 정당이 모두 선점을 시도했으며, 복지 정책의 경우 진보 정당이 소유한 이슈로 문재인 후보가 유리했으나 박근혜 후보의 공격적인 선점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슈를 분점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4.1]에 따르면 복지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 투표자 비율에 두 후보 지지자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복지 및 경제민주화 정책’을 선점했는지 묻는 말에도 박근혜 후보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표 4.4). 즉, 이슈소유/선점이 분명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당일체감에 의한 설득이 일어나지만, 선점이 불분명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당일체감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정당일체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밖에 다른 변수들이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⁸⁾ 이념 성향은 유권자의 이슈중요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당일체감에는 모든 이슈 모형에서 지속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보수적일수록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 역시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소득 또한 모든 이슈에 대해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슈중요도에는 성별과 가구소득이 이슈에 따라 영향을 미쳤다. 남성이 여성보다 부패 척결을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한국 유권자들의 이슈 태도가 정당일체감에 의해

7) 동아일보. 2012/11/30. “[한상대 검찰총장 오늘 사표]與 “현 수뇌부 개혁능력 상실” 文 “檢 부패-오만 뿌리 뽑겠다””

8) 다른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과 표준오차, 분산과 공분산 등은 부록에 표로 정리했다.

영향을 받아 형성되거나 변화할 수는 있지만, 이슈 태도에 따라 정당일체감이 형성되거나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은 일부 이슈들에 대해 단기적인 이슈 태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의 정책적 입장에 일정 부분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는 단기적인 정당 지지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것은 유권자들 개인의 이슈 태도가 우선하여 지지 정당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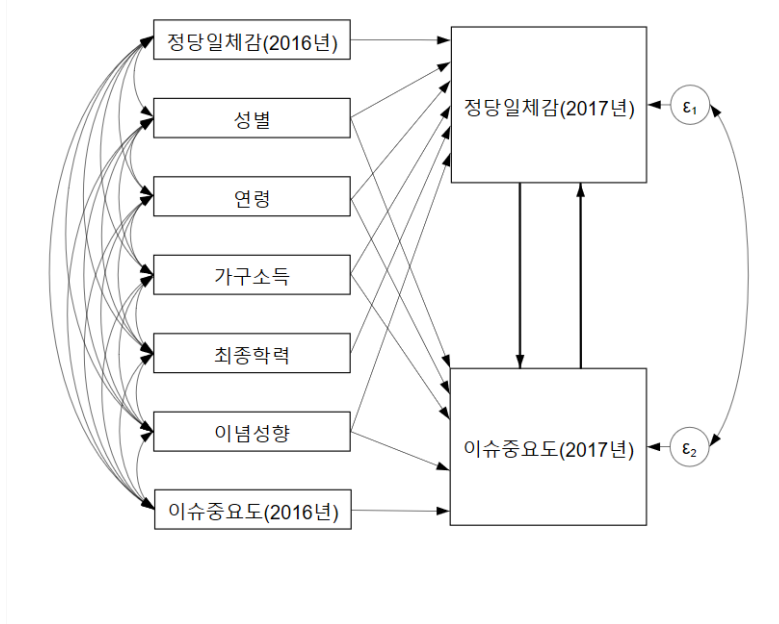
하지만 합리화 과정 이후에도 이슈 태도와 정당일체감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예컨대,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경제성장 이슈를 강력하게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 중 약 47%가 투표가 진행된 후 조사한 2차 시점에서 여전히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설득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서 이를 통해 이슈투표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 2 절 제19대 대통령선거

2.1 이슈중요도와 정당일체감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 전 한 차례, 선거 직후 한 차례, 총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득과 투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설득/투사가 일어나는 t 시점과 t 시점의 이슈 태도의 바탕이 되는 $t-1$ 시점의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설득/투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설문조사 목록은 제3장 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제2절에서 분석하는 응답자들은 2016년과 2017년 설문조사에 모두 답한 응답자들이다.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 사이의 설득과 투사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일체감이 이슈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6년의 이슈중요도는 2017년에 영향을 미치고, 2016년에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지는 2017년 정당일체감에

그림 5.2: 제19대 대통령선거 합의이슈 중요도와 정당일체감 연구 모형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2017년 대선에서의 이슈중요도와 정당일체감 관계는 [그림 5.2]의 연구 모형과 같다.

2012년 대선 때와 달리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주요 정당으로 경쟁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주요 정당이었다. 따라서 2016년 정당일체감은 새누리당 지지 여부, 민주당 지지 여부, 국민의당 지지 여부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2017년 정당일체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여부, 자유한국당 지지 여부, 국민의당 지지 여부로 나누어 분석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신생 정당이거나 응답자 수가 적어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 정당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모형을 설계하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지지 여부가 이슈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2016년 정당일체감은 새누리당 지지 여부로 코딩했다. 민주당 지지 여부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의 경우, 2017년 정당일체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여부, 2016년 정당일체감은 민주당 지지 여부로 측정해 모형에 포함했다. 세 개 정당에 대해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표 5.2: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 경로 모형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슈중요도→정당일체감		정당일체감→이슈중요도		N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정당일체감	이슈					
자유한국당	복지확대	-0.01 (0.01)	-0.08	-1.67** (0.56)	-0.22**	1,370
민주당	복지확대	0.02* (0.01)	0.09*	0.63** (0.20)	0.17**	1,370
	교육정책	0.02 (0.01)	0.06	0.38* (0.19)	0.11*	1,370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활성화, 보건의료, 외교/국제교류, 부패 척결 이슈중요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했으므로 총 27개의 모형을 분석했으며, 이 중 정당일체감의 영향이 확인된 것은 총 3개 모형이었다. 정당일체감의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 모형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5.3]이며, 자세한 결과를 담은 표는 부록에 수록했다.

제4장의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2017년 대선에서 중요했던 이슈는 부패 척결,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그리고 안보 이슈이다. 다섯 명의 후보 모두 해당 이슈들을 선점하고자 시도했으나, 이 중 부패 척결과 일자리 창출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으며, 안보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의 적극적인 선점 시도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분점했으며, 안보의 경우 홍준표,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분점했다. 복지 이슈의 경우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가 유리했고, 홍준표 후보 역시 10대 공약 중 3개 공약을 복지에 할애하는 등 이슈선점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슈선점 점수는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가 높았다.

주요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복지 확대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에 의한 부정적 설득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반대로 긍정적 설득 효과가 있었다. [표 persue2017]에 따르면, 민주당 지

지자들은 다른 정당 지지자들보다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복지 이슈중요도는 정당일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준화 회귀 계수를 비교했을 때, 이슈중요도가 정당일체감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당일체감이 이슈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확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소유해 온 이슈이다. 제4장의 이슈선점 점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의 복지 이슈선점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높았다. 홍준표 후보 역시 ‘서민 중심 복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복지를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복지 이슈에 대한 부정적 설득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같은 상대 정당에서 오랫동안 강조하고 소유해온 이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싫어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입장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조 효과(contrast effect)가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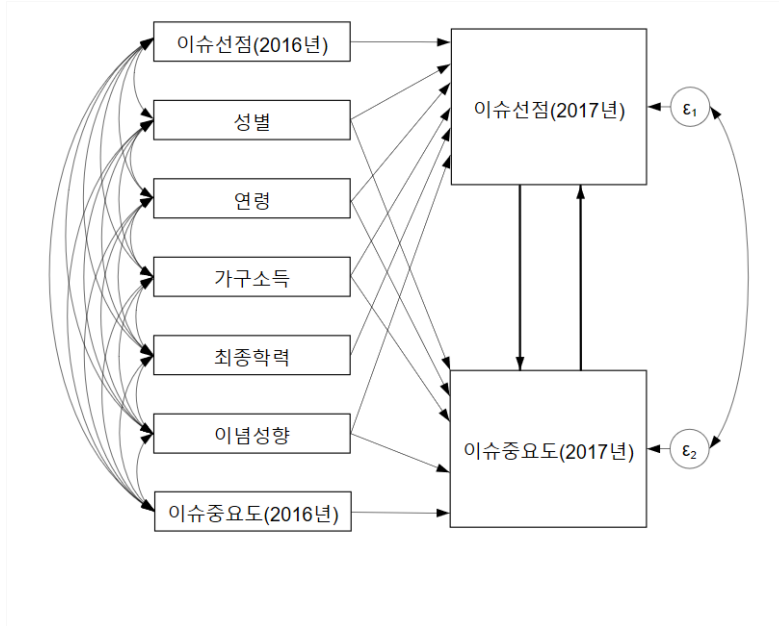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른 정당 지지자들보다 교육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육정책은 2017년 대선에서 다른 이슈에 비해 크게 주목받은 이슈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학제 개편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공약을 제시한 이슈 영역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 국공립대 공동입학 등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⁹⁾ 교육 관련 공약들이 대립이슈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교육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2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설득과 투사

2012년과 달리 2016년과 2017년 조사 자료에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이슈선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제2절에서는 제3장에서 설계한 경로 모형을 통해 정당일체감에 따라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가

9) 경향신문, 이지선 기자. 2017/04/28. “[대선후보 공약 평가]②홍준표 빼고 “교육 개혁””

그림 5.3: 제 19대 대통령선거 합의이슈에 대한 설득과 투사 연구 모형



선점한 이슈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설득이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강조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투사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그림 5.3]과 같다.

2016년에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는 2017년에도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6년 이슈중요도가 2017년 이슈중요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모형에 포함했으며, 같은 이유로 2016년 이슈선점 평가와 2017년 이슈선점 평가를 잇는 경로를 모형에 포함했다. 2016년은 국회의원 총선거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이슈선점은 정당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슈를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이슈선점 정도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2017년에도 이슈별 후보별로 이슈선점 평가 점수를 5점 척도로 조사했으며 분석에 포함했다. 2017년 제2차 조사에서 5명 후보의 10개 이슈에 대해 이슈선점 인식을 조사했으며, 총 50개 문항에 같은 응답을 한 68명의 응답자는 응답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했다.¹⁰⁾ 후보 이슈선점에 대

10) 2017년 제2차 조사의 총응답자 수는 3,293명이다.

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때도 분석에서 제외했다. 2016년에는 8개 이슈, 2017년에는 10개 이슈에 대해 이슈선점을 조사했으며 본 절에서는 2016년과 2017년 두 번 모두 조사한 경제성장, 복지, 일자리 창출, 교육, 경찰/치안, 문화, 보건/의료, 외교/국제정치 8개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자세한 변수 조작화는 제3장에 정리했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했다.

설득과 투사는 정당일체감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정당일체감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모형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국민의당 지지자로 집단을 나누고, 다른 정당 지지자이거나 무당파인 경우 분석하지 않았다. 무당파의 경우 지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설득이나 투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 경우 이슈선점(2016년)은 2016년에 민주당 후보들이 얼마나 이슈를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하며, 이슈선점(2017년)은 유권자가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이슈를 강조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낸다. 한편, 2012년 선거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슈 태도와 이슈선점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소득, 최종학력, 이념 성향을 모형에 포함해 통제했다.

분석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은 전체 분석 결과 중 설득 효과와 투사 효과의 경로계수만을 정리한 것이며, 모든 변수의 경로계수와 공분산 값 등을 정리한 표는 부록에 첨부했다. 2017년 대선의 주요 합의이슈는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안보, 경제성장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6년 설문에는 부패 척결과 안보에 관한 이슈선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설득보다는 투사가 많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문화산업, 외교/국제교류 이슈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가 강조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복지 확대와 외교/국제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홍준표 후보가 해당 이슈를 선점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보건/의료, 외교/국제교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안철수 후보가 해당 이슈를

강조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조사에 포함된 모든 이슈에 대해 투사 효과가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설득과 투사는 유권자가 후보 공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이때 유권자의 의견이 강할수록 투사가 일어나기 쉽고, 정당의 입장이 강하거나 정당 간 차별성이 클수록 설득이 일어나기 쉽다(제2장). 합의이슈의 성격상 후보 간 견해 차이가 대립이슈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득보다는 투사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이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자일수록 본인 정당 후보의 이슈선점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득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설득 효과가 나타났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했을 때 투사 효과보다 설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가 2012년과 2017년 선거에서 꾸준히 제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선점을 시도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당과 후보의 노력에 설득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일자리 창출 이슈 외에는 후보에 의한 설득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 복지 확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설득 효과가 나타났다. 복지 확대는 투사와 설득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했을 때 설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홍준표 후보가 복지를 강조했다고 생각할수록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홍준표 후보가 합의이슈로 복지를 강조한 것이 지지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정당일체감이 이슈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했을 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복지정책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과 [표 5.3]에 따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상대 정당이 소유/선점한 것으로 생각한 복지 이슈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홍준표 후보의 선점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득이 일어났다. 소속 정당의 후보가 이슈선점했다고 생각하면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에게는 이슈 경쟁이 의미가 있으며, 선거 분석에서는 주관적 이슈선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 설득과 투사 효과 경로모형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일체감	이슈	이슈중요도→이슈선점		이슈선점→이슈중요도		N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민주당	경제성장	0.31*** (0.05)	0.65***	0.21 (1.19)	0.1	498
	복지확대	0.24*** (0.04)	0.52***	0.74 (0.51)	0.34	494
	일자리창출	0.19*** (0.03)	0.56***	1.89** (0.60)	0.64**	482
	교육정책	0.19** (0.07)	0.39**	1.19 (0.65)	0.59	486
	경찰/치안	0.08 (0.06)	0.16	0.17 (0.46)	0.09	472
	문화산업	0.19*** (0.05)	0.38***	0.75 (0.50)	0.37	472
	외교/국제	0.29*** (0.05)	0.65***	0.52 (1.84)	0.23	475
한국당	경제성장	0.06 (0.18)	0.13	2.73 (1.45)	1.21	79
	복지확대	0.21* (0.09)	0.53*	3.23** (1.04)	1.30**	79
	경찰/치안	0.11 (0.22)	0.22	1 (0.89)	0.48	76
	보건/의료	0.2 (0.14)	0.43	2.24* (1.03)	1.04*	76
	외교/국제	0.61* (0.29)	1.17*	1.01 (0.90)	0.52	78
국민의당	경제성장	0.27** (0.08)	0.49**	0.37 (0.41)	0.2	158
	복지확대	0.10* (0.05)	0.27*	0.02 (2.88)	0.01	155
	일자리창출	0.21** (0.08)	0.38**	0.57 (0.60)	0.31	153
	교육정책	0.30*** (0.06)	0.64***	-0.05 (1.08)	-0.03	152
	경찰/치안	0.36*** (0.08)	0.68***	0.93* (0.40)	0.49*	155
	문화산업	0.30*** (0.07)	0.59***	0.85* (0.43)	0.43*	152
	보건/의료	0.31*** (0.07)	0.56***	0.26 (0.54)	0.14	153
	외교/국제	0.24*** (0.07)	0.44***	1.09 (0.68)	0.59	152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표 5.4: 부패척결 이슈선점에 대한 정당지지자별 평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N	평균 다변량 검정
무당파	3.32 (0.03)	1.84 (0.04)	2.59 (0.04)	2.5 (0.03)	3.03 (0.03)	683	$F(4,679) = 162.19$ Prob > F = 0.0000
민주당	3.73 (0.02)	1.09 (0.04)	2.2 (0.03)	2.2 (0.03)	3.15 (0.03)	964	$F(4,960) = 864.16$ Prob > F = 0.0000
한국당	3 (0.09)	2.79 (0.07)	2.52 (0.07)	2.46 (0.07)	2.69 (0.09)	160	$F(4,156) = 11.95$ Prob > F = 0.0000
국민의당	3.46 (0.04)	1.78 (0.07)	3.01 (0.05)	2.66 (0.05)	3.13 (0.05)	325	$F(4,321) = 115.53$ Prob > F = 0.0000
바른정당	3.46 (0.07)	1.86 (0.10)	2.79 (0.08)	2.83 (0.08)	3.01 (0.09)	121	$F(4,117) = 36.88$ Prob > F = 0.0000
정의당	3.67 (0.04)	0.89 (0.07)	2.3 (0.06)	2.24 (0.06)	3.6 (0.04)	239	$F(4,235) = 248.82$ Prob > F = 0.0000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경찰/치안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안철수 후보가 강조했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이슈 모두 투사 효과가 설득 효과보다 컸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일자리 창출 이슈에 대해 설득 효과가 나타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역시 홍준표 후보가 공약에서 강조한 복지 이슈에 대해 설득이 일어났지만,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는 선거에서 크게 주요하지 않았던 이슈에 대해 설득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t-1 시점인 2016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경로모형을 통해 살펴보는 못했지만, 부패척결 이슈는 2017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이다. 따라서 2017년 조사 자료를 통해 부패 척결과 정당일체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결과는 [표 5.4]와 같다. 모든 집단에서 문재인 후보의 이슈선점 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지지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은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부패 척결을 선점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패 척결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설득, 투사 영향이 약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제 3 절 제18대와 제19대 대통령선거 비교: 정당일체감의 장기적 영향

제1절과 제2절에서 단기간의 설득과 투사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제3절에서는 장기간의 유권자의 태도 변화를 정당일체감과 관계 속에서 분석한다. 유권자 집단은 제3장 [표 3.3]에 따라 구분했다. 유권자들은 이슈에 대해 정당이 보인 성과를 토대로 해당 이슈를 어느 정당이 더 잘 해결할지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고적 평가는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오현주 외, 2014, 등). 따라서 얼마나 안정적 정당 지지자인지, 그리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이슈선점 인식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응답자들의 정당일체감 변화를 살피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수집한 패널 자료를 분석했다. [표 5.5]는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 이동을 보여준다. 2012년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2017년에 자유한국당은 지지한 비율은 28.2%에 불과했으며, 새누리당 지지자의 40.5%가 무당파로 이탈했다. 새누리당 이탈자 중 일부(14.1%)는 바른정당으로 이동했다.

결국 전체 응답자 702명 중 2012년에 지지했던 정당을 그대로 지지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과 2017년의 정치적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이 있었고,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지도 늘어났다. 중요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불안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2017년 선거에서 정당일체감만으로 선거를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¹⁾

2017년 주요 이슈였던 부패 척결,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 안보에 대한

11) 2012년 정당일체감과 2017년 투표를 비교해보면, 전체 응답자 669명 중 2012년 새누리당 지지자 199명 중 41%가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했으며, 2012년 민주통합당 지지자 291명 중 73%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2012년 진보정의당 지지자 46명 중 74%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표 5.5: 2012년과 2017년 지지정당

		2012년 지지 정당				
		무당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전체
2017년 지지정당	무당파	77	89	61	12	239
		56%	40%	21%	25%	34%
	더불어민주당	32	21	158	19	230
		23%	10%	53%	40%	33%
	자유한국당	2	62	3	1	68
		1%	28%	1%	2%	10%
	국민의당	11	9	29	1	50
		8%	4%	10%	2%	7%
	바른정당	8	31	3	0	42
		6%	14%	1%	0%	6%
	정의당	8	8	42	15	73
		6%	4%	14%	31%	10%
	전체	138	220	296	48	702
		100%	100%	100%	100%	100%

집단별 이슈중요도는 [표 7.2]와 같다. 이슈중요도는 0점(1 3순위 어디에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부터 3점(1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까지 4점 척도이며 [표 7.2]는 각 주요 이슈에 대한 집단별 평균 점수이다.

2012년에 민주-민주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했다. 특히 새누리-자유한국당 집단의 경우 경제성장 중요도 점수가 1.88점으로 다른 이슈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민주-민주 집단의 경우 정치개혁, 일자리 창출의 이슈중요도 점수가 높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 강조한 것이다.

2017년에도 역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이 중요한 가운데, 부패 척결의 이슈 중요도가 증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새누리-자유한국당 집단만 2012년에 비해 부패척결의 중요도가 하락한 것이다. 다른 집단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부패 척결 중요도 점수는 평균 0.29점만큼 감소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감소는 아니었으므로($t=1.5119$, $p=0.1371$) 두 번의 선거 동안 부패 척결 중요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다른 집단들의 경우 모두 2017년에 부패 척결 중

표 5.6: 정당일체감 집단별 이슈중요도

	무당파	새누리-한국당	민주-민주	부동층	전체
<i>2012년 이슈중요도</i>					
경제성장	1.25 (0.12)	1.88 (0.17)	0.91 (0.10)	1.24 (0.07)	1.22 (0.05)
부패척결	0.98 (0.11)	0.84 (0.17)	0.88 (0.09)	0.86 (0.06)	0.88 (0.04)
일자리창출	0.96 (0.11)	0.88 (0.15)	1.04 (0.10)	1.04 (0.06)	1.02 (0.05)
복지정책	0.74 (0.10)	0.49 (0.13)	0.8 (0.09)	0.81 (0.06)	0.77 (0.04)
정치개혁	0.95 (0.11)	0.65 (0.15)	1.19 (0.11)	0.92 (0.06)	0.96 (0.05)
<i>2017년 이슈중요도</i>					
경제성장	1.56 (0.12)	1.67 (0.15)	1.31 (0.11)	1.48 (0.07)	1.47 (0.05)
복지확대	0.6 (0.09)	0.33 (0.11)	0.65 (0.08)	0.71 (0.06)	0.65 (0.04)
일자리창출	1.13 (0.11)	0.84 (0.16)	1.21 (0.09)	1.02 (0.06)	1.07 (0.04)
통일안보	0.51 (0.09)	1.71 (0.18)	0.52 (0.08)	0.79 (0.06)	0.76 (0.04)
부패척결	1.51 (0.13)	0.55 (0.13)	1.76 (0.11)	1.26 (0.07)	1.36 (0.05)
응답자 수 (명)	109	49	141	335	634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이다.

요도 점수가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였다.¹²⁾ 부동층 중에서 새누리당 이탈자들의 부패 척결 이슈중요도가 평균 0.33점 증가했다는 점 ($t=-3.2641$, $p=0.0013$)은 이슈중요도가 정당일체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절과 제2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정당일체감은

12) 무당파-무당파 집단은 $t=-3.6144$, $p=0.0005$, 민주-민주 집단은 $t=-6.7113$, $p=0.0000$, 부동층 집단은 $t=-5.2686$, $p=0.0000$ 였다.

장/단기적으로 이슈중요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홍준표 후보의 부패 척결 이슈선점에 대해 각각 2.8점, 2.36점을 매겼는데 새누리당 이탈자들이 더 적은 점수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diff.=0.456, t=2.6557, 0.0086). 안정적 지지층은 정당과 후보를 따라갔지만, 부동층은 부패 척결이 중요해지면서 정당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견고한 지지층은 정당의 입장에 따라 이슈 태도가 바뀌지만, 정당일체감이 약한 지지자들은 이슈에 따라 정당을 이탈할 수도 있다.

부패 척결과 비슷한 정치개혁 이슈의 경우에도 새누리-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중요도가 감소했다. 다른 집단의 이슈중요도는 모두 상승했다. 부패 척결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 불리한 이슈였고, 홍준표 후보가 이슈선점 경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통일/안보 이슈의 경우 새누리-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이슈중요도 평균이 다른 집단의 두 배 이상이다.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경제성장과 안보, 일자리 창출의 선점을 시도했으며, 이 중 경제성장과 안보의 경우 다른 후보들과 분점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안보는 보수 정당이 소유해 온 이슈이다. 따라서 새누리-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제성장과 통일/안보 이슈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역시 정당일체감이 장기적으로 이슈중요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집단별로 선거에서 중요했던 이슈들에 대해 후보의 이슈선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표 5.7]과 같다. 안정적 지지층인 ‘새누리-자유한국당’과 ‘민주-민주’ 집단은 경제성장, 통일/안보 이슈에 대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이슈선점 점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민주-민주’ 지지자들의 경우 5개 이슈 모두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이슈선점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안정적 지지자들에게 정당일체감에 의한 투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새누리-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 복지확대와 일자리 창출, 부패척결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높은 이슈선점 점수를 주었다. 부패척결과 복지가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던 이슈이고, 일자리 창출 역시 문재인 후보가 2012년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이슈라는 점에서, 이슈선점이

명확한 경우 견고한 지지층도 상대 정당 후보의 이슈선점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7: 정당일체감 집단별 후보 이슈선점 평균 점수

	무당파	새누리-한국당	민주-민주	부동층	전체체
<i>경제성장</i>					
문재인	2.95 (0.10)	2.19 (0.19)	3.17 (0.07)	2.82 (0.06)	2.87 (0.04)
홍준표	2.45 (0.11)	3.31 (0.14)	2.22 (0.14)	2.62 (0.07)	2.56 (0.06)
안철수	3.13 (0.09)	2.67 (0.18)	2.66 (0.11)	3.13 (0.05)	2.99 (0.04)
유승민	3.03 (0.09)	2.58 (0.18)	2.93 (0.10)	3.11 (0.05)	3.02 (0.04)
심상정	2.59 (0.12)	1.89 (0.17)	2.51 (0.09)	2.49 (0.06)	2.46 (0.05)
<i>복지확대</i>					
문재인	3.17 (0.08)	3.03 (0.19)	3.48 (0.06)	3.19 (0.05)	3.24 (0.04)
홍준표	1.88 (0.11)	2.75 (0.14)	1.47 (0.12)	2 (0.07)	1.92 (0.05)
안철수	2.71 (0.09)	2.58 (0.15)	2.47 (0.10)	2.77 (0.05)	2.68 (0.04)
유승민	2.69 (0.09)	2.25 (0.15)	2.51 (0.09)	2.69 (0.05)	2.62 (0.04)
심상정	3.31 (0.10)	2.72 (0.22)	3.35 (0.09)	3.24 (0.06)	3.23 (0.04)
<i>일자리창출</i>					
문재인	3.52 (0.09)	3.06 (0.20)	3.81 (0.04)	3.57 (0.05)	3.57 (0.03)
홍준표	2.15 (0.12)	2.89 (0.12)	1.81 (0.12)	2.26 (0.07)	2.19 (0.05)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무당파	새누리-한국당	민주-민주	부동층	전체
안철수	3.11 (0.10)	2.67 (0.17)	2.58 (0.11)	3 (0.05)	2.9 (0.04)
유승민	2.8 (0.09)	2.5 (0.17)	2.73 (0.09)	2.8 (0.05)	2.76 (0.04)
심상정	3.09 (0.10)	2.58 (0.17)	3.16 (0.09)	3.1 (0.05)	3.07 (0.04)
통일/안보					
문재인	2.65 (0.11)	1.61 (0.19)	3.26 (0.06)	2.68 (0.06)	2.72 (0.05)
홍준표	2.92 (0.13)	3.5 (0.15)	2.54 (0.14)	3.05 (0.08)	2.95 (0.06)
안철수	2.52 (0.08)	2.36 (0.19)	2.3 (0.11)	2.64 (0.06)	2.53 (0.04)
유승민	2.83 (0.10)	2.58 (0.18)	2.87 (0.10)	3.01 (0.06)	2.92 (0.04)
심상정	2.24 (0.12)	1.47 (0.20)	2.39 (0.10)	2.23 (0.06)	2.21 (0.05)
부패척결					
문재인	3.44 (0.10)	2.94 (0.18)	3.84 (0.04)	3.41 (0.05)	3.47 (0.04)
홍준표	1.79 (0.13)	2.86 (0.13)	0.98 (0.11)	1.81 (0.08)	1.71 (0.06)
안철수	2.6 (0.11)	2.36 (0.14)	2.15 (0.11)	2.62 (0.06)	2.49 (0.05)
유승민	2.4 (0.11)	2.39 (0.16)	2.23 (0.10)	2.54 (0.06)	2.44 (0.04)
심상정	3.27 (0.10)	2.56 (0.20)	3.36 (0.09)	3.15 (0.06)	3.17 (0.05)
응답자 수(명)	75	36	99	242	45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이다.

무당파 집단의 경우 경제성장은 안철수와 유승민, 복지 확대는 문재인과 심상정,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통일/안보는 홍준표와 유승민, 부패 척결은 문재인
의 이슈선점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당일체감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따라서 후보들의 공약과 후보 개인적
요인들, 그리고 정당의 이슈소유를 모두 고려해 선점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은 사업가 배경을 가진 안철수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복지는 이슈를
소유하고 강조해 온 진보 정당 후보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부패 척결은 이슈를 선점한 문재인 후보에게, 통일/안보 이슈의 경우 소
유해 온 보수 정당 후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 통일/안보 이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슈중요도를 추
가로 분석했다.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안보가 아닌 대북정책에 대한 이슈중요
도를 질문했으므로 합의이슈에 대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지만 두 선거 비교를
위해 해당 수치를 활용했다. 2012년에 각 집단별 대북정책 중요도는 비슷했다.
무당파-무당파 집단(109명)의 대북정책 평균은 0.34(표준편차=0.08), 통일/안
보 평균은 0.51(표준편차=0.09)였다. 새누리-자유한국당 집단(49명)의 대북정
책 평균은 0.43(표준편차=0.12), 안보 중요도 평균은 1.71(표준편차=0.18)이었
다. 2017년에 안보 이슈중요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안보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서 2012년에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사드 배치 등 강력한
안보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지지자들의 안보 이슈 중요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대립이슈를 강조했을 때 합의
이슈를 강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의 이슈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민주 지지자(141명)들의 대북정책과 안보 중요도는
각각 0.15(표준편차=0.04), 0.52(표준편차=0.08)이었다.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선거에서 동일한 정당을 지지했
던 ‘안정적 정당일체감’ 유권자들은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 인식에 지지하는 정
당의 영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지지 정당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강조했다고 생각했으며, 지지하는 후보가 강조한 이슈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2017년에 안보 이슈 중요도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박근혜 후보가 2012년에 안보 이슈들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 전통적으로 안보 이슈를 선점해왔고,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택했었다는 점에서 안정적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정당보다는 후보의 공약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두 선거에서 모두 무당파라고 응답한 ‘견고한 무당파’ 유권자들은 이슈선점을 평가할 때 후보의 공약과 후보의 이미지, 정당의 기록(record) 모두를 고려했다. 경제성장의 경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마다 꾸준히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보다 국민의당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추었을 때, 기업가 출신인 안철수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복지 확대, 부패 척결과 같은 진보 정당에 유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점수가 높았다. 2017년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의 경우 문재인 후보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2012년부터 문재인 후보가 일관되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당의 영향을 덜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슈중요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당파 집단의 경우에도 다른 집단과 비슷한 경향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졌다.

제 4 절 소결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맞게 설계된 여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일체감과 합의이슈 태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제18대, 제19대 대선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정당일체감은 합의이슈에 장/단기적으로, 그리고 간접적/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당일체감은 이슈중요도에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는 이슈

중요도를 후보 이슈선점 평가에 투사한다. 하지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선거에서 현저했던 이슈면서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선점을 시도했거나 선점에 성공한 이슈에 대해 정당일체감이 영향을 미친다. 제5장의 분석을 통해 합의이슈에 대해 나타나는 정당일체감에 의한 설득과 투사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합의이슈의 설득과 투사가 대립이슈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일체감은 이슈중요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슈선점 인식은 이슈중요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정당일체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권자의 이슈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 지지자는 정당이 소유한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후보 선택에 반영한다.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이슈선점 인식이 이슈중요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컨대, 제19대 대선에서 복지이슈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슈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을수록 복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가 복지정책을 선점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문재인 후보가 복지를 선점했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복지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대립이슈에서는 후보의 입장과 유권자의 입장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반해(류재성, 2018; 이내영·허석재, 2010; 장기영·박지영, 2018; 조성대, 2009), 합의이슈에 대해서는 정당일체감이 이슈중요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정당일체감은 이슈중요도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제한적이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거에서 현저했던 이슈, 후보가 공약이나 캠페인에서 강조했던 이슈에 대해서 정당일체감이 영향을 미친다. 제18대 대선에서는 경제성장, 부패척결, 정치개혁의 이슈중요도에 정당일체감이 영향을 미쳤다. 제19대 대선에서는 복지와 교육정책 중요도에 대해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9대 대선에서 교육정책을 제외하면, 모두 선거에서 현저했던 이슈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안

보와 같이 선거에서 현저했지만, 이슈중요도에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슈들도 있었다. 이는 이슈를 선점한 후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주 공약이 아닌 경우였다. 즉, 이슈중요도는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지만, 정당/후보가 지지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당일체감이 이슈중요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했을 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정당을 지지한 ‘견고한 지지층’은 정당일체감이 이슈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7년 선거에서 부패 척결이 가장 부각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부패 척결 이슈중요도가 오히려 2012년보다 하락했다. 이는 부패 이슈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부패 척결 관련 공약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소유해 왔고 홍준표 후보도 강조했던 경제성장과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중요도 평균이 매우 높았다. 역시 정당일체감이 장기적으로 이슈중요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탈자들이 부패 척결 이슈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는 이슈중요도에 따라 정당일체감이 바뀔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표 7.2). 즉, 견고한 지지층은 정당의 입장에 따라 이슈 태도가 바뀌지만, 정당일체감이 약한 지지자들은 이슈에 따라 정당을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가 유권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공약을 제시할 유인이 생긴다.

넷째, 정당일체감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슈선점에 영향을 미친다(표 5.7). . ‘민주-민주’ 지지자들은 주요 이슈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이슈선점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견고한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가 선점한 것이 명확한 이슈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새누리-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상대 정당 후보였지만, 문재인 후보가 선점하고 강조했던 부패 척결,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에 대한 이슈 평가 점수 평균이 문재인 후보가 가장 높았다.

다섯째, 합의이슈는 설득보다는 투사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19대 대선을 사례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선거

에서 부각된 합의이슈들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사했다. 하지만 설득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이슈 투표 모형 분석 시 투사 효과를 염두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6장의 투표 모형 분석 또한 이를 고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당파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 캠페인 등을 고려해 후보의 이슈선점을 평가한다. 정당일체감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무당파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이슈선점을 평가할 때 후보의 공약, 이슈선점 시도, 소속 정당의 이슈 소유, 그리고 후보의 개인적 요인까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무당파 비율은 2-30%정도이다(제4장). 따라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가 대통령선거에 승리할 때 중요하고, 무당파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고려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공약 경쟁하게 된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이러한 이슈선점 평가가 투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6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제 6 장

합의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공간모형의 한계는 대립이슈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선거에서 대립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면 공간모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간모형을 통해 이슈투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의견과 유권자들의 의견이 모두 크게 갈리는 대립이슈가 부각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살펴보면, 선거에서는 대립이슈와 합의이슈 모두 부각되며 특히 후보들의 공약은 합의이슈로 제시되었다.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공약 경쟁에서 대립이슈는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부각되었다. 제4장의 선거 주요 이슈 분석에서도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이슈들이 경제성장, 부패 척결과 같은 합의이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모형만으로 선거를 분석할 경우 선거에서 부각된 많은 이슈가 누락될 수 있고, 선거에서의 이슈의 역할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제3장에서 설계한 *합의이슈 평가 모형*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과 제5장에서 분석한 후보의 공약과 경쟁 전략, 유권자의 반응, 그리고 정당일체감과 이슈 사이의 관계 속에서 투표행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합의이슈 모형의 함의를 끌어낼 것이다.

선거에서는 대립이슈 또한 공약으로 등장하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논쟁이 대표

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합의이슈 평가 모형으로 이슈경쟁을 분석하되, 각 선거에서 중요했던 대립이슈의 영향력을 합의이슈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 분석에서 공약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립이슈와 합의이슈 모두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이슈를 대립이슈와 함께 분석해도 합의이슈의 영향력이 강건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제 1 절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대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대체로 합의이슈로 공약 경쟁을 했다. 선거에서 현저했던 이슈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복지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는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유권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의 목표를 담아 공약을 제시했다(표 4.1, 4.2). 박근혜 후보의 경우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일자리 늘리고/지키고/질을 올리는 늘지오 정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만/나/바 일자리 혁명, 진짜 경제민주화, 튼튼한 안보, 강도 높은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과 같이 정책의 목표를 담아 공약을 제시했다.

1.1 합의이슈 모형

합의이슈에 대해 후보자는 이슈선점으로, 유권자는 이슈중요도로 의견을 드러낸다. 유권자는 중요한 이슈를 어떤 후보가 더 강조했는지 판단하고 이슈별 후보별로 평가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예컨대, 복지를 5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A후보가 복지를 특별히 강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A후보에게 복지에 대해 갖는 기대 효용이 높아진다. 이러한 기대 효용을 본 연구에서는 합의이슈 평가 점수라고 표현하고자 하며, 제6장에서는 이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에게 유권자가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제3장에서 설계한 양자구도의 합의이슈평가 모형을 통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의 이슈투표를 설명하고자 한다. 2012년 제18대 대선은 박근혜

해와 문재인 의 양자 대결로 이루어졌으며, 거대 정당 간의 대결로 합의이슈가 부각된 선거였다. 양자구도에서 이슈선점은 어떤 후보가 차별적으로 더 강조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두 후보가 모두 해당 이슈를 같은 정도로 강조했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후보 간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이슈에 대한 효용이 0일 것이다. 따라서 양자구도에서는 어떤 후보가 더 혹은 덜 특정 이슈를 강조했다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슈 평가점수이다. 유권자의 투표 선택 $Vote_i$ 는 기권과 기타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제외했을 때,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거나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이므로 이항변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투표 선택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슈 외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나이, 이념 성향, 소득, 교육 수준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할 것이다(김성연 2011; 김성연 외 2012).

제3장에서 구축한 모형의 이상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유권자가 생각하는 이슈선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의 2012년 대선 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의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만을 조사하고 이슈선점에 대한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8대 대선의 경우 응답자들의 이슈중요도와 제4장에서 분석한 후보들의 공약서에 기반을 두고 이슈투표행태를 설명할 것이다.

양자구도의 선거 결과를 합의이슈 평가모형을 통해 설명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 동일 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송진미·박원호 \(2016\)](#)의 연구가 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는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으며, [송진미·박원호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지역복지, 지역 일자리, 지역교육정책, 지역 경찰/치안 이슈 평가가 정당일체감과 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통령 선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결과이지만, 양자구도에서도 합의이슈평가모형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제18대 대선에서 이슈중요도 점수가 높았던 경제성장, 복지, 일자리 창출, 부패 척결, 정치개혁 이슈의 이슈 투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과 제5장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후보,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은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다. 경제성장은 새누리당 소유해 온 이슈이며, 일자리 창출은 두 후보가 분점했다. 복지 정책의 경우 민주당이 소유해 온 이슈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유리했으나,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선점하고 복지 정책을 공약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놓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선점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표4.4). 제4장에서 실제로 유권자들이 새누리당보다 박근혜 후보를 더 진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슈선점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보다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새누리당 지지자보다 부패 척결,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5.1). 표 5.1의 결과는 이슈소유/선점이 분명한 경우에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당을 따라 이슈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3장에서 설계한 양당제 합의이슈 평가 모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이슈선점에 차별성이 있고, 본인이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합의이슈에 근거해 투표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 투표하고,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두 후보가 분점했다. 복지 이슈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소유해왔으나 박근혜 후보의 선점 시도가 있었고, 문재인 후보 역시 선점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슈선점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표 6.1]은 합의이슈 평가 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합의이슈 중요도에 따른 투표선택 결과를 보여준다. 성별, 거주지역, 가구소득, 최종학력은 제1차 조사

1) 서울시장 선거 외에도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에도 합의이슈 평가 모형을 통해 양자구도 선거 결과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슈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를 활용했으며 이슈중요도와 이념 성향은 제2차 조사 자료, 종속변수인 투표 선택은 제3차 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그리고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이 유권자의 이슈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변수에 정당일체감을 포함했다. 정당일체감은 무당파, 새누리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기타 정당 지지자로 나누었다. 정당일체감을 통제하는 것 외에도 정당일체감에 따른 이슈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정당 지지자 집단별로 회귀분석했다. [표 6.1]은 분석 결과 중 합의이슈의 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전체 변수의 결과를 담은 표는 부록에 수록했다.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에 따라 이슈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1]의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이 새누리당이 소유한 이슈면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을 통해 강조하고 선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패 척결과 복지정책, 정치개혁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점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모형1]의 결과는 합의이슈가 주목받았을 때 후보의 이슈선점에 차별성이 있다면 유권자들이 본인의 이슈 선호에 기반해 투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립이슈처럼 의견이 나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후보의 견해 차이를 인지하고 투표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모형1]에서 복지정책 역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복지정책이 중요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복지정책은 진보 진영에서 소유해 온 이슈로 박근혜 후보의 선점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형2], [모형3], 그리고 [모형4]는 정당일체감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집단별 이슈중요도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슈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은 [모형1]을 포함해 모든 모형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문재인 후보가 1순위로 강조하고, 박근혜 후보 또한 공약집에서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존의 이

표 6.1: 합의이슈 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18대 대통령선거

	합의이슈 모형1	합의이슈 모형2	합의이슈 모형3	합의이슈 모형4
	전체	무당파	새누리당	민주당
<i>이슈중요도</i>				
경제성장	0.31*** (0.07)	0.21* (0.10)	0.32 (0.18)	0.45** (0.15)
부패척결	-0.19* (0.08)	-0.22 (0.11)	-0.19 (0.19)	-0.09 (0.17)
일자리창출	0 (0.07)	-0.02 (0.11)	-0.24 (0.17)	0.14 (0.15)
복지정책	-0.16* (0.08)	-0.25 (0.13)	-0.39* (0.18)	0.09 (0.16)
정치개혁	-0.34*** (0.08)	-0.32** (0.12)	-0.29 (0.17)	-0.37* (0.18)
인구학적 변수		포함		
이념성향		포함		
정당일체감	포함	-	-	-
상수항	-0.57 (0.62)	-2.30* (0.95)	5.32** (1.98)	-2.90* (1.34)
N	1719	483	470	592
Pseudo R2	0.4771	0.1915	0.1341	0.1424
Log likelihood	-605.899	-255.211	-120.496	-162.763
$\chi^2(df)$	484.45(16)	80.99(13)	30.65(12)	44.08(13)
Prob > chi2	0	0	0	0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슈소유가 불분명한 이슈였기 때문에 두 후보의 단기적 이슈선점이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후보가 분점하는 상황이 되면서 후보 간 차별성이 사라졌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이슈의 경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이 없었다.

무당파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슷한 투표 경향을 보였다. [모형2]를 보면, 무당파 유권자들은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모형4]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집단에서 모두 부패 척결 이슈중요도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복지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모형3]의 분석 결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투표결정에는 복지정책 외의 다른 이슈중요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처럼 이슈선점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제3장 연구설계에서 지적했듯이 후보들의 이슈선점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의 이슈선점 인식에는 정당일체감이 큰 영향을 미치는 등(제5장) 개인 수준의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3장에서 합의이슈 평가 모형을 설계할 때 개인이 인식하는 이슈선점을 모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제18대 대통령선거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는 이슈선점 인식에 관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표 6.1]의 분석에 유권자의 주관적 이슈선점 인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패척결, 복지정책과 같은 이슈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마다 이슈선점 인지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개인마다 어떤 후보가 강조했고 선점했는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이슈선점 인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제19대 대선을 개인의 주관적 이슈중요도와 주관적 이슈선점 인식을 모두 고려해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자료와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정치개혁 이슈가 [모형1], [모형2], [모형4]에서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후보의 이슈선점이 그만큼 명확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박근혜 후보, 정치개혁은 문재인 후보가 선점에 성공했고,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각각 선점한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만 분석한 [모형4]에서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것은 경제성장 이슈가 2012년 대선에서 현저했으며 박근혜 후보가 선점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2 합의이슈 모형과 공간모형 분석

선거공보나 공약서 등에서는 대립이슈 형태의 공약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TV토론이나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는 대립이슈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졌다. TV토론에서는 후보들 간 쟁점 토론을 통해, 언론 인터뷰는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대립이슈의 형태로 선거 이슈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이나 한미동맹 강화와 같은 이슈가 이에 해당한다. 2012년 선거에서도 대북정책과 같은 대립이슈들이 부각되었다.

대북 관련 정책이 제18대 대선에서 주목받은 주요 대립이슈이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북정책과 안보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립이슈로써 연구되어 왔다. 대북정책은 비교적 오랫동안 우리나라 이념 갈등의 유의미한 요인이었는데(김무경·이갑윤, 2005; 정진민, 2003), 보수 세력은 국가보안법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강원택, 2017). 중앙일보와의 문답을 살펴보면²⁾,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북지원이나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조금 달랐는데, 남북대화에 있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박근혜 후보와 달리 문재인 후보는 취임 첫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고 공약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후보와 달리 문재인 후보는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해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박근혜 후보는 건설을 추진한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사업 중단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 중앙일보, 2012년 10월 31일, “갈등 빛는 제주 해군기지 해법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紙上 청문회.”

표 6.2: 합의이슈와 대립이슈 통합 모형 회귀분석 결과: 제18대 대통령선거

	합의이슈 모형5 전체	합의이슈 모형6 무당파	합의이슈 모형7 새누리당	합의이슈 모형8 민주당
<i>이슈중요도</i>				
경제성장	0.25** (0.08)	0.14 (0.12)	0.36 (0.19)	0.51** (0.18)
부패척결	-0.16 (0.08)	-0.30* (0.13)	-0.13 (0.21)	0.07 (0.20)
일자리창출	0.03 (0.08)	-0.02 (0.13)	-0.13 (0.19)	0.37* (0.18)
복지정책	-0.08 (0.09)	-0.28 (0.14)	-0.2 (0.20)	0.32 (0.19)
정치개혁	-0.31*** (0.08)	-0.34* (0.14)	-0.23 (0.19)	-0.16 (0.20)
<i>대립이슈</i>				
한미FTA 재협상	0.28* (0.12)	0.13 (0.19)	0.64* (0.30)	-0.33 (0.29)
비정규직 문제	0.13 (0.11)	-0.37* (0.19)	0.33 (0.26)	0.85*** (0.24)
집회 및 시위 자유	0.36** (0.12)	0.61** (0.20)	0.11 (0.30)	0.26 (0.28)
일본과 경제, 군사 협력	-0.14 (0.10)	-0.35* (0.16)	-0.04 (0.25)	0.34 (0.23)
대북지원	0.43*** (0.11)	0.45* (0.19)	0.17 (0.27)	0.24 (0.25)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0.51*** (0.11)	0.65*** (0.17)	0.5 (0.26)	0.65** (0.25)
중국과 경제, 군사 협력	-0.13 (0.14)	-0.55* (0.24)	0.11 (0.32)	0.27 (0.29)
기업규제	0.25* (0.12)	0.59** (0.19)	0.24 (0.28)	-0.16 (0.25)
대립이슈 인구학적 변수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10개 추가 이슈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항	-3.84*** (1.12)	-4.14* (1.73)	2.32 (3.16)	-9.46*** (2.87)
N	1719	483	470	592
Pseudo R2	0.5309	0.3203	0.2181	0.27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2012년에 유권자들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던 이슈 중 대립이슈였던 또 다른 정책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제18대 대선 온라인 패널 조사 제1차]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개별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251명의 응답자 중 반대한다는 의견이 73.35%, 찬성하는 의견이 26.65%였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범주에서는 합의이슈이지만,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합의이슈와 대립이슈가 모두 주목받기 때문에, 두 이슈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 6.1]에서 분석한 합의이슈와 공간모형에서 다루는 대립이슈 모두를 포함해 모형을 분석했다. 대립이슈는 1점부터 4점까지 4점 척도로 주어진 주장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조사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코딩했다. 분석 결과는 [표 6.2]에 정리했다. 대립이슈는 총 18개 문항으로 조사한 내용을 모형에 포함했으며, [표 6.2]에는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된 이슈들만 정리했다. 모든 변수의 결과를 포함한 표는 부록에 수록했다.

합의이슈와 대립이슈를 함께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과 정치개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정치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다(모형5).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정치개혁 중요도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척결은 합의이슈 모형에서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통합 모형에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이 중요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다(모형6).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투표에 합의이슈의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며, 대립이슈 또한 한미FTA 재협상 외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슈보다는 다른 요인에 근거해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경제성장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중요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모형8).

[표 6.2]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제성장과 정치개혁의 안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당파 유권자들이 정당 지지자보다는 투표 선택에서 이슈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주관적 이슈선점 인지를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모형은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대립이슈와 합의이슈를 함께 분석했을 때 합의이슈의 영향력이 확인된다는 것은 공간모형만으로 이슈투표를 분석할 경우 선거에서 이슈의 영향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5]와 [모형6]에서 대립이슈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다. 대립이슈에 대한 의견은 보수적인 입장일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코딩했다.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5]에 따르면, 한미FTA 재협상에 반대할수록,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반대할수록,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반대할수록,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에 찬성할수록, 기업규제 완화에 찬성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컸다. 무당파 유권자들을 분석한 [모형6]의 결과를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대북지원, 원자력 발전소 건립, 기업규제 완화의 입장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기업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수록, 일본, 중국과의 협력에 찬성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기업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찬성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에 정리한 8개 대립이슈 외에 10개를 추가로 포함해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어서 [표 6.2]에서 생략했다. 전체 표와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했다.

제 2 절 제19대 대통령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부패 척결,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 안보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두드러졌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합의이슈 경쟁을 펼쳤고 홍준표 후보가 안보 이슈에 대한 공약을 대립이

슈로 제시했다. 제4장과 제5장의 분석 결과, 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으며,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으나 모든 후보가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분점의 가능성이 있는 이슈였다. 경제성장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분점하고 안 보는 홍준표,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선점을 시도하며 분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선점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1절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합의이슈 모형으로 분석한 뒤, 합의이슈와 대립이슈 통합 모형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안보 이슈 영역에 대해 대립이슈로 경쟁한 것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공간모형을 합의이슈와 함께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홍준표 후보가 극단적 태도를 고수했던 안보 정책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가 안보를 강조했고, 안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합의이슈모형으로 투표하기 때문이다. 합의이슈 모형 분석과 함께 공간모형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2.1 합의이슈 평가 모형

제1절에서는 제3장에서 설계한 합의이슈 평가 모형을 통해 제19대 대선을 분석할 것이다. 다자구도에서는 유권자가 1명 이상의 후보가 이슈를 강조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총 다섯 명의 후보 중 두 명의 후보가 해당 이슈를 강조하고 나머지 세 명의 후보가 강조하지 않았다면, 앞의 두 후보에 대해 느끼는 효용 차이는 없지만 두 후보와 다른 후보들과의 효용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자구도에서는 모든 후보가 강조했거나, 모든 후보가 강조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각 후보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정도가 이슈선점의 척도가 된다.

합의이슈평가 점수는 유권자가 생각하는 이슈중요도를 0점부터 10점 사이의 값, 그리고 후보 이슈선점을 평가를 0점부터 4점 사이의 값으로 측정하고 둘을 곱한 것이다. 따라서 이슈별, 후보별로 이슈 평가점수는 0점부터 40점까지가 된다. 만약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무리 후보가 강조했다고 해도 그 값은 0일

표 6.3: 이슈평가점수 예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번 응답자	28	14	21	21	14
2번 응답자	30				
3번 응답자	36	27	36	36	36
4번 응답자	40	20	20	20	20
5번 응답자	8	8	8	8	8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이슈가 중요하다고 해도 후보가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면 그 값 역시 0일 것이다. 즉, 합의이슈평가 점수는 이슈가 중요한 동시에 후보가 해당 이슈를 강조해야만 0을 초과하는 값을 갖는다. 이는 유권자의 이슈 태도와 그를 반영할 후보가 있어야만 이슈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³⁾

이슈 평가점수는 후보마다 주어지므로, 유권자는 5명의 후보에 대해 5개의 기대효용 값을 계산하며, 투표에 있어 5개의 선택지를 갖는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설문조사 자료에서 2017년 기준, 여성, 30세, 수도권 거주, 중도 응답자는 5명이 있었다. 이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이슈 평가 점수는 [표 6.3]과 같다. 먼저 1번 응답자는 경제성장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따라서 경제성장 이슈에 근거하면 1번 응답자는 문재인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번 응답자 역시 문재인 후보를 뽑을 것이다. 2번 응답자의 경우 문재인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은 경제성장을 강조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3번 응답자의 경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 점수가 같다. 따라서 4명의 후보 중 1명을 고르기 위해 3번 응답자는 다른 이슈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5번

3) 응답자 중 2명이 이슈선택을 묻는 모든 후보와 모든 이슈에 대해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응답의 신뢰도가 의심되어 2명은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그 외 4명의 응답자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 모든 후보가 똑같이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기대효용이 0점이 되고, 4명의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해당이슈의 기대효용이 0점이 된다.

응답자의 경우 모든 후보의 점수가 같기 때문에 5번 응답자는 경제성장 이슈는 투표에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⁴⁾

조건부 로지스틱 분석은 이처럼 짝이 지어진 선택지들에 대해 분석한다. 후보별로 같은 기준(경제성장 이슈)에 대해 점수가 높은 쪽이 선택된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러한 선택에 해당 조건(이슈 평가점수)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제2절에서는 제3장에서 설계한 합의이슈 평가 모형을 조건부 로지스틱 분석(모형 1), 대안 특정 조건부 로지스틱 분석(alternative-specific conditional logit)할 것이다(모형 2, 모형 3, 모형 4). 분석 결과는 [표 6.4]와 같다.

[모형1]과 [모형2]를 살펴보면, 인구학적 변수와 이념 성향, 정당일체감 통제와 관계없이 문화산업을 제외한 모든 이슈 평가점수가 후보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슈를 후보가 강조했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즉, 선택지 중 이슈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산업의 경우에는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9대 대선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표4.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화산업 활성화의 중요도 평균 점수는 유일하게 6점대에 머물렀다. 관심이 없는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슈선점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슈 평가 모형3]은 정당 지지자 별로 합의이슈 평가 점수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통일 안보, 경찰치안, 외교/국제교류, 부패 척결 이슈 평가 점수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슈를 차별적으로 선점한 후보에게 투표했다. 교육정책, 문화산업 활성화, 보건/의료 이슈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3-1]의 분석 결과를 통해 무당

4) 제5장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후보의 모든 이슈선점에 대해 동일하게 응답한 68명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표 6.4: 합의이슈 평가 모형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슈평가 모형1	이슈평가 모형2	이슈평가 모형3-1	이슈평가 모형3-2	이슈평가 모형3-3	이슈평가 모형3-4	이슈평가 모형4
분석대상	전체	전체	무당파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전체
<i>합의이슈 평가 점수</i>							
경제성장	0.05*** (0.01)	0.04*** (0.01)	0.04** (0.01)	0.03 (0.02)	0.08* (0.04)	0.05* (0.02)	0.04*** (0.01)
복지확대	0.03*** (0.01)	0.02* (0.01)	0.04* (0.02)	0.02 (0.02)	-0.05 (0.04)	0.01 (0.02)	0.02* (0.01)
일자리창출	0.04*** (0.01)	0.04*** (0.01)	0.05*** (0.01)	0.07** (0.02)	0.03 (0.04)	0.04 (0.02)	0.04*** (0.01)
교육정책	0.03*** (0.01)	0.02** (0.01)	0.02 (0.01)	0.03 (0.02)	0.05 (0.04)	0.03 (0.02)	0.03** (0.01)
통일안보	0.05*** (0.01)	0.05*** (0.01)	0.05*** (0.01)	0.02 (0.02)	0.06 (0.04)	0.02 (0.02)	0.04*** (0.01)
경찰치안	0.03*** (0.01)	0.03** (0.01)	0.04* (0.02)	0.02 (0.02)	-0.01 (0.04)	0.05* (0.02)	0.03** (0.01)
문화산업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1 (0.05)	0.05 (0.03)	0.02 (0.01)
보건의료	0.03*** (0.01)	0.02* (0.01)	0.01 (0.02)	0.02 (0.02)	0.01 (0.05)	0.01 (0.03)	0.02 (0.01)
외교국제	0.05*** (0.01)	0.04*** (0.01)	0.05** (0.02)	0.06** (0.02)	0.09 (0.05)	0.01 (0.02)	0.04*** (0.01)
부패척결	0.06*** (0.01)	0.05*** (0.01)	0.05*** (0.01)	0.05** (0.02)	0.02 (0.03)	0.07*** (0.02)	0.05*** (0.01)
인구학적변수	-	포함	포함	포함	-	포함	포함
이념성향	-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정당일체감	-	포함	-	-	-	-	포함
대립이슈	-	-	-	-	-	-	포함
obs	11968	9845	2545	3875	600	1355	9845
cases		1969	509	775	120	271	1969
p-value	0	0	0	0	0.01	0	0
log likelihood	-2173	-1430	-523	-291	-73	-229	-1356
$\chi^2(df)$	3472(14)	889(66)	220(46)	130(46)	28.6(14)	95.2(46)	880(146)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파 유권자들이 제19대 선거에서 부각된 이슈들에 대한 기대효용을 투표 결정에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제19대 선거에서 중요했던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안보, 부패 척결 이슈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당파 유권자들은 그 이슈를 강조하고 선점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모형 3-2), 일자리 창출, 외교/국제교류,

부패 척결 이슈 평가 점수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제5장의 설득/투사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선거에서 중요했던 이슈들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후보에게 투사했다. 즉,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문재인 후보가 선점했다고 생각했으며, 이슈 평가점수는 두 변수의 곱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의 이슈 평가 점수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만 따로 분석했으며, 민주당 지지자 집단 내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일자리 창출과 부패 척결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 창출과 부패 척결은 문재인 후보가 선점한 이슈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 경제성장 이슈 평가 점수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⁵⁾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경제성장 이슈 외에 다른 이슈들의 평가 점수는 투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소유해 온 이슈로 제19대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선점 시도를 했던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모형 3-3), 경제성장, 경찰/치안, 부패 척결 이슈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도 제5장의 설득/투사 분석에서 선거에서 부각된 거의 모든 이슈에 본인의 입장을 후보에게 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지지자들만 분석했을 때, 경제성장 이슈 평가 점수가 높은 후보, 부패 척결 이슈 평가 점수가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이슈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사업가 경력을 바탕으로 선점을 시도한 이슈이다.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경제선점을 분점했다. 부패 척결은 2017년 대선에서 가장 현저한 이슈였다. 따라서 부패 척결 이슈를 선점하는데 불리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외에는 모든 후보가 이슈 선점을 시도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던 만큼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부패 척결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투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샘플 수가 적어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관찰 수도 적었다. 따라서 추정치의 어려움이 있어 인구학적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이념 성향만 통제된 뒤 모형을 추정했다.

2.2 합의이슈 평가 모형과 공간모형 분석

제19대 대선에서는 합의이슈 뿐만 아니라 대립이슈도 부각되었다. 동성애자의 권리, 성 평등 정책, 사드 배치, 대북지원 등 다양한 대립이슈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대립이슈와 합의이슈가 함께 선거에서 두드러질 때 합의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합의이슈 모형과 공간 모형을 통합한 모형을 분석했다(모형 4). 결과는 [표 6.4]의 [모형 4]와 같다. [모형 4]에는 인구학적 변수, 이념 성향, 그리고 대립이슈를 포함해 분석했다.⁶⁾ 본 분석의 목적은 합의이슈가 대립이슈와 함께 부각되었을 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표에는 합의이슈 평가 점수만 정리했으며 전체 표는 부록에 수록했다.

분석 결과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통일/안보, 경찰/치안, 외교/국제교류, 부패 척결 이슈가 투표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이 해당 이슈의 평가 점수가 높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다. 대립이슈를 함께 분석했을 때도 합의이슈의 영향력을 확인 할 수 있다. 합의이슈와 대립이슈가 함께 경쟁했을 때, 합의이슈가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공간모형에서 합의이슈를 고려하게 되면 후보들의 전략적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Feld and Grofman, 1991; Macdonald and Rabinowitz, 1998; Ansolabehere and Snyder, 2000; Berger *et al.*, 2000).

하지만 한편으로 [표 6.4]의 결과는 합의이슈가 함께 고려되었을 때 특정 대립이슈의 영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합의이슈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사드 배치,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논쟁은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교육 관련 정책, 안철수 후보의 경우 경제와 기업 관련 정책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했는지 보여준다.

6) 전적으로 반대(1)부터 전적으로 찬성(4)까지 4점 척도로 조사했다.

제 3 절 소 결

제6장의 목표는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제4장에서 선거에서 후보들은 합의이슈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슈선점의 방식으로 경쟁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 평가로 합의이슈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정당일체감이 합의이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대립이슈와 합의이슈의 차이를 밝히고 합의이슈에 대한 제한적 영향력을 확인했다. 제6장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유권자의 이슈 태도가 최종적으로 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합의이슈 모형의 합의를 찾고자 했다.

첫째, 합의이슈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공간모형으로 선거를 분석하면 이슈의 영향력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입증했다. 제18대 대선에서는 경제성장, 부패 척결, 복지정책, 정치개혁과 같이 선거에서 현저했던 이슈의 중요도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표 6.1). 제19대 대선에서도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부패 척결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 점수가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4).

둘째, 정당일체감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을 때, 무당파 유권자들이 합의이슈에 근거해 투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당파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에 의한 설득, 투사 효과로부터 자유롭고, 따라서 후보의 공약과 정당의 이슈소유를 바탕으로 이슈선점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제5장) 무당파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합의이슈 투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8대 대선 분석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이슈선점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슈선점이 명확했던 경제성장과 정치개혁 이슈가 무당파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했다. 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안보, 부패 척결 등 선거에서 중요했던 이슈들이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무당파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슈선점이 차별적이고 이를 인식할 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당파 유권

자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합의이슈 선점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정당 지지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선점한 이슈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일자리 창출, 외교/국제교류, 부패 척결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경제성장, 경찰/치안, 부패 척결 이슈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정당 지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의 입장을 후보 이슈선점 평가에 투사했지만, 집단 내에서 투표를 가르는 기준은 지지하는 후보가 얼마나 차별적으로 명확하게 이슈를 선점했는지와 관련이 있었다.

넷째, 대립이슈를 포함한 분석에서도 합의이슈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의이슈 모형과 공간모형을 통합한 모형에서 합의이슈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선거에서 부각된 합의이슈에 대한 기대효용은 대립이슈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합의이슈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합의이슈를 이슈투표 분석에서 누락할 경우 이슈 경쟁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6장의 논의를 통해 공간모형이 실제로 합의이슈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으며, 합의이슈 모형이 새로운 이슈투표 모형으로써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합의이슈가 유권자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후보의 이슈선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후보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제 7 장

결론

선거마다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고 상황에 따라 안전이나 부패 같은 특정 이슈가 주목받는 등, 이슈는 선거를 기술할 때 생략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슈는 그 자체로 선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요구와 후보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준다. 그런데도 투표 행태 연구는 이슈에 근거한 투표보다는 유권자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유권자는 이슈보다는 인종이나 종교, 정당일체감,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 다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정체성에 따라 투표하기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 경쟁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비효율적인 행위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왜 후보들이 공약 경쟁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선거에서 이슈의 역할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슈의 영향력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는 기존 이슈투표 연구들이 공간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간모형은 후보와 유권자의 정책 입장이 진보-보수로 이루어진 차원의 위치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유권자가 자신의 위치와 후보의 위치를 비교해 본인과 가장 가깝거나 방향이 같은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간모형의 분석은 입장이 찬성과 반대 혹은 진보와 보수로 분할되는 대립이슈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후보의 공약 중에는 경제성장, 부패 척결과 같이 입장을 나누기

어려우면서 정책의 수단보다는 목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투표 모형에서 합의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장에서 공간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합리적 투표 모형을 위한 전제를 세우고, 제3장에서 합의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을 설계했다. 그리고 제4장 공약 분석을 통해 실제로 유권자들의 이슈 수요가 합의이슈에 맞춰져 있으며, 후보들 또한 선거에서 부각되는 합의이슈에 대해 이슈선점의 방식으로 경쟁한다는 것을 보였다.

제18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두 선거에서 모두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부패 척결과 같은 합의이슈가 현저한 이슈로 떠올랐으며, 후보들도 이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했다. 그리고 제18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제19대 대선에서는 부패 척결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는 선거마다 주목받는 이슈가 다르며 이 역시 합의이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유권자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제18대 대선 당시 유권자들은 경제성장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에 대한 요구가 강했으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당시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을 일찍부터 시도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9대 대선의 경우 유권자들은 부패 척결을 요구했으며 부패 척결을 선점하는 데 성공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합의이슈를 분석함으로써 각 선거가 담고 있는 내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5장과 제6장을 통해 이렇게 부각된 이슈가 실제로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합의이슈가 선거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제3장에서 합의이슈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이슈 선호와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당일체감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기 위해 정당일체감 경로 모형과 정당일체감 고정 모형을 설계하고, 정당일체감의 이슈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무당파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과 배경, 후보의 소속

정당이 이슈에 대해 가진 이미지 등을 고려해 후보의 이슈선점 여부를 추론하고, 본인의 이슈 선호와 후보의 이슈선점 정도를 평가해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자들의 경우 본인의 이슈 선호를 후보에게 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투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해당 이슈가 투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정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도 지지 정당 후보가 선점한 것이 명확한 이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대선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선점한 일자리 창출과 부패 척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보수 정당이 소유해 온 경제성장 이슈 평가 점수에 따라 후보를 선택했다.

그리고 합의이슈의 경우, 정당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지지 정당 후보의 이슈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은 이슈중요도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지지하는 후보가 이슈 선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다른 후보와 차별적으로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경우 정당일체감의 영향이 없었다. 이슈소유/선점이 분명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당일체감에 의한 설득이 일어나지만, 선점이 불분명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당일체감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슈선점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이슈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설계한 모형을 통해, 합의이슈의 관점에서 후보의 공약과 전략을 분석하고, 후보의 이슈선점 시도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정당일체감이 합의이슈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슈중요도가 이슈선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슈선점 인식은 유권자의 이슈중요도에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일체감은 간접적으로 합의이슈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슈중요도와 이슈선점 평가가 결합해 유권자의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는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투표 분석 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대립이슈만을 분석할 경우 선거에서의 이슈투표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얼마나 후보의 이슈선점이 명확한지, 즉 합의이슈에 대해 후보들이 얼마나 상대 후보와 본인을 차별화했는지에 따라 이슈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는 이슈선점 경쟁이 필요해진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두드러지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정당일체감의 영향이나 투표에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은 기존에 소유해 왔던 이슈들이 선거에서 가능한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합의이슈와 대립이슈가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받는 방식, 그리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선거에서 합의이슈가 기능하는 방식은 대립이슈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합의이슈에 대한 정당의 전략, 그리고 유권자가 정당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유권자가 합의이슈를 투표에 반영하는 과정을 연구 모형으로 설계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슈투표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참고 문헌

- 강우진. 2012.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18 대 총선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67-94쪽.
- 강우진. 2013. “제 18 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5호, 213-233쪽.
- 강우진. 2013. “제18 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5호, 213-233쪽.
- 강원택. 2003. 『한국의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푸른길.
- 강원택. 2008. “2007 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제25권, 31-59쪽.
-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나남.
- 강원택. 2012. “3 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1호, 171-193쪽.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3호, 5-28쪽.
- 강원택. 2017. “2017 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몰락 혹은 분화?.” 『한국 정당학회보』 16(2): 5-33.
- 강원택·윤성이·조희정·이상신. 2012. 『SNS를 활용한 정치홍보연구: 19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 고길곤. 2018. 『범주형 자료 분석』, 고양: 문우사.

- 김무경·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2): 6-32.
- 김민정·김원홍·이현출·김혜영. 2003.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 행태: 16 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제3호, 89-112쪽.
- 김병권. 2012. “18 대 대통령 선거와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황해문화』, 76권, 114-132쪽.
- 김성연. 2015. “정책 선호, 정책 인식, 그리고 정책 투표의 영향: 18 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46권, 70-99쪽.
- 김성연. 2017. “20 대 총선에서 정책 투표의 영향: 안보와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3호, 47-78쪽.
- 김성연·김준석·길정아. 2013. “한국 유권자들은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가?: 정책 선호, 정책 인식, 그리고 정책투표”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1호, 167-183쪽.
- 김성연·정효명. 2014. “정책선호가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제 19 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8권 제1호, 119-140쪽. “지속과 변화의 관점으로 본 18 대 대선의 특징과 의미”, 『황해문화』, 제78권, 268-281쪽.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윤철. 2013.
- 류재성. 2012.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한국정치연구』, 제21권 제2호, 53-86쪽.
- 류재성. 2018. “프레이밍효과 (framing effects) 에 대한 설문실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8권 제3호, 35-64쪽.
-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제4호, 327-349쪽.
- 문우진. 2012.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누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바꾸는가?”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제1호, 175-201쪽.
- 박상운. 2013. “한국의 정당프레임에 대한 연구: 18 대 대선 정당 후보자들의

- 연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2호, 187-205쪽.
- 박원호. 2012. “정당일체감의 재구성”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나남, 51-74쪽.
- 박원호·신화용. 2014.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5): 119-142.
- 박원호·안도경·한규섭. 2013. “제18 대 대통령 선거의 경제민주화 쟁점에 대한 실험설문: 프레이밍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2권 제1호, 1-28쪽.
- 송근원·정봉성. 2007. “16 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입장과 투표행태” 『21 세기정치학회보』, 제17권 제1호, 45-70쪽.
- 송진미. 2019. “보수정당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 2012-2017 년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8권 제1호, 109-146쪽.
- 송진미·박원호. 2014.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제 18 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1호, 5-31쪽.
- 송진미·박원호. 2016. “이슈경쟁과 합의이슈모델: 2014 년 서울시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1호, 29-62쪽.
- 오현주·송진미·길정아·강원택. 2014. “정당 호감도와 회고적 평가: 2014 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3): 69-97.
- 우효평. 2017. 『통일이슈와 정치 갈등의 변화: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홍식. 2013. “친복지진영의 18 대 대선평가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172권, 40-48쪽.
-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후마니타스.
- 이갑윤·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137-166쪽.
- 이내영·정한울. 2007.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1권 제1호, 31-55쪽.

- 이내영·허석재. 2010. “합리적인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17 대 대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선택.”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제2호, 45-67쪽.
- 이재철. 2008. “17 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인식과 투표 결정”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111-136쪽.
- 이지호. 2013. “제18 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이슈가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긍정적, 부정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KWP)』, 제29권 제2호, 37-72쪽.
- 장기영·박지영. 2018. “한국 정당지지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와의이념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한국 정당지지자의투사효과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1호, 77-102쪽.
- 장승진. 2013. “경제민주화와 제 18 대 대선: 쟁점 투표 (Issue Voting) 와 정치 지식 (Political Knowledge)”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87-112쪽.
- 장승진·송진미. 2017. “허위합의 (False Consensus) 효과와 쟁점투표”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3호, 79-107쪽.
- 전용주·조진만·김기승·신준섭·김혜숙·조희정·박진수.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아젠다 개발』,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
- 정인태. 2010. “선거 마케팅 PR 캠페인 전략 개발을 위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영향 요인 연구: 6·2 부산 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9권, 285-336쪽.
- 정진민. 2003. “한국 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계의 재편성.” 『한국정당학회보』, 2(1): 95-118.
- 정하윤. 2014. “세대와 정책투표 연구의 현황 및 쟁점” 『선거연구』, 제4권 제1호, 129-149쪽.
- 정한울. 2013. “안보 이슈는 이념적 쟁점인가?” 『EAI 오피니언 리뷰』, 2013-03호, 1-19쪽.
- 정희옥. 2018. “19 대 대선에서의 공약과 유권자 행태” 『21 세기정치학회보』,

- 제8권 제1호, 45-66쪽.
- 조성대. 2009. “설득 혹은 강화?: 제 17 대 대통령선거 TV 토론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권 제1호, 93-113쪽.
- 조성대. 2012.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후보자 자질, 자질 침범 가설과 미국 대통령선거, 1984~ 2008” 『21 세기정치학회보』, 제22권 제1호, 161-183쪽.
- 조진만. 2014.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 결정요인 분석” 『21 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제3호, 113-134쪽.
- 한정훈. 2015. “한국 지방선거와 정책투표의 가능성: 후보자 정책에 대한 지역별 유권자 인식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3권 제2호, 5-41쪽.
- 허석재. 2014.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1호, 65-93쪽.
- 현재호. 2012. “한국의 선거와 정당 간 경쟁: 선거경쟁의 조건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0권 제2호, 437-475쪽.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황아란. 2014. “2014 년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21 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제3호, 319-341쪽.
-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els. 2017.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Vol. 4.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 Adams, James. 1999. “Policy divergence in multicandidate probabilistic spatial voting.” *Public Choice* 100: 103-122.
- Adams, James F., Samuel Merrill III, and Bernard Grofman. 2005. *A unified theory of party competi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integrating spatial and behavioral fact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solabehere, Stephen, and Shanto Iyengar. 1994. “Riding the wave and claiming ownership over issues: The joint effects of advertising and news

- coverage in campaigns.” *Public Opinion Quarterly*, 58(3): 335-357.
- Ansolabehere, Stephen, and James M. Snyder. 2000. “Valence politics and equilibrium in spatial election models.” *Public Choice* 103: 327-336.
- Arrow, Kenneth J. 2012.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 윤창호 옮김, 한국경제신문사, 1987]*. Yale University Press.
- Bartels, Larry M. 1986. “Issue voting under uncertainty: An empirical te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4): 709-728.
- Bartels, Larry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4(2): 117-150.
- Bartels, Larry M. 2014. “Remembering to forget: A note on the duration of campaign advertising effects” *Political Communication*, 31(4): 532-544.
- Bellucci, Paolo. 2006. “Tracing the cognitive and affective roots of ‘party competence’: Italy and Britain, 2001” *Electoral Studies*, 25(3): 548-569.
- Benoit, William L., and Glenn J. Hansen. 2004. “Issue ownership in primary and general presidential debates.” *Argumentation and Advocacy*, 40(3): 143-154.
- Benoit, William L., and David Airne. “Issue ownership for non-presidential television spots.” *Communication Quarterly*, 53(4): 493-503.
- Benoit, William L. 2007. “Own party issue ownership emphasis in presidential television spots.” *Communication Reports*, 20(1): 42-50.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ger, Mark M., Michael C. Munger, and Richard F. Potthoff. 2000. “The Downsian model predicts divergence.”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2(2): 228-240.
- Bélanger, Éric, and Bonnie M. Meguid. “Issue salience, issue ownership, and

- issue-based vote choice.” *Electoral Studies*, 27(3): 477-491.
- Borre, Ole. 2001. *Issue voting. An introduction*. Aarhus University Press.
- Boyd, Richard W. 1972. “Popular control of public policy: a normal vote analysis of the 1968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429-449.
-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2. “Comment: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450-458.
- Budge, Ian. 2009. “Anthony Downs: Master of many models.” *Masters of Political Science*, ecpr Press, 37–62.
- Budge, Ian, Ivor Crewe, and Dennis Farlie. 2010. *Party identification and beyond: Representations of voting and party competition*. ecpr Press.
- Budge, Ian and Farlie, Dennis. 1983. *Explaining and predicting elections: Issue effects and party strategies in twenty-three democracies*, Taylor & Francis.
- Budge, Ian and Farlie, Dennis. 1983. “Party competition: selective emphasis or direct confrontation?: an alternative view with data”, *In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Continuity and Change*, Beverly Hills, CA: Sage, 267–305.
- Calvo, Ernesto, Timothy Hellwig, and Kiyoungh Chang. 2013. “A Heteroscedastic Spatial Model of the Vote: A Model with Applic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Schofield N., Caballero G., Kselman D. (eds) Advances in Political Economy*. Springer, Berlin, Heidelberg, 351-368.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80.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rmines, Edward G., and James A. Stimson. 1980. “The two faces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1): 78-91.
- Carsey, Thomas M., and Geoffrey C. Layman. 2006. “Changing sides or

- changing minds? Party identification and policy preferences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2): 464-477.
- Clark, Michael. 2009. ”Valence and electoral outcomes in Western Europe, 1976–1998.” *Electoral Studies*, 28(1): 111-122.
- Conover, Pamela Johnston, and Stanley Feldman. 1982. “Projection and the perception of candidates’ issue position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5(2): 228-244.
- Conover, Pamela Johnston, and Stanley Feldman. 1989. “Candidate perception in an ambiguous world: Campaigns, cues, and inference proces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4): 912–940.
- Converse, Philip E. 1966. “The concept of a normal vote” *In Elections and the political order*, New York: Wiley, 9-39.
- Converse, Philip E. 2006.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1964)” *Critical Review*, 18(1): 1–74.
- Coppock, Alexander, Seth J. Hill, and Lynn Vavreck. 2019. ”Persuasive Effects of Presidential Campaign Advertising: Results of 53 Real-time Experiments in 2016.”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2019 APSA*.
- Damore, David F. 2004. “The dynamics of issue ownership in presidential campaig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7(3): 391–397.
- Denver, David, and Gordon Hands. 1990. “Issues, principles or ideology? How young voters decide.” *Electoral Studies* 9(1): 19-36.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박상훈·이기훈·김은덕 옮김, 후마니타스, 2013], New York: Harper.
- Egan, Patrick J. 2013. *Partisan priorities: How issue ownership drives and distorts American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elow, James M and Melvin J. Hinich. 1981. “A new approach to voter

- uncertainty in the Downsian spatial mode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3): 483–493.
- Enelow, James M and Melvin J. Hinich. 1984.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An introduction*. CUP Archive.
- Faricy, Christopher. 2011. “The politics of social policy in America: The causes and effects of indirect versus direct social spending.” *The Journal of Politics*, 73(1): 74-83.
- Feld, Scott, and Bernard Grofman. 1991. “Voter loyalty, incumbency advantage, and the benefit of the doubt.”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3(1): 115-137.
- Feldman, Stanley, and Pamela Johnston Conover. 1983. “Candidates, issues and voters: The role of inference in political perception.” *The Journal of Politics*, 45(4): 810-839.
- Gallati, Laura, and Nathalie Giger. 2019. “Proximity and directional voting: Testing for the region of acceptability.” *Electoral Studies* 64: 102024.
- Green, Jane, and Sara B. Hobolt. 2008. “Owning the issue agenda: Party strategies and vote choices in British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7(3): 460-476.
- Green-Pedersen, Christoffer. 2007. “The growing importance of issue competition: The changing nature of party competition in Western Europe.” *Political studies*, 55(3): 607-628.
- Grofman, Bernard. 1985. “The neglected role of the status quo in models of issue voting.” *The Journal of Politics*. 47(1): 230–237.
- Hill, Seth J ., James Lo, Lynn Vavreck, and John Zaller. 2013. “How quickly we forget: The duration of persuasion effects from mass communic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30(4): 521-547.
- Holian, David B. 2004. “He’s stealing my issues! Clinton’s crime rhetoric and

- the dynamics of issue ownership” *Political Behavior*, 26(2): 95–124.
- Hug, Simon. 1995. “Third parties in equilibrium.” *Public Choice*, 82: 159–180.
- Jessee, Stephen A. 2010. “Partisan bias, political information and spatial voting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The Journal of Politics*. 72(2): 327–340.
- Kalla, Joshua L., and David E. Broockman. 2018. “The minimal persuasive effects of campaign contact in general elections: Evidence from 49 field experim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2(1): 148-166.
- Kuechler, Manfred. 1991. “Issues and voting in the European elections 1989.”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9(1): 81-103.
- Lacy, Dean, and Philip Paolino. 2010. ”Testing proximity versus directional voting using experiments.” *Electoral Studies*, 29(3): 460-471.
- Layman, Geoffrey C., and Thomas M. Carsey.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86-802.
- Lewis-Beck, Michael S and William G Jacoby, Helmut Norpoth, and Herbert F. Weis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cdonald, Stuart Elaine, Ola Listhaug, and George Rabinowitz. 1991. “Issues and party support in multiparty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4): 1107-1131.
- Macdonald, Stuart Elaine, and George Rabinowitz. 1998. “Solving the paradox of nonconvergence: Valence, position, and direction in democratic politics.” *Electoral Studies* 17(3): 281-300.
- Markus, Gregory B and Philip E. Converse. 1979. “A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4): 1055–1070.

- Matthews, Steven A. 1979. “A simple direction model of electoral competition.” *Public Choice*, 34(2): 141–156.
- McFadden, Daniel. 1974.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Frontiers in Econometrics*, New York: Academic Press, 105–142.
- McFadden, Daniel. 1978. “Modelling the choice of residential location” *Spatial Interaction Theory and Planning Models*, Amsterdam: North-Holland, 72–77.
- Miller, Warren E. 1992. “Generational changes and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14(3): 333–352.
- Merrill III, Samuel, Samuel Merrill, and Bernard Grofman. 1999. *A unified theory of voting: Directional and proximity spatial mod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cholson, Stephen P. 2005. *Voting the agenda: Candidates, elections, and ballot proposi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ie, Norman H., and Kristi Andersen. 1974. “Mass belief systems revisited: Political change and attitude structure.” *The journal of politics* 36(3): 540–591.
- Nie, Norman H., Sidney Verba, and John R. Petrocik. 2013. *The Changing American Voter: Enlarg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Page, Benjamin I. 1978. *Choices and echoes in presidential elections: Rational man and electoral democra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paro, Aldo and Lewis-Beck, Michael S. 2019. “Valence and positional economic voting: A comparison across major democracies” *CPSA Annual Conference, Vancouver, BC, Canada*.
- Petrocik, John R. 1996. “Issue ownership in presidential elections, with a 1980 case stud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825–850.

- Petrocik, John R. 2003. "Issue ownership and presidential campaigning, 1952–2000."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8(4): 599–626.
-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Elaine Macdonald.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1): 93–121.
- RePass, David E. 1971. "Issue salience and party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2): 389–400.
- Schofield, Norman. 2003. "Valence competition in the spatial stochastic model."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5(4): 371–383.
- Schofield, Norman. 2004. "Equilibrium in the spatial 'valence' model of politic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6(4): 447–481.
- Schumpeter, Joseph A. 2003.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Taylor & Francis e-Library.
- Simas, Elizabeth N. 2013. "Proximity voting in the 2010 US House elections" *Electoral Studies*, 32(4): 708–717.
- Stokes, Donald E.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2): 368–377.
- Stokes, Donald E. 1992. "Valence politics" in *Electoral Politics*, Clarendon Press, Oxford, 141–162.
- Stubager, Rune. 2018. "What is issue ownership and how should we measure it?" *Political Behavior*, 40(2): 345–370.
- Stubager, Rune, and Rune Slothuus. "What are the sources of political parties' issue ownership? Testing four explanations at the individual level." *Political Behavior*, 35(3): 567–588.
- Tomz, Michael, and Robert P. Van Houweling. 2008. "Candidate positioning and voter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3): 303–318.
- van der Brug, Wouter. 2004. "Issue ownership and party choice." *Electoral Studies*, 23(2): 209–233.

- Wagner, Markus, and Eva Zeglovits. 2014. "Survey questions about party competence: Insights from cognitive interviews." *Electoral Studies* 34: 280-290.
- Walgrave, Stefaan, and Knut De Swert. 2007. "Where does issue ownership come from? From the party or from the media? Issue-party identifications in Belgium, 1991-2005."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2(1): 37-67.
- Weber, Till. 2015. "Synergy in spatial models of voting: how critical cases show that proximity, direction and discounting are friends, not foes."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5(4): 504-529.
- Westholm, Anders. 2001. "On the return of epicycles: Some crossroads in spatial modeling revisited" *The Journal of Politics*. 63(2): 436-481

부록

[합의이슈와 정당일체감 경로모형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 경로모형 분석: 제18대 대통령선거

		경제성장	역사인식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복지정책	교육개혁	정치개혁
경로계수									
정당일체감(t)←									
이슈중요도(t)	비표준화	0.03	0.04	-0.02	-0.02	0.03	0.01	0.01	-0.03
	표준오차	(0.02)	(0.04)	(0.02)	(0.02)	(0.03)	(0.02)	(0.04)	(0.02)
	표준화	0.08	0.05	-0.05	-0.05	0.04	0.01	0.01	-0.08
정당일체감(t-1)	비표준화	0.82***	0.84***	0.83***	0.84***	0.84***	0.84***	0.84***	0.83***
	표준오차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표준화	0.82***	0.84***	0.83***	0.83***	0.84***	0.84***	0.84***	0.83***
성별	비표준화	0	0	0	-0.01	0	0	0	0
	표준오차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표준화	0	0	0	0	0	0	0	0
연령	비표준화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준오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준화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가구소득	비표준화	0	0	0	0	0	0	0	0
	표준오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준화	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최종학력	비표준화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표준오차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표준화	-0.01	-0.01	-0.01	-0.01	-0.01	0	-0.01	-0.01
이념성향	비표준화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역사인식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복지정책	교육개혁	정치개혁
	표준오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준화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상수항	비표준화	-0.09	-0.08	-0.04	-0.05	-0.08	-0.08	-0.07	-0.04
	표준오차	(0.06)	(0.07)	(0.07)	(0.07)	(0.07)	(0.07)	(0.07)	(0.07)
이슈중요도(t)←									
정당일체감(t)	비표준화	0.41***	-0.09	-0.22*	-0.16	0.06	-0.13	0.08	-0.23*
	표준오차	(0.11)	(0.06)	(0.09)	(0.10)	(0.07)	(0.09)	(0.06)	(0.10)
	표준화	0.16***	-0.06	-0.10*	-0.07	0.04	-0.06	0.06	-0.10*
성별	비표준화	0.03	-0.01	0.16*	-0.05	-0.13*	0.02	-0.09*	0
	표준오차	(0.08)	(0.04)	(0.07)	(0.07)	(0.05)	(0.07)	(0.04)	(0.08)
	표준화	0.01	-0.01	0.07*	-0.02	-0.08*	0.01	-0.06*	0
연령	비표준화	0	0	0	0	0	0	0	0
	표준오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준화	-0.01	-0.01	0.03	0.03	0.02	-0.03	-0.06	0.03
가구소득	비표준화	0.03	0	0	-0.02	0	-0.04**	0	0.02
	표준오차	(0.02)	(0.01)	(0.02)	(0.02)	(0.01)	(0.01)	(0.01)	(0.02)
	표준화	0.05	0.01	-0.01	-0.04	0.01	-0.09**	-0.01	0.04
이념성향	비표준화	0.03	0	-0.02	0.04	-0.01	0	-0.01	-0.03
	표준오차	(0.02)	(0.01)	(0.02)	(0.02)	(0.01)	(0.02)	(0.01)	(0.02)
	표준화	0.04	-0.01	-0.04	0.07	-0.02	0	-0.04	-0.06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0.33***	0.33***	0.34***	0.38***	0.27***	0.37***	0.26***	0.29***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역사인식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복지정책	교육개혁	정치개혁
	표준오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표준화	0.33***	0.29***	0.34***	0.39***	0.27***	0.37***	0.29***	0.28***
상수항	비표준화	0.40*	0.24*	0.57***	0.49**	0.28*	0.88***	0.41***	0.71***
	표준오차	(0.18)	(0.10)	(0.16)	(0.17)	(0.12)	(0.16)	(0.10)	(0.17)
설명오차의 분산									
정당일체감(t)	비표준화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표준오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슈중요도(t)	비표준화	1.30***	0.42***	1.04***	1.13***	0.55***	0.95***	0.39***	1.24***
	표준오차	(0.06)	(0.02)	(0.05)	(0.05)	(0.02)	(0.04)	(0.02)	(0.05)
외생변수의 분산 및 공분산									
정당일체감(t-1)	비표준화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성별	비표준화	0.22***	0.22***	0.22***	0.22***	0.22***	0.22***	0.22***	0.22***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연령	비표준화	124.43***	124.43***	124.43***	124.43***	124.43***	124.43***	124.43***	124.43***
	표준오차	(5.49)	(5.49)	(5.49)	(5.49)	(5.49)	(5.49)	(5.49)	(5.49)
가구소득	비표준화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표준오차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최종학력	비표준화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이념성향	비표준화	4.52***	4.52***	4.52***	4.52***	4.52***	4.52***	4.52***	4.52***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역사인식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복지정책	교육개혁	정치개혁
	표준오차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1.64***	0.36***	1.21***	1.43***	0.61***	1.13***	0.54***	1.32***
	표준오차	(0.07)	(0.02)	(0.05)	(0.06)	(0.03)	(0.05)	(0.02)	(0.06)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성별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연령	표준오차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가구소득	표준오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최종학력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59***	0.59***	0.59***	0.59***	0.59***	0.59***	0.59***	0.59***
이념성향	표준오차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16***	-0.02*	-0.04*	0.01	0.01	-0.05**	-0.02*	-0.10***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2)	(0.01)	(0.02)	(0.02)	(0.01)	(0.02)	(0.01)	(0.02)
성별과 연령	비표준화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표준오차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성별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0.003	0	0	0	0	0	0	0
	표준오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성별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역사인식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복지정책	교육개혁	정치개혁
성별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표준오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성별과	비표준화	-0.01	0.01	0.01	-0.03	0.02	-0.04**	-0.05***	0.06***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2)	(0.01)	(0.02)	(0.02)	(0.01)	(0.02)	(0.01)	(0.02)
연령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0.97	0.97	0.97	0.97	0.97	0.97	0.97	0.97
	표준오차	(0.73)	(0.73)	(0.73)	(0.73)	(0.73)	(0.73)	(0.73)	(0.73)
연령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91***	-0.91***	-0.91***	-0.91***	-0.91***	-0.91***	-0.91***	-0.91***
	표준오차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연령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3.81***	3.81***	3.81***	3.81***	3.81***	3.81***	3.81***	3.81***
	표준오차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연령과	비표준화	-0.11	0.14	0.03	-0.3	-0.03	-0.75*	-0.06	0.64
	표준오차	(0.45)	(0.21)	(0.38)	(0.42)	(0.27)	(0.37)	(0.26)	(0.40)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표준오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39**	0.39**	0.39**	0.39**	0.39**	0.39**	0.39**	0.39**
	표준오차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27**	-0.02	-0.06	0.01	-0.13**	-0.20**	0.08	0.06
	표준오차	(0.08)	(0.04)	(0.07)	(0.08)	(0.05)	(0.07)	(0.05)	(0.07)
최종학력과	비표준화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표준오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최종학력과	비표준화	0.02	0.01	0	-0.05**	0	-0.01	0	0.03
	표준오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역사인식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복지정책	교육개혁	정치개혁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이념성향과	비표준화	0.40***	-0.04	-0.18*	0.1	0.04	-0.21**	-0.12*	-0.20**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9)	(0.04)	(0.07)	(0.08)	(0.05)	(0.07)	(0.05)	(0.08)
N		1027	1027	1027	1027	1027	1027	1027	1027
$\chi^2(df)$		0.549(1)	2.685(1)	0.398(1)	1.614(1)	1.466(1)	3.544(1)	0.315(1)	0.086(1)
p-value		0.459	0.101	0.528	0.204	0.226	0.06	0.574	0.769
RMSEA		0	0.041	0	0.024	0.021	0.05	0	0
CFI		1	0.999	1	1	1	0.999	1	1
stability index		0.112	0.057	0.073	0.058	0.039	0.027	0.028	0.087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 경로 모형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슈중요도 모형1	이슈중요도 모형2	이슈중요도 모형3
정당일체감(t)←		복지확대	복지확대	교육정책
이슈중요도(t)	비표준화	-0.01	0.02*	0.02
	표준오차	(0.01)	(0.01)	(0.01)
	표준화	-0.08	0.09*	0.06
새누리당 지지여부(1=새누리당 지지,0=무당파/민주당/국민의당)				
	비표준화	0.22***		
	표준오차	(0.02)		
	표준화	0.34***		
민주당 지지 여부(1=민주당 지지,0=무당파/새누리당/국민의당)				
	비표준화		0.48***	0.48***
	표준오차		(0.03)	(0.03)
	표준화		0.43***	0.43***
성별	비표준화	0.01	0.01	0.01
	표준오차	(0.01)	(0.02)	(0.02)
	표준화	0.03	0.01	0.01
연령	비표준화	0	-0.00***	-0.00***
	표준오차	(0.00)	(0.00)	(0.00)
	표준화	0	-0.08***	-0.08***
가구소득	비표준화	0	0.01	0
	표준오차	(0.00)	(0.00)	(0.00)
	표준화	0.05	0.03	0.02
최종학력	비표준화	-0.01	0.03	0.03
	표준오차	(0.01)	(0.02)	(0.02)
	표준화	-0.03	0.03	0.03
이념성향	비표준화	0.03***	-0.06***	-0.06***
	표준오차	(0.00)	(0.01)	(0.01)
	표준화	0.22***	-0.24***	-0.25***
상수항	비표준화	0	0.37**	0.45**
	표준오차	(0.07)	(0.14)	(0.14)
이슈중요도(t)←				
자유한국당 지지 여부(1=자유한국당 지지,0=무당파/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비표준화	-1.67**		
	표준오차	(0.56)		
	표준화	-0.22**		
민주당 지지 여부(1=민주당 지지,0=무당파/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비표준화		0.63**	0.38*
	표준오차		(0.20)	(0.19)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이슈중요도 모형1	이슈중요도 모형2	이슈중요도 모형3
정당일체감(t)←		복지확대	복지확대	교육정책
성별	표준화		0.17**	0.11*
	비표준화	0	-0.02	-0.18*
	표준오차	(0.08)	(0.08)	(0.08)
연령	표준화	0	-0.01	-0.06*
	비표준화	0	0	0.01
	표준오차	(0.00)	(0.00)	(0.00)
가구소득	표준화	0	0	0.05
	비표준화	-0.05**	-0.06***	-0.02
	표준오차	(0.02)	(0.02)	(0.02)
이념성향	표준화	-0.06**	-0.08***	-0.03
	비표준화	-0.06	-0.08**	-0.03
	표준오차	(0.03)	(0.03)	(0.03)
이슈중요도(t-1)	표준화	-0.06	-0.08**	-0.03
	비표준화	0.52***	0.51***	0.45***
	표준오차	(0.02)	(0.02)	(0.02)
상수항	표준화	0.51***	0.51***	0.46***
	비표준화	4.16***	3.96***	4.03***
	표준오차	(0.31)	(0.33)	(0.32)
설명오차의 분산				
정당일체감(t)	비표준화	0.04***	0.15***	0.16***
	표준오차	(0.00)	(0.01)	(0.01)
이슈중요도(t)	비표준화	2.29***	2.18***	2.04***
	표준오차	(0.12)	(0.09)	(0.08)
외생변수의 분산 및 공분산				
정당일체감(t-1)	비표준화	0.13***	0.19***	0.19***
	표준오차	(0.01)	(0.01)	(0.01)
성별	비표준화	0.25***	0.25***	0.25***
	표준오차	(0.01)	(0.01)	(0.01)
연령	비표준화	101.36***	101.36***	101.36***
	표준오차	(3.87)	(3.87)	(3.87)
가구소득	비표준화	5.53***	5.53***	5.53***
	표준오차	(0.21)	(0.21)	(0.21)
최종학력	비표준화	0.32***	0.32***	0.32***
	표준오차	(0.01)	(0.01)	(0.01)
이념성향	비표준화	3.52***	3.52***	3.52***
	표준오차	(0.13)	(0.13)	(0.13)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3.13***	3.13***	2.81***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이슈중요도 모형1	이슈중요도 모형2	이슈중요도 모형3
정당일체감(t)←		복지확대	복지확대	교육정책
	표준오차	(0.12)	(0.12)	(0.11)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01	-0.01	-0.01
성별	표준오차	(0.00)	(0.01)	(0.01)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92***	-0.65***	-0.65***
연령	표준오차	(0.10)	(0.12)	(0.12)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09***	0.02	0.02
가구소득	표준오차	(0.02)	(0.03)	(0.03)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01	0	0
최종학력	표준오차	(0.01)	(0.01)	(0.01)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29***	-0.22***	-0.22***
이념성향	표준오차	(0.02)	(0.02)	(0.02)
정당일체감(t-1)과	비표준화	-0.06***	0.07**	0.04*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2)	(0.02)	(0.02)
성별과 연령	비표준화	0.11	0.11	0.11
	표준오차	(0.14)	(0.14)	(0.14)
성별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0	0	0
	표준오차	(0.03)	(0.03)	(0.03)
성별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05***	0.05***	0.05***
	표준오차	(0.01)	(0.01)	(0.01)
성별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0.04	0.04	0.04
	표준오차	(0.03)	(0.03)	(0.03)
성별과	비표준화	-0.02	-0.02	-0.01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2)	(0.02)	(0.02)
연령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2.40***	2.40***	2.40***
	표준오차	(0.64)	(0.64)	(0.64)
연령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42**	-0.42**	-0.42**
	표준오차	(0.15)	(0.15)	(0.15)
연령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2.69***	2.69***	2.69***
	표준오차	(0.52)	(0.52)	(0.52)
연령과	비표준화	0.31	0.31	1.44**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48)	(0.48)	(0.46)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30***	0.30***	0.30***
최종학력	표준오차	(0.04)	(0.04)	(0.04)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17	0.17	0.17
이념성향	표준오차	(0.12)	(0.12)	(0.12)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28*	-0.28*	0.16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11)	(0.11)	(0.11)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이슈중요도 모형1	이슈중요도 모형2	이슈중요도 모형3
정당일체감(t)←		복지확대	복지확대	교육정책
최종학력과	비표준화	0.01	0.01	0.01
이념성향	표준오차	(0.03)	(0.03)	(0.03)
최종학력과	비표준화	-0.03	-0.03	0.03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3)	(0.03)	(0.03)
이념성향과	비표준화	-0.66***	-0.66***	-0.33***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9)	(0.09)	(0.09)
N		1370	1370	1370
$\chi^2(df)$		0.525	1.027	0.128
p-value		0.469	0.311	0.72
RMSEA		0	0.004	0
CFI		1	1	1
stability index		0.130607	0.121687	0.081499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 설득과 투사 효과 경로모형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지지자

		경로계수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외교/국제교류
<i>이슈선점(t)←</i>									
이슈중요도(t)	비표준화	0.31***	0.24***	0.19***	0.19**	0.08	0.19***	0.29***	
	표준오차	(0.05)	(0.04)	(0.03)	(0.07)	(0.06)	(0.05)	(0.05)	
	표준화	0.65***	0.52***	0.56***	0.39**	0.16	0.38***	0.65***	
이슈선점(t-1)	비표준화	0.07	0.11**	0.08**	0.08*	0.16***	0.14***	0.03	
	표준오차	(0.04)	(0.03)	(0.03)	(0.04)	(0.04)	(0.04)	(0.03)	
	표준화	0.08	0.13**	0.13**	0.09*	0.18***	0.15***	0.04	
성별	비표준화	-0.09	-0.09	-0.06	-0.1	-0.24***	-0.13*	-0.08	
	표준오차	(0.07)	(0.06)	(0.04)	(0.07)	(0.07)	(0.07)	(0.06)	
	표준화	-0.06	-0.07	-0.06	-0.06	-0.15***	-0.08*	-0.06	
연령	비표준화	0.01**	0	0	0.01*	0.01*	0.01*	0	
	표준오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준화	0.13**	0.03	0.05	0.10*	0.10*	0.08*	0.05	
가구소득	비표준화	0	-0.01	-0.01	-0.02	-0.01	-0.03*	0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표준화	0.01	-0.04	-0.03	-0.05	-0.02	-0.08*	-0.01	
최종학력	비표준화	0.01	0.07	0.05	0.08	-0.02	0.03	0.03	
	표준오차	(0.07)	(0.05)	(0.03)	(0.05)	(0.07)	(0.07)	(0.06)	
	표준화	0.01	0.06	0.05	0.06	-0.02	0.02	0.02	
이념성향	비표준화	-0.03	0.02	-0.01	-0.02	-0.03	-0.04*	0	
	표준오차	(0.02)	(0.02)	(0.01)	(0.02)	(0.02)	(0.02)	(0.02)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로계수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외교/국제교류
상수항	표준화	-0.05	0.05	-0.04	-0.04	-0.06	-0.08*	0.01
	비표준화	0.1	0.78	1.73***	0.67	1.61**	0.89	0.63
	표준오차	(0.46)	(0.44)	(0.30)	(0.52)	(0.60)	(0.48)	(0.51)
<i>이슈중요도(t) ←</i>								
이슈선점(t)	비표준화	0.21	0.74	1.89**	1.19	0.17	0.75	0.52
	표준오차	(1.19)	(0.51)	(0.60)	(0.65)	(0.46)	(0.50)	(1.84)
	표준화	0.1	0.34	0.64**	0.59	0.09	0.37	0.23
성별	비표준화	-0.3	0.15	0.03	0.15	-0.1	0.31*	-0.02
	표준오차	(0.27)	(0.12)	(0.14)	(0.14)	(0.19)	(0.13)	(0.22)
	표준화	-0.09	0.05	0.01	0.05	-0.03	0.09*	-0.01
연령	비표준화	0	-0.01	0	0	-0.01	0	0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표준화	0	-0.04	-0.01	-0.01	-0.06	-0.03	-0.02
가구소득	비표준화	-0.03	-0.04	-0.02	0.01	0	-0.01	-0.02
	표준오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표준화	-0.04	-0.06	-0.03	0.02	0	-0.02	-0.03
이념성향	비표준화	-0.06	-0.07	0.02	-0.07	-0.06	-0.05	-0.08
	표준오차	(0.08)	(0.04)	(0.04)	(0.05)	(0.05)	(0.05)	(0.06)
	표준화	-0.06	-0.07	0.02	-0.07	-0.06	-0.04	-0.08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0.40*	0.36***	0.29***	0.24***	0.38***	0.38***	0.3
	표준오차	(0.17)	(0.07)	(0.07)	(0.06)	(0.04)	(0.06)	(0.20)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로계수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외교/국제교류
	표준화	0.42*	0.38***	0.30***	0.26***	0.41***	0.38***	0.31
상수항	비표준화	4.65	3.09*	-1.07	2.69	5.00***	2.45*	4.57
	표준오차	(2.39)	(1.43)	(1.90)	(1.53)	(1.22)	(1.18)	(4.74)
<i>설명오차의 분산</i>								
이슈선점(t)		0.51***	0.40***	0.22***	0.50***	0.55***	0.51***	0.43***
		(0.04)	(0.03)	(0.02)	(0.03)	(0.04)	(0.03)	(0.04)
이슈중요도(t)		1.90***	1.58***	1.89***	2.05***	1.85***	1.76***	1.87***
		(0.53)	(0.13)	(0.34)	(0.48)	(0.23)	(0.12)	(0.52)
<i>외생변수의 분산 및 공분산</i>								
이슈선점(t-1)	비표준화	0.79***	0.72***	0.82***	0.75***	0.75***	0.78***	0.80***
	표준오차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성별	비표준화	0.25***	0.25***	0.25***	0.25***	0.25***	0.24***	0.25***
	표준오차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연령	비표준화	88.80***	88.98***	90.55***	87.48***	86.01***	85.07***	86.83***
	표준오차	(5.63)	(5.66)	(5.83)	(5.61)	(5.60)	(5.54)	(5.63)
가구소득	비표준화	5.53***	5.58***	5.49***	5.57***	5.66***	5.57***	5.60***
	표준오차	(0.35)	(0.36)	(0.35)	(0.36)	(0.37)	(0.36)	(0.36)
최종학력	비표준화	0.29***	0.29***	0.28***	0.29***	0.28***	0.28***	0.29***
	표준오차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이념성향	비표준화	2.49***	2.46***	2.41***	2.43***	2.41***	2.48***	2.42***
	표준오차	(0.16)	(0.16)	(0.16)	(0.16)	(0.16)	(0.16)	(0.16)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로계수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외교/국제교류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2.92***	2.62***	2.54***	2.70***	2.77***	2.86***	2.67***
	표준오차	(0.18)	(0.17)	(0.16)	(0.17)	(0.18)	(0.19)	(0.17)
이슈선점(t-1)과 성별	비표준화	-0.02	-0.01	-0.05*	-0.04	-0.04*	-0.01	-0.01
	표준오차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이슈선점(t-1)과 연령	비표준화	0.51	0.29	-0.15	0.78*	0.75*	0.08	0.41
	표준오차	(0.38)	(0.36)	(0.39)	(0.37)	(0.37)	(0.38)	(0.38)
이슈선점(t-1)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0.01	-0.03	0.03	-0.02	-0.15	-0.16	-0.07
	표준오차	(0.09)	(0.09)	(0.10)	(0.09)	(0.10)	(0.10)	(0.10)
이슈선점(t-1)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03	-0.01	-0.04*	-0.02	-0.05*	-0.05*	-0.04
	표준오차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이슈선점(t-1)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0.21***	-0.30***	-0.25***	-0.18**	-0.19**	-0.22***	-0.20**
	표준오차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이슈선점(t-1)과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0.34***	0.21***	0.29***	0.29***	0.24***	0.39***	0.20**
	표준오차	(0.07)	(0.06)	(0.07)	(0.07)	(0.07)	(0.07)	(0.07)
성별과 연령	비표준화	0.41	0.42*	0.36	0.33	0.36	0.31	0.29
	표준오차	(0.21)	(0.21)	(0.22)	(0.21)	(0.21)	(0.21)	(0.21)
성별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0.02	-0.04	-0.04	-0.03	-0.04	-0.06	-0.04
	표준오차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성별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04**	0.04**	0.03**	0.03**	0.03**	0.03**	0.03**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성별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0.06	0.06	0.06	0.05	0.03	0.04	0.03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로계수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외교/국제교류
	표준오차	(0.04)	(0.04)	(0.04)	(0.04)	(0.04)	(0.04)	(0.04)
성별과	비표준화	-0.10*	-0.04	-0.08*	-0.06	-0.19***	-0.07	-0.04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4)	(0.04)	(0.04)	(0.04)	(0.04)	(0.04)	(0.04)
연령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2.30*	2.44*	2.54*	2.55*	2.36*	2.48*	2.72**
	표준오차	(1.00)	(1.01)	(1.02)	(1.01)	(1.02)	(1.01)	(1.02)
연령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51*	-0.52*	-0.44	-0.49*	-0.53*	-0.50*	-0.52*
	표준오차	(0.23)	(0.23)	(0.23)	(0.23)	(0.23)	(0.23)	(0.23)
연령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0.63	-0.4	-0.45	-0.52	-0.48	-0.66	-0.72
	표준오차	(0.67)	(0.67)	(0.67)	(0.66)	(0.66)	(0.67)	(0.67)
연령과	비표준화	3.05***	0.57	0.57	1.56*	1.19	-0.21	2.33***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73)	(0.69)	(0.69)	(0.70)	(0.71)	(0.72)	(0.71)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28***	0.27***	0.26***	0.26***	0.28***	0.27***	0.29***
최종학력	표준오차	(0.06)	(0.06)	(0.06)	(0.06)	(0.06)	(0.06)	(0.06)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06	0.08	0.09	0.04	0.1	0.09	0.07
이념성향	표준오차	(0.17)	(0.17)	(0.17)	(0.17)	(0.17)	(0.17)	(0.17)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27	-0.07	-0.05	-0.01	-0.17	-0.1	-0.03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18)	(0.17)	(0.17)	(0.18)	(0.18)	(0.18)	(0.18)
최종학력과	비표준화	0.06	0.05	0.03	0.04	0.03	0.05	0.04
이념성향	표준오차	(0.04)	(0.04)	(0.04)	(0.04)	(0.04)	(0.04)	(0.04)
최종학력과	비표준화	0.03	0.03	-0.03	0.05	-0.11**	-0.01	0.04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4)	(0.04)	(0.04)	(0.04)	(0.04)	(0.04)	(0.04)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로계수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외교/국제교류
이념성향과	비표준화	-0.36**	-0.57***	-0.53***	-0.43***	-0.34**	-0.51***	-0.30*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12)	(0.12)	(0.12)	(0.12)	(0.12)	(0.12)	(0.12)
<i>N</i>		498	494	482	486	472	472	475
$\chi^2(1)$		1.605	1.611	0.925	0.398	1.299	3.419	0.171
p-value		0.205	0.204	0.336	0.528	0.254	0.064	0.679
RMSEA		0.035	0.035	0	0	0.025	0.072	0
CFI		0.998	0.997	1	1	0.998	0.991	1
stability index		0.255597	0.418967	0.598358	0.478844	0.119688	0.379669	0.38851

***p<.001, **p<.01, *p<.05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 설득과 투사 효과 경로모형 분석:

제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지지자

		경제성장	복지확대	경찰치안	보건의료	외교국제
<i>이슈선점(t)←</i>						
이슈중요도(t)	비표준화	0.06	0.21*	0.11	0.2	0.61*
	표준오차	(0.18)	(0.09)	(0.22)	(0.14)	(0.29)
	표준화	0.13	0.53*	0.22	0.43	1.17*
이슈선점(t-1)	비표준화	0.14	0.11	0.21	0.12	0.09
	표준오차	(0.11)	(0.15)	(0.13)	(0.12)	(0.17)
	표준화	0.19	0.1	0.24	0.13	0.1
성별	비표준화	-0.07	-0.2	0.19	-0.15	-0.1
	표준오차	(0.13)	(0.18)	(0.16)	(0.17)	(0.26)
	표준화	-0.06	-0.11	0.12	-0.09	-0.06
연령	비표준화	0	0.02	0.01	0	-0.02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표준화	0.05	0.17	0.1	-0.04	-0.19
가구소득	비표준화	-0.01	-0.03	0.01	0.03	-0.04
	표준오차	(0.02)	(0.03)	(0.03)	(0.03)	(0.04)
	표준화	-0.05	-0.1	0.03	0.12	-0.13
최종학력	비표준화	0.04	0.02	0.21	0.1	-0.03
	표준오차	(0.08)	(0.04)	(0.15)	(0.11)	(0.11)
	표준화	0.04	0.01	0.17	0.08	-0.03
이념성향	비표준화	0.10*	-0.02	0.1	0.03	-0.13
	표준오차	(0.05)	(0.05)	(0.11)	(0.06)	(0.12)
	표준화	0.28*	-0.04	0.22	0.06	-0.26
상수항	비표준화	1.41	0.4	-0.63	0.19	0.31
	표준오차	(0.77)	(0.74)	(0.93)	(0.76)	(1.09)
<i>이슈중요도(t)←</i>						
이슈선점(t)	비표준화	2.73	3.23**	1	2.24*	1.01
	표준오차	(1.45)	(1.04)	(0.89)	(1.03)	(0.90)
	표준화	1.21	1.30**	0.48	1.04*	0.52
성별	비표준화	0.26	0.69	-0.18	0.34	0.31
	표준오차	(0.42)	(0.67)	(0.39)	(0.48)	(0.35)
	표준화	0.09	0.14	-0.05	0.1	0.1
연령	비표준화	0.02	-0.05	0.01	0.02	0.03
	표준오차	(0.02)	(0.04)	(0.02)	(0.02)	(0.02)
	표준화	0.13	-0.22	0.03	0.11	0.16
가구소득	비표준화	0.01	0.06	-0.05	-0.12	0.05
	표준오차	(0.07)	(0.12)	(0.06)	(0.09)	(0.05)
	표준화	0.02	0.08	-0.09	-0.21	0.08
이념성향	비표준화	-0.16	0.07	0.2	-0.02	0.26
	표준오차	(0.21)	(0.17)	(0.16)	(0.15)	(0.14)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복지확대	경찰치안	보건의료	외교국제
이슈중요도(t-1)	표준화	-0.19	0.05	0.21	-0.02	0.28
	비표준화	0.19	0.14	0.25	0.22	0.08
	표준오차	(0.13)	(0.17)	(0.13)	(0.18)	(0.16)
상수항	표준화	0.21	0.14	0.21	0.22	0.1
	비표준화	-2.57	-1.5	1.58	-0.54	0.2
	표준오차	(3.45)	(2.70)	(1.57)	(2.08)	(1.51)
<i>설명오차의 분산</i>						
이슈선점(t)	비표준화	0.31***	0.55***	0.39***	0.49***	0.84
	표준오차	(0.05)	(0.10)	(0.07)	(0.10)	(0.47)
이슈중요도(t)	비표준화	3.13	6.49*	1.68***	3.47	1.72**
	표준오차	(2.23)	(3.27)	(0.41)	(1.99)	(0.59)
<i>외생변수의 분산 및 공분산</i>						
이슈선점(t-1)	비표준화	0.74***	0.67***	0.80***	0.69***	0.92***
	표준오차	(0.12)	(0.11)	(0.13)	(0.11)	(0.15)
성별	비표준화	0.23***	0.23***	0.23***	0.23***	0.23***
	표준오차	(0.04)	(0.04)	(0.04)	(0.04)	(0.04)
연령	비표준화	89***	92***	83***	92***	87***
	표준오차	(14.21)	(14.60)	(13.52)	(15.00)	(13.98)
가구소득	비표준화	7.67***	7.80***	7.27***	8.10***	7.67***
	표준오차	(1.22)	(1.24)	(1.18)	(1.31)	(1.23)
최종학력	비표준화	0.40***	0.40***	0.37***	0.40***	0.39***
	표준오차	(0.06)	(0.06)	(0.06)	(0.06)	(0.06)
이념성향	비표준화	2.87***	2.83***	2.83***	2.88***	2.74***
	표준오차	(0.46)	(0.45)	(0.46)	(0.47)	(0.44)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2.56***	5.18***	1.79***	2.93***	3.36***
	표준오차	(0.41)	(0.82)	(0.29)	(0.48)	(0.54)
이슈선점(t-1)과 성별	비표준화	0.02	-0.06	0	-0.02	-0.05
	표준오차	(0.05)	(0.04)	(0.05)	(0.05)	(0.05)
이슈선점(t-1)과 연령	비표준화	0.54	0.28	0.11	0.7	0.58
	표준오차	(0.92)	(0.88)	(0.93)	(0.92)	(1.02)
이슈선점(t-1)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0.48	-0.02	0.46	0.38	0.89**
	표준오차	(0.27)	(0.26)	(0.28)	(0.28)	(0.32)
이슈선점(t-1)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07	0.06	0.03	0.07	0.07
	표준오차	(0.06)	(0.06)	(0.06)	(0.06)	(0.07)
이슈선점(t-1)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0.28	0.35*	0.37*	0.40*	0.32
	표준오차	(0.17)	(0.16)	(0.18)	(0.17)	(0.18)
이슈선점(t-1)과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0.13	0.2	0.09	0.43*	0.50*
	표준오차	(0.16)	(0.21)	(0.14)	(0.17)	(0.21)
성별과 연령	비표준화	-0.8	-0.7	-0.58	-0.63	-0.66
	표준오차	(0.52)	(0.52)	(0.51)	(0.53)	(0.52)
성별과 연령	비표준화	0.08	0.08	0.04	0.12	0.09
	표준오차	(0.52)	(0.52)	(0.51)	(0.53)	(0.52)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복지확대	경찰치안	보건의료	외교국제
가구소득	표준오차	(0.15)	(0.15)	(0.15)	(0.16)	(0.15)
성별과	비표준화	0.08*	0.09*	0.06	0.07*	0.08*
최종학력	표준오차	(0.04)	(0.04)	(0.03)	(0.04)	(0.04)
성별과	비표준화	-0.02	-0.04	-0.02	0.02	-0.04
이념성향	표준오차	(0.09)	(0.09)	(0.09)	(0.09)	(0.09)
성별과	비표준화	-0.06	-0.29*	-0.14	-0.12	-0.17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9)	(0.13)	(0.08)	(0.09)	(0.10)
연령과	비표준화	-3.83	-3.34	-0.8	-3.79	-1.93
가구소득	표준오차	(2.98)	(3.03)	(2.83)	(3.17)	(2.94)
연령과	비표준화	-1.61*	-1.46*	-0.71	-1.43*	-1.22
최종학력	표준오차	(0.70)	(0.71)	(0.64)	(0.72)	(0.68)
연령과	비표준화	1.16	1.01	1.52	0.64	1.38
이념성향	표준오차	(1.81)	(1.82)	(1.77)	(1.87)	(1.76)
연령과	비표준화	0.53	4.22	1.79	3.13	2.97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1.70)	(2.50)	(1.42)	(1.92)	(1.97)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66**	0.71**	0.58**	0.71**	0.64**
최종학력	표준오차	(0.21)	(0.22)	(0.20)	(0.22)	(0.21)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34	0.15	0.23	0.21	0.15
이념성향	표준오차	(0.53)	(0.53)	(0.52)	(0.56)	(0.52)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41	-0.05	-0.21	0.23	0.33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50)	(0.72)	(0.41)	(0.56)	(0.58)
최종학력과	비표준화	-0.16	-0.18	-0.21	-0.15	-0.23
이념성향	표준오차	(0.12)	(0.12)	(0.12)	(0.12)	(0.12)
최종학력과	비표준화	0.18	-0.2	-0.11	-0.06	-0.1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12)	(0.16)	(0.09)	(0.12)	(0.13)
이념성향과	비표준화	0.56	0.3	0.96***	1.26***	0.14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31)	(0.43)	(0.28)	(0.36)	(0.34)
N		79	79	76	76	78
$\chi^2(1)$		0.005	0	5.377	0.004	1.828
p-value		0.946	0.994	0.02	0.95	0.176
RMSEA		0	0	0.242	0	0.104
CFI		1	1	0.91	1	0.981
stability index		0.39	0.83	0.33	0.67	0.78

***p<.001, **p<.01, *p<.05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 설득과 투사 경로모형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지지자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보건/의료	외교/국제
경로계수									
이슈선점(t)←									
이슈중요도(t)	비표준화	0.27**	0.10*	0.21**	0.30***	0.36***	0.30***	0.31***	0.24***
	표준오차	(0.08)	(0.05)	(0.08)	(0.06)	(0.08)	(0.07)	(0.07)	(0.07)
	표준화	0.49**	0.27*	0.38**	0.64***	0.68***	0.59***	0.56***	0.44***
이슈선점(t-1)	비표준화	0.21**	0.03	0.12	0.12	0.18*	0.20**	0.17*	0.09
	표준오차	(0.07)	(0.06)	(0.06)	(0.07)	(0.07)	(0.07)	(0.07)	(0.07)
	표준화	0.23**	0.05	0.14	0.14	0.21*	0.22**	0.18*	0.1
성별	비표준화	0.07	0.07	0.13	-0.01	0.07	0.05	0.06	0.04
	표준오차	(0.12)	(0.10)	(0.12)	(0.13)	(0.12)	(0.13)	(0.13)	(0.12)
	표준화	0.05	0.05	0.09	-0.01	0.05	0.03	0.04	0.03
연령	비표준화	-0.01	0.01	0.01*	0	0	0.01	0	0.01*
	표준오차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표준화	-0.07	0.08	0.16*	0.05	-0.03	0.08	0	0.16*
가구소득	비표준화	0.01	-0.02	-0.01	-0.05	-0.02	-0.07**	-0.03	-0.01
	표준오차	(0.02)	(0.02)	(0.03)	(0.03)	(0.02)	(0.03)	(0.03)	(0.02)
	표준화	0.05	-0.07	-0.03	-0.14	-0.06	-0.20**	-0.08	-0.04
최종학력	비표준화	-0.11	-0.05	-0.15	0	-0.13*	-0.11	-0.12	-0.14
	표준오차	(0.09)	(0.08)	(0.09)	(0.10)	(0.06)	(0.07)	(0.10)	(0.07)
	표준화	-0.09	-0.05	-0.13	0	-0.11*	-0.09	-0.09	-0.12
이념성향	비표준화	0.01	0.01	0.03	-0.02	0.07	0.05	0.07	-0.02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보건/의료	외교/국제
	표준오차	(0.04)	(0.03)	(0.04)	(0.04)	(0.04)	(0.04)	(0.04)	(0.04)
	표준화	0.02	0.02	0.07	-0.05	0.14	0.09	0.13	-0.03
상수항	비표준화	0.84	2.26***	0.89	0.68	-0.34	0.32	0.1	0.76
	표준오차	(0.72)	(0.67)	(0.80)	(0.78)	(0.71)	(0.66)	(0.79)	(0.71)
이슈중요도(t)←									
이슈선점(t)	비표준화	0.37	0.02	0.57	-0.05	0.93*	0.85*	0.26	1.09
	표준오차	(0.41)	(2.88)	(0.60)	(1.08)	(0.40)	(0.43)	(0.54)	(0.68)
	표준화	0.2	0.01	0.31	-0.03	0.49*	0.43*	0.14	0.59
성별	비표준화	-0.3	-0.26	-0.45*	-0.05	-0.14	0.08	-0.19	-0.08
	표준오차	(0.16)	(0.23)	(0.19)	(0.21)	(0.20)	(0.23)	(0.20)	(0.20)
	표준화	-0.11	-0.08	-0.16*	-0.01	-0.05	0.02	-0.06	-0.03
연령	비표준화	0.02*	-0.03*	-0.01	-0.02	0	0	-0.01	0
	표준오차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2)
	표준화	0.17*	-0.17*	-0.09	-0.1	0.01	-0.02	-0.04	-0.03
가구소득	비표준화	0.06	0.04	0.07	0.04	0.04	0.09	0.04	0.01
	표준오차	(0.04)	(0.07)	(0.04)	(0.06)	(0.04)	(0.06)	(0.04)	(0.05)
	표준화	0.11	0.05	0.12	0.05	0.07	0.12	0.06	0.02
이념성향	비표준화	-0.13*	-0.09	-0.06	-0.13	-0.08	-0.13	-0.1	-0.06
	표준오차	(0.06)	(0.07)	(0.06)	(0.10)	(0.07)	(0.07)	(0.07)	(0.08)
	표준화	-0.15*	-0.08	-0.07	-0.12	-0.09	-0.12	-0.1	-0.07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0.44***	0.60**	0.45***	0.66**	0.31**	0.44***	0.61***	0.37***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보건/의료	외교/국제
	표준오차	(0.09)	(0.19)	(0.09)	(0.23)	(0.09)	(0.11)	(0.14)	(0.10)
	표준화	0.46***	0.60**	0.47***	0.64**	0.33**	0.42***	0.56***	0.44***
상수항	비표준화	2.71**	4.76	3.66**	4.31	3.17***	1.6	2.88**	2.57
	표준오차	(1.03)	(7.60)	(1.27)	(2.69)	(0.91)	(1.04)	(1.00)	(1.33)
설명오차의 분산									
이슈선점(t)	비표준화	0.43***	0.32***	0.47***	0.56***	0.47***	0.58***	0.57***	0.46***
	표준오차	(0.05)	(0.04)	(0.06)	(0.08)	(0.07)	(0.09)	(0.07)	(0.06)
이슈중요도(t)	비표준화	0.95***	1.66	1.24***	1.56***	1.46***	1.86***	1.41***	1.42**
		(0.11)	(0.85)	(0.23)	(0.27)	(0.22)	(0.34)	(0.18)	(0.53)
외생변수의 분산 및 공분산									
이슈선점(t-1)	비표준화	0.65***	0.69***	0.76***	0.81***	0.79***	0.86***	0.86***	0.79***
	표준오차	(0.07)	(0.08)	(0.09)	(0.09)	(0.09)	(0.10)	(0.10)	(0.09)
성별	비표준화	0.24***	0.24***	0.24***	0.23***	0.24***	0.23***	0.24***	0.24***
	표준오차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연령	비표준화	77.36***	78.15***	78.77***	78.56***	75.03***	73.55***	75.89***	73.99***
	표준오차	(8.70)	(8.88)	(9.01)	(9.01)	(8.52)	(8.44)	(8.68)	(8.49)
가구소득	비표준화	5.09***	5.08***	5.13***	4.94***	5.18***	5.18***	5.14***	5.15***
	표준오차	(0.57)	(0.58)	(0.59)	(0.57)	(0.59)	(0.59)	(0.59)	(0.59)
최종학력	비표준화	0.39***	0.39***	0.39***	0.38***	0.39***	0.39***	0.39***	0.39***
	표준오차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이념성향	비표준화	2.35***	2.31***	2.27***	2.36***	2.33***	2.34***	2.34***	2.36***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보건/의료	외교/국제
	표준오차	(0.26)	(0.26)	(0.26)	(0.27)	(0.26)	(0.27)	(0.27)	(0.27)
이슈중요도(t-1)	비표준화	1.91***	2.76***	2.01***	2.50***	2.46***	2.50***	2.08***	2.60***
	표준오차	(0.22)	(0.31)	(0.23)	(0.29)	(0.28)	(0.29)	(0.24)	(0.30)
이슈선점(t-1)과	비표준화	0.03	0	0.01	0.01	-0.02	0.02	0.03	0.03
성별	표준오차	(0.03)	(0.03)	(0.03)	(0.04)	(0.03)	(0.04)	(0.04)	(0.04)
이슈선점(t-1)과	비표준화	1.35*	1	1	0	0.41	-0.04	-1.41*	-1.09
연령	표준오차	(0.58)	(0.60)	(0.63)	(0.65)	(0.62)	(0.65)	(0.66)	(0.63)
이슈선점(t-1)과	비표준화	0.09	0.17	0	-0.08	0.15	0.09	0.02	0.07
가구소득	표준오차	(0.15)	(0.15)	(0.16)	(0.16)	(0.16)	(0.17)	(0.17)	(0.16)
이슈선점(t-1)과	비표준화	-0.01	-0.02	0.03	0.01	-0.03	0	0	-0.02
최종학력	표준오차	(0.04)	(0.04)	(0.04)	(0.04)	(0.04)	(0.05)	(0.05)	(0.04)
이슈선점(t-1)과	비표준화	-0.22*	-0.11	-0.16	-0.23*	-0.2	-0.25*	-0.21	-0.27*
이념성향	표준오차	(0.10)	(0.10)	(0.11)	(0.11)	(0.11)	(0.12)	(0.12)	(0.11)
이슈선점(t-1)과	비표준화	0.14	0.16	0.11	0.14	0.15	0.17	0.26*	0.09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9)	(0.11)	(0.10)	(0.12)	(0.11)	(0.12)	(0.11)	(0.12)
성별과 연령	비표준화	-0.43	-0.43	-0.41	-0.4	-0.51	-0.43	-0.32	-0.45
	표준오차	(0.34)	(0.35)	(0.35)	(0.35)	(0.34)	(0.34)	(0.34)	(0.34)
성별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0.06	-0.05	-0.05	-0.04	-0.06	-0.04	-0.06	-0.03
	표준오차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성별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06*	0.06*	0.05*	0.06*	0.06**	0.06*	0.06*	0.06*
	표준오차	(0.02)	(0.03)	(0.02)	(0.02)	(0.02)	(0.02)	(0.03)	(0.03)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보건/의료	외교/국제
성별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0.03	0.03	0.02	0.01	0.03	0.02	0.01	0.01
	표준오차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성별과	비표준화	-0.1	-0.02	-0.05	-0.05	-0.07	-0.03	0.01	0.02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5)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연령과 가구소득	비표준화	3.18*	3.08	2.97	3.61*	3.26*	2.8	3.08	2.9
	표준오차	(1.60)	(1.62)	(1.64)	(1.62)	(1.60)	(1.60)	(1.62)	(1.60)
연령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53	-0.5	-0.49	-0.4	-0.35	-0.3	-0.43	-0.32
	표준오차	(0.44)	(0.45)	(0.45)	(0.44)	(0.43)	(0.43)	(0.44)	(0.44)
연령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1.4	1.4	1.4	1.45	1.69	2.04	1.82	1.51
	표준오차	(1.08)	(1.08)	(1.09)	(1.11)	(1.07)	(1.08)	(1.09)	(1.08)
연령과	비표준화	4.18***	0.88	2.90**	2.02	2.72*	0.81	1.83	1.02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1.02)	(1.18)	(1.04)	(1.15)	(1.11)	(1.10)	(1.03)	(1.13)
가구소득과 최종학력	비표준화	0.27*	0.29*	0.30**	0.23*	0.27*	0.29*	0.26*	0.29*
	표준오차	(0.11)	(0.12)	(0.12)	(0.11)	(0.12)	(0.12)	(0.12)	(0.12)
가구소득과 이념성향	비표준화	0.28	0.36	0.34	0.25	0.31	0.37	0.32	0.36
	표준오차	(0.28)	(0.28)	(0.28)	(0.28)	(0.28)	(0.28)	(0.28)	(0.28)
가구소득과	비표준화	0.15	-0.42	-0.09	0.17	0.14	-0.11	0.03	0.09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25)	(0.30)	(0.26)	(0.29)	(0.29)	(0.29)	(0.26)	(0.30)
최종학력과	비표준화	0.07	0.07	0.05	0.04	0.05	0.05	0.06	0.07
이념성향 최종학력과	표준오차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비표준화	-0.09	-0.15	0	0.07	0.03	-0.06	-0.14	-0.02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보건/의료	외교/국제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07)	(0.08)	(0.07)	(0.08)	(0.08)	(0.08)	(0.07)	(0.08)
이념성향과	비표준화	0.2	-0.21	0.07	-0.03	0.15	0.17	0.01	0.15
이슈중요도(t-1)	표준오차	(0.17)	(0.20)	(0.17)	(0.20)	(0.19)	(0.20)	(0.18)	(0.20)
N		158	155	153	152	155	152	153	152
$\chi^2(df)$		0.547(1)	0.188(1)	0.052(1)	0.417(1)	4.681(1)	0.384(1)	0.154(1)	1.77(1)
p-value		0.46	0.665	0.82	0.518	0.031	0.536	0.695	0.183
RMSEA		0.	0	0	0	0.155	0	0	0.071
CFI		1	1	1	1	0.964	1	1	0.992
stability index		0.5316	0.040	0.343	0.127	0.575	0.507	0.284	0.507

***p<.001, **p<.01, *p<.05.

[합의이슈 투표모형 분석 결과]

합의이슈 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18대 대통령선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전체	무당파	새누리당	민주당
<i>이슈중요도</i>				
경제성장	0.31*** (0.07)	0.21* (0.10)	0.32 (0.18)	0.45** (0.15)
부패척결	-0.19* (0.08)	-0.22 (0.11)	-0.19 (0.19)	-0.09 (0.17)
일자리창출	0 (0.07)	-0.02 (0.11)	-0.24 (0.17)	0.14 (0.15)
복지정책	-0.16* (0.08)	-0.25 (0.13)	-0.39* (0.18)	0.09 (0.16)
정치개혁	-0.34*** (0.08)	-0.32** (0.12)	-0.29 (0.17)	-0.37* (0.18)
성별	0.02 (0.15)	-0.09 (0.22)	0.41 (0.36)	-0.19 (0.31)
<i>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i>				
강원/제주	0.52 (0.43)	0.17 (0.67)	- -	0.24 (1.09)
충청/대전	0.34 (0.27)	0.35 (0.41)	-0.22 (0.57)	0.98* (0.41)
전라/광주	-0.5 (0.30)	-0.37 (0.49)	-1.02 (0.91)	-0.12 (0.44)
경상/울산/대구/부산	0.60*** (0.17)	0.64* (0.25)	0.85* (0.43)	0.47 (0.41)
가구소득	-0.04 (0.04)	-0.09 (0.06)	-0.04 (0.09)	0.06 (0.07)
최종학력	-0.52** (0.18)	-0.24 (0.25)	-1.34* (0.64)	-0.47 (0.38)
이념성향	0.36*** (0.05)	0.66*** (0.10)	0.20* (0.09)	0.27** (0.09)
<i>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i>				
새누리당	2.59*** (0.21)			
민주당	-1.42*** (0.18)			
기타	-0.86** (0.29)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전체	무당파	새누리당	민주당
상수항	-0.57 (0.62)	-2.30* (0.95)	5.32** (1.98)	-2.90* (1.34)
N	1719	483	470	592
Pseudo R2	0.4771	0.1915	0.1341	0.1424
Log likelihood	-605.899	-255.211	-120.496	-162.763
$\chi^2(df)$	484.45(16)	80.99(13)	30.65(12)	44.08(13)
Prob > chi2	0	0	0	0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합의이슈와 대립이슈 통합 모형 회귀분석 결과: 제18대 대통령선거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전체	무당파	새누리당	민주당
<i>이슈중요도</i>				
경제성장	0.25** (0.08)	0.14 (0.12)	0.36 (0.19)	0.51** (0.18)
부패척결	-0.16 (0.08)	-0.30* (0.13)	-0.13 (0.21)	0.07 (0.20)
일자리창출	0.03 (0.08)	-0.02 (0.13)	-0.13 (0.19)	0.37* (0.18)
복지정책	-0.08 (0.09)	-0.28 (0.14)	-0.2 (0.20)	0.32 (0.19)
정치개혁	-0.31*** (0.08)	-0.34* (0.14)	-0.23 (0.19)	-0.16 (0.20)
<i>대립이슈</i>				
한미FTA 재협상	0.28* (0.12)	0.13 (0.19)	0.64* (0.30)	-0.33 (0.29)
학교 체벌 허용	0.08 (0.11)	0.11 (0.18)	0.18 (0.27)	-0.15 (0.22)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허용	-0.01 (0.09)	0.02 (0.15)	0.28 (0.22)	-0.09 (0.20)
한미동맹관계 강화	-0.05 (0.13)	-0.03 (0.21)	-0.22 (0.32)	0.34 (0.29)
비정규직 노동자 기업 자율로 해결	0.13 (0.11)	-0.37* (0.19)	0.33 (0.26)	0.85*** (0.24)
집값 안정 정책 강화	0.12 (0.10)	-0.04 (0.17)	-0.13 (0.25)	0.39 (0.21)
사형제 폐지	-0.09 (0.10)	-0.01 (0.15)	-0.22 (0.23)	-0.03 (0.21)
집회 및 시위 자유 보장	0.36** (0.12)	0.61** (0.20)	0.11 (0.30)	0.26 (0.28)
일본과 경제, 군사 협력 축소	-0.14 (0.10)	-0.35* (0.16)	-0.04 (0.25)	0.34 (0.23)
대북지원 지속	0.43*** (0.11)	0.45* (0.19)	0.17 (0.27)	0.24 (0.25)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반대	0.51*** (0.11)	0.65*** (0.17)	0.5 (0.26)	0.65** (0.25)
노사분규 공권력 투입	0.19 (0.11)	0.26 (0.18)	0.17 (0.30)	0.45 (0.24)
특목고를 설치, 우열반 운영	-0.04	-0.3	-0.22	0.21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전체	무당파	새누리당	민주당
동성애자의 권리 법적제도적 보장	(0.10) 0.06	(0.17) 0.18	(0.24) -0.12	(0.23) 0.05
중국과 경제, 군사 협력 확대	(0.10) -0.13	(0.16) -0.55*	(0.25) 0.11	(0.21) 0.27
기업규제 완화	(0.14) 0.25*	(0.24) 0.59**	(0.32) 0.24	(0.29) -0.16
열린고용 실천 기업 세제지원 강화	(0.12) -0.21	(0.19) -0.13	(0.28) -0.48	(0.25) -0.19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예산 투입	(0.14) -0.21	(0.21) -0.25	(0.31) -0.23	(0.29) -0.32
	(0.13)	(0.20)	(0.33)	(0.28)
성별	-0.26 (0.17)	-0.53 (0.28)	0.15 (0.40)	-0.61 (0.38)
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0.58 (0.47)	-0.14 (0.85)	- -	0.69 (1.14)
충청/대전	0.24 (0.28)	0.1 (0.45)	-0.15 (0.61)	0.93* (0.46)
전라/광주	-0.65* (0.31)	-0.64 (0.53)	-1.37 (0.96)	-0.22 (0.49)
경상/울산/대구/부산	0.59** (0.19)	0.60* (0.29)	0.85 (0.48)	0.6 (0.46)
가구소득	-0.06 (0.04)	-0.11 (0.07)	-0.05 (0.09)	0.11 (0.08)
최종학력	-0.41* (0.20)	-0.17 (0.29)	-1.14 (0.66)	-0.53 (0.45)
이념성향	0.29*** (0.05)	0.55*** (0.11)	0.13 (0.10)	0.23* (0.10)
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				
새누리당	2.32*** (0.22)			
민주당	-1.26*** (0.20)			
기타	-0.47 (0.34)			
상수항	-3.84*** (1.12)	-4.14* (1.73)	2.32 (3.16)	-9.46*** (2.87)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전체	무당파	새누리당	민주당
N	1719	483	470	592
Pseudo R2	0.5309	0.3203	0.2181	0.27
Log likelihood	-543.58	-214.55	-108.809	-138.56
$\chi^2(df)$	461.70(34)	108.40(31)	42.09(30)	63.11(31)
Prob > chi2	0	0	0.0703	0.0006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합의이슈 평가 모형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슈평가 모형1	이슈평가 모형2	이슈평가 모형3-1	이슈평가 모형3-2	이슈평가 모형3-3	이슈평가 모형3-4
분석대상	전체	전체	무당파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홍준표	-0.38*** (0.11)					
안철수	-0.31*** (0.08)					
유승민	-1.11*** (0.10)					
심상정	-1.33*** (0.09)					
경제성장	0.05*** (0.01)	0.04*** (0.01)	0.04** (0.01)	0.03 (0.02)	0.08* (0.04)	0.05* (0.02)
복지확대	0.03*** (0.01)	0.02* (0.01)	0.04* (0.02)	0.02 (0.02)	-0.05 (0.04)	0.01 (0.02)
일자리창출	0.04*** (0.01)	0.04*** (0.01)	0.05*** (0.01)	0.07** (0.02)	0.03 (0.04)	0.04 (0.02)
교육정책	0.03*** (0.01)	0.02** (0.01)	0.02 (0.01)	0.03 (0.02)	0.05 (0.04)	0.03 (0.02)
통일안보	0.05*** (0.01)	0.05*** (0.01)	0.05*** (0.01)	0.02 (0.02)	0.06 (0.04)	0.02 (0.02)
경찰치안	0.03*** (0.01)	0.03** (0.01)	0.04* (0.02)	0.02 (0.02)	-0.01 (0.04)	0.05* (0.02)
문화산업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1 (0.05)	0.05 (0.03)
보건의료	0.03*** (0.01)	0.02* (0.01)	0.01 (0.02)	0.02 (0.02)	0.01 (0.05)	0.01 (0.03)
외교국제	0.05*** (0.01)	0.04*** (0.01)	0.05** (0.02)	0.06** (0.02)	0.09 (0.05)	0.01 (0.02)
부패척결	0.06*** (0.01)	0.05*** (0.01)	0.05*** (0.01)	0.05** (0.02)	0.02 (0.03)	0.07*** (0.02)
홍준표						
성별		0.01 (0.25)	0.16 (0.37)	-1.23 (0.93)		0.47 (0.66)
연령		0.03* (0.01)	0.03 (0.02)	-0.01 (0.04)		-0.02 (0.03)
가구소득		-0.03 (0.05)	0.04 (0.08)	0.03 (0.18)		-0.2 (0.13)
최종학력		0.01 (0.21)	-0.17 (0.32)	0.44 (0.73)		0.27 (0.52)
이념성향		0.57*** (0.09)	0.72*** (0.15)	0.82** (0.30)	0.15 (0.21)	0.48* (0.22)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이슈평가 모형1	이슈평가 모형2	이슈평가 모형3-1	이슈평가 모형3-2	이슈평가 모형3-3	이슈평가 모형3-4
분석대상	전체	전체	무당파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i>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i>						
강원/제주		0.68 (0.63)	0.55 (0.94)	-10.11 (1061.19)		1.02 (1.61)
충청/대전		-0.14 (0.46)	-0.73 (0.73)	0.57 (1.40)		-0.35 (1.29)
전라/광주		-0.29 (0.55)	0.2 (0.75)	-10.81 (498.56)		-1.97 (1.30)
경상/울산 /대구/부산		0.55* (0.27)	0.58 (0.40)	0.57 (0.95)		-0.23 (0.75)
<i>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i>						
민주당		-2.55*** (0.45)				
자유한국당		0.67 (0.42)				
국민의당		0.03 (0.35)				
바른정당		-0.28 (0.51)				
정의당		-2.15* (1.04)				
상수항		-4.51*** (1.14)	-4.96** (1.76)	-7.97 (4.12)	-0.24 (1.37)	-1.32 (2.70)
<i>안철수</i>						
성별		-0.28 (0.17)	-0.17 (0.28)	-1.03* (0.42)		0.15 (0.37)
연령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2)
가구소득		-0.09* (0.04)	-0.03 (0.06)	-0.19 (0.11)		-0.27** (0.08)
최종학력		0.1 (0.15)	0.25 (0.25)	-0.24 (0.38)		0.39 (0.32)
이념성향		0.23*** (0.06)	0.37*** (0.11)	0.13 (0.13)	0.25 (0.29)	0.15 (0.12)
<i>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i>						
강원/제주		0.85* (0.39)	1.34* (0.58)	1.06 (1.14)		1.41 (1.23)
충청/대전		-0.06 (0.28)	-0.59 (0.53)	0.45 (0.55)		-0.63 (0.59)
전라/광주		-0.5 (0.30)	-0.98 (0.60)	0.43 (0.63)		-0.97 (0.50)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이슈평가 모형1	이슈평가 모형2	이슈평가 모형3-1	이슈평가 모형3-2	이슈평가 모형3-3	이슈평가 모형3-4
분석대상	전체	전체	무당파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경상/울산 /대구/부산		0.13 (0.20)	0.49 (0.32)	-0.02 (0.54)		-0.15 (0.48)
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						
민주당		-1.87*** (0.24)				
자유한국당		-0.78 (0.48)				
국민의당		1.26*** (0.22)				
바른정당		0.38 (0.38)				
정의당		-0.92** (0.34)				
상수항		-1.05 (0.74)	-2.68* (1.23)	-0.92 (1.89)	-2.58 (1.98)	1.25 (1.70)
유승민						
성별		-0.05 (0.22)	0.02 (0.38)	-0.17 (0.45)		-0.24 (0.61)
연령		-0.03*** (0.01)	-0.01 (0.02)	-0.06* (0.02)		-0.03 (0.03)
가구소득		-0.05 (0.05)	0.02 (0.09)	-0.09 (0.11)		-0.36* (0.14)
최종학력		0.09 (0.19)	-0.12 (0.35)	-0.33 (0.39)		1.12* (0.54)
이념성향		0.41*** (0.07)	0.56*** (0.15)	0.50*** (0.15)	-0.15 (0.27)	0.02 (0.20)
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0.34 (0.54)	-0.87 (1.23)	1.22 (1.02)		1.53 (1.57)
충청/대전		0.01 (0.36)	-0.65 (0.72)	-0.5 (0.83)		-0.86 (1.01)
전라/광주		-0.67 (0.49)	-14.83 (899.24)	0.11 (0.82)		-1.1 (1.20)
경상/울산 /대구/부산		0.17 (0.24)	0.42 (0.41)	0.12 (0.53)		0.02 (0.74)
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						
민주당		-1.16*** (0.29)				
자유한국당		-0.84 (0.59)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이슈평가 모형1	이슈평가 모형2	이슈평가 모형3-1	이슈평가 모형3-2	이슈평가 모형3-3	이슈평가 모형3-4
분석대상	전체	전체	무당파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0.23 (0.35)				
바른정당		1.44*** (0.40)				
정의당		-0.16 (0.38)				
상수항		-1.51 (0.94)	-2.88 (1.71)	-0.21 (1.92)	-0.6 (1.65)	-1.44 (2.63)
심상정						
성별		-0.32 (0.21)	-0.42 (0.37)	-1.00* (0.43)		-0.97 (0.83)
연령		-0.02* (0.01)	-0.05* (0.02)	-0.01 (0.02)		-0.09* (0.04)
가구소득		-0.08 (0.05)	-0.07 (0.08)	-0.13 (0.10)		-0.47 (0.25)
최종학력		-0.04 (0.19)	0.01 (0.33)	-0.12 (0.39)		0.79 (0.75)
이념성향		0 (0.06)	0.24 (0.13)	0.15 (0.13)	0.32 (0.65)	-0.19 (0.26)
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0.18 (0.50)	0.86 (0.72)	-0.18 (1.17)		-13.22 (1786.33)
충청/대전		0 (0.33)	0.02 (0.53)	0.44 (0.54)		-15.24 (911.41)
전라/광주		-1.56** (0.51)	-2.16 (1.17)	-1.26 (1.07)		-0.46 (1.32)
경상/울산 /대구/부산		-0.39 (0.26)	-0.13 (0.45)	-0.4 (0.56)		-0.54 (0.93)
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						
민주당		-1.64*** (0.27)				
자유한국당		-1.36 (1.07)				
국민의당		-0.32 (0.40)				
바른정당		-0.22 (0.72)				
정의당		0.34 (0.27)				
상수항		0.99	0.54	-0.78	-4.59	3.21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이슈평가 모형1	이슈평가 모형2	이슈평가 모형3-1	이슈평가 모형3-2	이슈평가 모형3-3	이슈평가 모형3-4
분석대상	전체	전체	무당파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0.90)	(1.47)	(1.90)	(4.63)	(3.43)
observations	11968	9845	2545	3875	600	1355
cases		1969	509	775	120	271
p-value	0	0	0	0	0.01	0
log likelihood	-2173.28	-1429.8	-523.21	-291.15	-73.08	-228.73
$\chi^2(df)$	3472.38(14)	889.32(66)	220.35(46)	130.28(46)	28.63(14)	95.22(46)

***p<.001, **p<.01, *p<.05,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이다.

이슈평가 모형5: 전체

	회귀계수	표준오차
<i>이슈평가점수</i>		
경제성장	0.04***	(0.01)
복지확대	0.02*	(0.01)
일자리창출	0.04***	(0.01)
교육정책	0.03**	(0.01)
통일안보	0.04***	(0.01)
경찰치안	0.03**	(0.01)
문화산업 활성화	0.02	(0.01)
보건의료	0.02	(0.01)
외교국제교류	0.04***	(0.01)
부패척결	0.05***	(0.01)
<i>홍준표</i>		
성별	-0.05	(0.28)
연령	0.03*	(0.01)
가구소득	-0.06	(0.06)
최종학력	0.07	(0.22)
이념성향	0.48***	(0.10)
<i>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i>		
강원/제주	0.61	(0.67)
충청/대전	-0.14	(0.52)
전라/광주	-0.18	(0.58)
경상/울산/대구/부산	0.49	(0.29)
<i>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i>		
민주당	-2.15***	(0.48)
자유한국당	0.45	(0.45)
국민의당	0.02	(0.38)
바른정당	-0.6	(0.54)
정의당	-1.88	(1.09)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0.25	(0.18)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	0.19	(0.16)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0.27	(0.24)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	0.01	(0.19)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 신축을 확대	0.07	(0.20)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보장	0.1	(0.20)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경제, 군사 협력 축소	0.17	(0.18)
남북긴장완화를 위해 대북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0.01	(0.19)
원자력 발전소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0.39*	(0.20)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	0.06	(0.20)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회귀계수	표준오차
특목고 신규 설립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 증대	0.09	(0.19)
다른 국가보다는 중국과 경제, 군사 협력 확대	-0.03	(0.20)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0.48*	(0.21)
열린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0.27	(0.22)
반값등록금 정책 대학 전체로 확대 적용	0.15	(0.20)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	0.42*	(0.20)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0.37	(0.21)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0.55**	(0.20)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0.39	(0.22)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0.11	(0.22)
상수항	-5.47*	(2.13)
<hr/>		
안철수		
성별	-0.21	(0.18)
연령	0.01	(0.01)
가구소득	-0.10*	(0.04)
최종학력	0.1	(0.15)
이념성향	0.18**	(0.06)
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0.77	(0.41)
충청/대전	-0.02	(0.29)
전라/광주	-0.44	(0.31)
경상/울산/대구/부산	0.11	(0.20)
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		
민주당	-1.77***	(0.25)
자유한국당	-0.97	(0.50)
국민의당	1.26***	(0.23)
바른정당	0.21	(0.39)
정의당	-0.64	(0.36)
학교에서 차별이 허용되어야 한다	0.13	(0.11)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	-0.05	(0.10)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0.09	(0.16)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	0.33**	(0.13)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 신축을 확대	-0.11	(0.12)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보장	0.32*	(0.14)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경제, 군사 협력 축소	-0.06	(0.12)
남북긴장완화를 위해 대북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0.15	(0.13)
원자력 발전소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0.21	(0.12)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	0.09	(0.13)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회귀계수	표준오차
특목고 신규 설립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 증대	-0.07	(0.13)
다른 국가보다는 중국과 경제, 군사 협력 확대	0.05	(0.13)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0.11	(0.13)
열린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0.18	(0.14)
반값등록금 정책 대학 전체로 확대 적용	-0.07	(0.13)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	0.26*	(0.1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0.01	(0.13)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0.45***	(0.13)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0.09	(0.15)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0.06	(0.15)
상수항	-0.63	(1.30)
<hr/>		
유승민		
성별	-0.06	(0.24)
연령	-0.03**	(0.01)
가구소득	-0.05	(0.05)
최종학력	0.09	(0.19)
이념성향	0.41***	(0.08)
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0.34	(0.55)
충청/대전	0.07	(0.38)
전라/광주	-0.65	(0.50)
경상/울산/대구/부산	0.13	(0.25)
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		
민주당	-1.07***	(0.30)
자유한국당	-1.03	(0.61)
국민의당	0.2	(0.36)
바른정당	1.37**	(0.42)
정의당	0.07	(0.41)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0.42**	(0.15)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	0.05	(0.13)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0.15	(0.20)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	-0.21	(0.17)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 신축을 확대	-0.2	(0.16)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보장	0.24	(0.18)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경제, 군사 협력 축소	-0.24	(0.15)
남북긴장완화를 위해 대북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0.17	(0.16)
원자력 발전소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0.01	(0.16)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	0.16	(0.16)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회귀계수	표준오차
특목고 신규 설립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 증대	-0.34*	(0.17)
다른 국가보다는 중국과 경제, 군사 협력 확대	0.16	(0.17)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0.23	(0.16)
열린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0.29	(0.19)
반값등록금 정책 대학 전체로 확대 적용	-0.42**	(0.16)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	0.02	(0.16)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0.05	(0.17)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0.26	(0.17)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0.18	(0.20)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0.13	(0.19)
상수향	-1.13	(1.65)
<hr/>		
심상정		
성별	-0.28	(0.22)
연령	-0.02*	(0.01)
가구소득	-0.06	(0.05)
최종학력	-0.06	(0.20)
이념성향	0.01	(0.07)
거주지역(기준=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0.14	(0.51)
충청/대전	-0.04	(0.34)
전라/광주	-1.61**	(0.52)
경상/울산/대구/부산	-0.42	(0.26)
정당일체감(기준=무당파)		
민주당	-1.70***	(0.28)
자유한국당	-1.31	(1.08)
국민의당	-0.41	(0.41)
바른정당	-0.26	(0.71)
정의당	0.26	(0.30)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0.1	(0.13)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	-0.11	(0.12)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0.35	(0.18)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	-0.11	(0.16)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 신축을 확대	0.18	(0.15)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보장	0.07	(0.19)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경제, 군사 협력 축소	0.05	(0.15)
남북긴장완화를 위해 대북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0.05	(0.15)
원자력 발전소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0.06	(0.15)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	0.1	(0.15)
<hr/>		
다음 장에서 계속		

(이전 장에서 계속)

	회귀계수	표준오차
특목고 신규 설립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 증대	-0.02	(0.16)
다른 국가보다는 중국과 경제, 군사 협력 확대	-0.17	(0.16)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0.28	(0.15)
열린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0	(0.16)
반값등록금 정책 대학 전체로 확대 적용	-0.12	(0.15)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	0.12	(0.15)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0.3	(0.16)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0.31	(0.17)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0.22	(0.21)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0.08	(0.20)
상수항	0.39	(1.61)
obs	9845	
cases	1969	
p-value	0	
log likelihood	-1355.99	
$\chi^2(df)$	880(146)	

***p<.001, **p<.01, *p<.05

[설문지]

2012년 대통령선거 온라인 패널 조사

제1차 조사

4.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당, 정치인들 및 귀하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은 매우 진보를 나타내며, 10은 매우 보수를 나타냅니다.

	진 보					중 도					보 수
본 인	0	1	2	3	4	5	6	7	8	9	10

8. 본인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은 다음 중 어느 정당입니까?

① 새누리당 ▶ 문8-1 ② 민주통합당 ▶ 문8-1 ③ 통합진보당 ▶ 문8-1 ④
기타 ▶ 문8-1 ⑤ 없음 ▶ 문8-2

8-1. 해당 정당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함 ② 약간 좋아함 ③ 싫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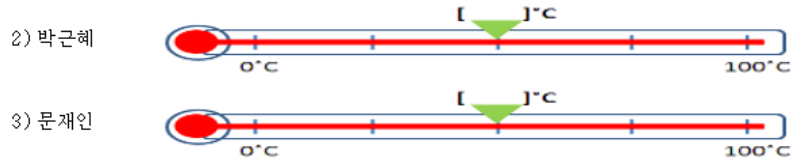
8-2. 다음 정당 중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통합진보당 ④ 기타 ⑤ 없음

9.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해당 온도계의 온도로 표시해주십시오. (녹색 화살표를 움직이면 숫자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16. 귀하택의 한 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나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월급, 상

평가 예	0°C	30°C	50°C	70°C	100°C
	대단히 부정적	어느 정도 부정적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어느 정도 호의적	대단히 호의적



여금, 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899만원 ⑩ 900-999만원 ⑪ 1,000만원 이상 ⑫ 잘 모름

18.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 ④ 대졸이상

23.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사안들 중에서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1순위에서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경제성장	1	1	1
후보들의 역사인식	2	2	2
부패척결	3	3	3
일자리 창출	4	4	4
지역균형발전	5	5	5
복지정책	6	6	6
교육정책	7	7	7
대북정책	8	8	8
정치개혁	9	9	9
기타(직접 기입)			

24. 다음 각 견해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도를 각각 표시해주십시오.

	전적으로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	1	2	3	4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한다	1	2	3	4
학교에서 차별이 허용되어야 한다	1	2	3	4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	1	2	3	4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1	2	3	4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1	2	3	4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1	2	3	4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1	2	3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1	2	3	4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경제, 군사 등에 관한 협력을 줄여야한다	1	2	3	4
남북긴장완화를 위해 대북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1	2	3	4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된다	1	2	3	4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	1	2	3	4
특목고를 설치하거나 우열반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1	2	3	4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	1	2	3	4
중국과 경제, 군사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1	2	3	4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	2	3	4
학력차별 없는 열린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1	2	3	4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1	2	3	4

제2차 조사

3A. 귀하께서 가장 가깝게 느끼시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통합진보당 ④ 진보정의당 ⑤ 기타 정당 ()
⑥ 없음

3B.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중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3B-1) ② 없다 (▶ 문 3B-3) ③ 잘 모름 (▶ 문3B-3)

3B-1.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통합진보당 ④ 진보정의당 ⑤ 기타 정당 ()

3B-2. 귀하께서는 [문3B-1. 선택정당 이름]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십니까?

- ① 상당히 가깝게 느낀다 ② 어느 정도 가깝게 느낀다

3B-3.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B-4 ② 없다 ▶ 문 4

3B-4.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통합진보당 ④ 진보정의당 ⑤ 기타 정당 ()

18.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사안들 중에서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1순위에서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경제성장	1	1	1
후보들의 역사인식	2	2	2
부패척결	3	3	3
일자리 창출	4	4	4
지역균형발전	5	5	5
복지정책	6	6	6
교육정책	7	7	7
대북정책	8	8	8
정치개혁	9	9	9
기타(직접 기입)			

제3차 조사

4.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① 박근혜 ② 문재인 ③ 박종선 ④ 김소연 ⑤ 강지원 ⑥ 김순자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온라인 패널 조사

제1차 조사

13. 다음에 제시된 국가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중요하지 않다					보 통	중요하다→				
경제성장	0	1	2	3	4	5	6	7	8	9	10
복지정책	0	1	2	3	4	5	6	7	8	9	10
일자리 창출	0	1	2	3	4	5	6	7	8	9	10
교육정책	0	1	2	3	4	5	6	7	8	9	10
경찰/치안	0	1	2	3	4	5	6	7	8	9	10
문화산업	0	1	2	3	4	5	6	7	8	9	10
보건의료	0	1	2	3	4	5	6	7	8	9	10
외교/ 국제교류	0	1	2	3	4	5	6	7	8	9	10

제2차 조사

17-1. 다음은 이번 총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17-2. 다음은 이번 총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17-3. 다음은 이번 총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국민의당 후보들이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	보통	조금 강조했다	매우 강조했다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경찰/치안						
문화산업						
보건의료						
외교/국제교류						

2017년 대통령선거 온라인 패널 조사

제1차 조사

4A. 귀하께서 가장 가깝게 느끼시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① 더불어민주당 ② 자유한국당 ③ 국민의당 ④ 바른정당 ⑤ 정의당 ⑥ 기타 정당 () ⑦ 없음

4B.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중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4B-1 ② 없다 ▶ 문4B-3 ③ 잘 모름 ▶ 문4B-3

4B-1.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① 더불어민주당 ② 자유한국당 ③ 국민의당 ④ 바른정당 ⑤ 정의당 ⑥ 기

타 정당 ()

4B-2. 귀하께서는 [문4B-1. 선택정당 이름]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십니까?

- ① 상당히 가깝게 느낀다 ② 어느 정도 가깝게 느낀다

4B-3.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4B-4 ② 없다

4B-4.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① 더불어민주당 ② 자유한국당 ③ 국민의당 ④ 바른정당 ⑤ 정의당 ⑥ 기

타 정당 ()

6.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해당 온도계의 온도로 표시해주십시오. (화살표를 움직이면 숫자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평가 예	0°C	30°C	50°C	70°C	100°C
	대단히 부정적	어느 정도 부정적	호의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어느 정도 호의적	대단히 호의적

문재인	온도계그림
홍준표	온도계그림
안철수	온도계그림
유승민	온도계그림
심상정	온도계그림

15-3.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귀하께서는 귀하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은 매우 진보를 나타내며, 10은 매우 보수를 나타냅니다.

	진 보					중 도					보 수
본 인	0	1	2	3	4	5	6	7	8	9	10

16. 다음에 제시된 국가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중요하지 않다					보 통	중요하다→				
경제성장	0	1	2	3	4	5	6	7	8	9	10
복지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일자리 창출	0	1	2	3	4	5	6	7	8	9	10
교육정책	0	1	2	3	4	5	6	7	8	9	10
통일/안보	0	1	2	3	4	5	6	7	8	9	10
경찰/치안	0	1	2	3	4	5	6	7	8	9	10
문화산업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보건의료	0	1	2	3	4	5	6	7	8	9	10
외교/ 국제교류	0	1	2	3	4	5	6	7	8	9	10
부패척결	0	1	2	3	4	5	6	7	8	9	10

30.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1) 무학 2) 초등(국민)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대학교 졸업(2 4년제) 6) 대학원 졸업(석/박사) 7) 기타()

제2차 조사

5. 귀하께서는 다음 후보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다?

① 문재인 ② 홍준표 ③ 안철수 ④ 유승민 ⑤ 심상정 ⑥ 기타후보()

18. 다음에 제시된 국가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중요하지 않다					보 통	중요하다→				
경제성장	0	1	2	3	4	5	6	7	8	9	10
복지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일자리 창출	0	1	2	3	4	5	6	7	8	9	10
교육정책	0	1	2	3	4	5	6	7	8	9	10
통일/안보	0	1	2	3	4	5	6	7	8	9	10
경찰/치안	0	1	2	3	4	5	6	7	8	9	10
문화산업 활성화	0	1	2	3	4	5	6	7	8	9	10
보건의료	0	1	2	3	4	5	6	7	8	9	10
외교/ 국제교류	0	1	2	3	4	5	6	7	8	9	10
부패척결	0	1	2	3	4	5	6	7	8	9	10
여성정	0	1	2	3	4	5	6	7	8	9	10

19-1. 다음은 이번 대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19-2. 다음은 이번 대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19-3. 다음은 이번 대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19-4. 다음은 이번 대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19-5. 다음은 이번 대선에서 부각된 이슈들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다음의 이슈들을 얼마나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	보통	조금 강조했다	매우 강조했다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경제성장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통일/안보						
경찰/치안						
문화산업 활성화						
보건의료						
외교/국제교류						
부패척결						
여성정책						

28.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중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28-1 ② 없다 ▶ 문28-3 ③ 잘 모르겠다 ▶ 문28-3

28-1.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① 더불어민주당 ② 자유한국당 ③ 국민의당 ④ 바른정당 ⑤ 정의당 ⑥ 기타 정당 ()

28-2. 귀하께서는 [문28-1. 선택정당 이름]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십니까?

① 상당히 가깝게 느낀다 ▶ 문29 ② 어느 정도 가깝게 느낀다 ▶ 문29

28-3.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8-4 ② 없다 ▶ 문29

28-4. 그렇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① 더불어민주당 ② 자유한국당 ③ 국민의당 ④ 바른정당 ⑤ 정의당 ⑥ 기
타 정당 ()

Abstract

Valence Issues in Elections: Issue Competition in South Korea, 2012-2017

Jin Mi So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valence issues in presidential elections by analyzing pledges and survey data. To answer why candidates compete for pledges, I analyze elections in terms of valence issues. The results show that valence issues were salient in the recent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Major political parties vied for short-term issue ownership, and voters voted based on valence issues.

Although various issues and pledges rise in the elections, previous voting behavior research in Korea has tended to underestimate their impact. In this study, I point out that this is because most of the studies focus on position issues in which individuals' positions vary, and valence issues are disregarded. This study argues that the issues salient in elections include issues that everybody agrees with it. These are *valence issues*. Issues focused on policy goals and values. According to Chapter Four of this thesis, valence issue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welfare policies, were important in the recent elections.

Therefore, I argue that leaving out valence issues in a voting behavior study leads to underestimating those issues' impact. This study suggests a new issue voting model, *the valence issue evaluation model*, to examine how valence issues work in elections. By using this model, I analyzed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Korea from 2012–2017.

The results show that in both elections, valence issues such as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expanding social welfare, and eradicating corruption issues were salient. Candidates competed to own these issues. Also, some specific issues rose significantly in the election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economic democracy* was the most important one. The results from the survey data show that Park Geun-Hye, who made an early effort to own the economic democracy issue, succeeded in doing so. In the 2017 election, fighting corruption was the most important issue. At this time, the Democratic candidate, Moon Jae-In, owned the issue. Furthermore, Moon emphasized the job-creation issue and owned the issue. Other candidates, such as Hong, received a favorable evaluation in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security-related pledges.

After verifying that valence issues are salient in elections, I examined how voters perceive candidates' issue competition and build their preferences on these issues.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persuasion and projection in spatial models, I found that party identification influenced voters' attitudes on issues in the short and long terms, but its effect was limited. Evidence showed that party identification indirectly influenced issue voting; it impacted voters' issue importance, while issue importance influenced the evaluation of candidates' issue ownership. That is, party identification affected valence issue voting through issue importance. However, the evaluation of issue ownership only affected very few cases. It had little impact on issue importance. Meanwhile, as independent voters were free from the political parties' influence, they inferred candidates' issue ownership from election campaigns and party performances.

Lastly, in Chapter Six, I examined the electorates' vote choices in elections using *the valence issue evaluat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valence issues significantly conditioned voters' choices. Evidence showed that voters chose candidates they thought emphasized their preferred issues. For instance, a voter concerned with economic growth voted for a candidate who owned the issue. In this way, economic growth, anti-corruption policies,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were significant in the 2012 election. In the 2017 election, economic growth, anti-corruption policies, expanding social welfare, and policies on national security and job creation influenced vote choice.

In this study, the results empirically verify that the valence issu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lections. The results imply that if only position is-

sues are analyzed, it is possible to underestimate the issue-competition and issue-voting in elections. This study also shows that valence and position issues are affected differently by the party identifications and that the two types of issues vary in the voting process. Therefore, a model capable of analyzing this is needed, a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new model that can analyze the dynamics of candidates' issue competitions and valence issue voting in elections.